

정책연구
2019-18

여성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정책적 개선 방안

김근주 · 고영우 · 김영아 · 윤자영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여성 자영업 노동시장과 정책적 접근법	(김근주·고영우) 4
제1절 자영업 대책과 일반 현황	4
1.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기준들	4
2. 자영업 관련 정책과 유형별 분류	10
제2절 여성 노동시장 정책과 자영업자	18
1.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여성과 자영업자	18
2. 여성 자영업 종사자의 주요 대책	19
3.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범위(유형)	25
제3절 여성 노동시장 및 자영업자 변화추이	29
1. 2010년 이후 여성노동시장 변화추이	29
2. 2010년 이후 여성 비임금근로자 변화추이	35
제3장 자영업 부문 여성 종사자 노동공급 및 소득분포	(고영우) 44
제1절 문제제기	44
제2절 선행연구	45

제3절 여성의 자영업 선택요인 분석	50
1. 분석방법	51
2. 분석자료	52
3. 분석결과	55
제4절 비임금근로 부문의 소득분포 분석	61
1. 분석방법: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62
2. 분석자료	63
3. 분석결과	67
제5절 소 결	69

제4장 여성 자영업 종사자들의 이행 분석: 생애주기 관점으로 (김영아) 75

제1절 연구의 배경	75
제2절 선행연구	76
1. 여성의 생애주기와 자영업 진입	76
2. 여성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들의 이행	79
제3절 연구방법	80
1. 분석자료 및 방법론	80
2. 변수 측정	84
제4절 분석결과	89
1. 자영업으로의 진입	89
2. 자영업에서 이탈	93
3.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진입	96
4.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이탈	99
제5절 소 결	102

제5장 여성 자영업 종사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실태	
..... (윤자영)	108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08
제2절 선행 연구	110
제3절 연구 자료와 방법	113
제4절 연구 결과	114
1.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규모와 특성	114
2. 근로실태	126
3. 사회적 보호 실태	139
제5절 소 결	143
제6장 결 론	
..... (김근주·윤자영)	146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46
제2절 정책적 검토 사항	149
참고문헌	151

표 목 차

<표 2- 1> 소상공인·자영업·자영업자 규모	7
<표 2- 2> 성/종사상지위별 취업자(2019. 8)	8
<표 2- 3>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9
<표 2- 4> 개인사업자 수(2018)	10
<표 2- 5> 생활밀착형 업종별 규제완화 및 지원	12
<표 2- 6>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 추진	15
<표 2- 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금액	16
<표 2- 8> 중앙부처소관 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정책	17
<표 2- 9>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2019)	20
<표 2-10> 여성 창업보육센터 지원	21
<표 2-11> 여성 기업확인서 발급	21
<표 2-12> 여성취업자의 직종분포 추이(2013~2018)	31
<표 2-13>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연령분포	37
<표 2-14>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학력분포	39
<표 2-15>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혼인상태 분포	39
<표 2-16>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가구주와의 관계 분포	40
<표 2-17>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산업 분포	42
<표 2-18>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직업 분포	43
<표 3- 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설명	53
<표 3- 2>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 비자영업자 대비 분석결과	56
<표 3- 3>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 임금근로자 대비 분석결과	57
<표 3- 4> 다항로짓모형 분석결과: 미취업자 대비 분석결과	59
<표 3- 5> 다항로짓모형 분석결과: 임금근로자 대비 분석결과	60

<표 3- 6>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임금근로자 vs. 비임금근로자	67
<표 3- 7>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분포 차이	68
<표 4- 1> 여성별 episodes 분포: 이행분석 사용 관측치	83
<표 4- 2> 경제활동상태 구분	84
<표 4- 3> 변수 정의	85
<표 4- 4> 개인-기간 관측치의 분포	85
<표 4- 5> 4가지 자영업으로의 이행 OR	91
<표 4- 6> 자영업에서 이탈 OR	94
<표 4- 7> 무급가족종사자로 진입 OR	97
<표 4- 8>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이탈 OR	100
<표 5- 1> 비임금근로자 성별 분포(2018)	118
<표 5- 2> 성별 비임금근로자 가구주와의 관계 분포(2018)	119
<표 5- 3> 성별 비임금근로자 학력 분포(2018)	120
<표 5- 4> 성별 비임금근로자 연령 분포(2018)	121
<표 5- 5> 성별 비임금근로자 산업 분포(2018)	122
<표 5- 6> 성별 비임금근로자 직종 분포(2018)	125
<표 5- 7> 성별 비임금근로자 사업장 규모 분포(2018)	126
<표 5- 8> 성별 비임금근로자 실제 일한 시간 분포(2018)	127
<표 5- 9> 성별 비임금근로자 평균 주당 근로시간	128
<표 5-10> 성별 비임금근로자 근로시간 결정 요인	130
<표 5-11> 성별 비임금근로자 평균 종사 기간	133
<표 5-12> 성별 비임금근로자 향후 일자리 계획(2018)	134
<표 5-13> 성별 비임금근로자 일자리 그만두려는 이유(2018)	136
<표 5-14> 비취업자 이전 직장 종사상지위(2018)	137
<표 5-15> 이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2018)	138
<표 5-16> 성별 자영업자 국민연금가입/수혜여부(2018)	139

<표 5-17> 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 결정 요인, 프로빗 모형 추정
한계 효과(2018) 141

그림목차

[그림 2- 1]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 개념 비교	7
[그림 2- 2] 자영업자 관련 정책 추진방향	11
[그림 2- 3]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11
[그림 2- 4] 자영업 복지와 삶의 질 개선	12
[그림 2- 5]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	25
[그림 2- 6]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2010~2018)	29
[그림 2- 7] 여성 취업자의 산업 분포 추이(2013~2018)	30
[그림 2- 8]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분포 추이(2010 vs. 2018)	32
[그림 2- 9] 여성 취업자의 연령 분포 추이(2010~2018)	33
[그림 2-10] 여성 취업자의 학력 분포 추이(2010~2018)	34
[그림 2-1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2018)	34
[그림 2-12]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분포 추이(2010~2018)	35
[그림 2-13] 임금·비임금근로자 중 여성비율 추이(2010~2018)	36
[그림 3- 1]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	65
[그림 3- 2] 종사상지위별 소득분포	66
[그림 4- 1] 5가지 고용형태들 간의 14가지 이행	81
[그림 4- 2] 여성 경제활동 변화 추이, 연도별 (person-year observations)	87
[그림 4- 3]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비중 추이	87
[그림 5- 1] 취업자 종사상지위 규모 추이	115
[그림 5- 2]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추이	115

[그림 5- 3] 성별 종사상지위 규모 추이(1989~2018)	116
[그림 5- 4] 성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추이	117

요 약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그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관련 연구의 측면에 있어서도, 임금 근로자와 다름없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특히 영세 자영업자 보호 관련 주제가 최근에야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은 취약한 노동 시장적 지위와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남성은 보통 자영업자가 되지만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다수는 여성으로서 비공식적으로 사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간주될 뿐 온전한 근로자로서 대우와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이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남성 자영업자보다 훨씬 소규모인 영세 사업체를 이끌고 있다. 임금 노동시장에서 겪는 여성들의 일자리 불안정성과 빈곤은 비임금 노동시장의 여성들에게도 예외없이 만성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자영업 진입은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사건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여성화는 생애주기에 따라 임금근로에서 이탈하여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한국 여성의 고용시장 특성을 잘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에서 여성이 동일한 생애주기 사건을 겪을 때 시간제 근로, 일시적인 일자리 변동, 다른 비전형적 형태의 임금근로자로서 지위를 갖는 것과 구별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

다.

여성이 어떤 경우에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를 선택하고, 그 일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며, 자영업을 그만 둔 이후에는 어떤 직업경험을 갖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자영업자의 생존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근로 실태의 취약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 위에서 자영업자 대책의 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현행 여성 자영업자 대책의 현황

최근 정부는 다양한 자영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영업관련 정책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①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상품권의 발행, ②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육성, ③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확보, ④ 0%대 수수료를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⑥ 부실채권 조기 정리 및 폐업지원기능 강화, 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개선 추진, ⑧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이 있다.

한편 정부정책에서 나타난 노동시장 정책들도, 대상자·분야별로 구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지원(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고용보호 사각지대 해소’라는 큰 틀 속에 지속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한 대체인력지원서비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및 급여 지원, 직장어린이집과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방안 등이 추진 중이다. 추가적으로 시간선택제 고용 및 전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부정책들은 ‘고용’이라는

범주, 즉 근로자 중심의 정책들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두 영역이 교차하는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간접적인 지원 또는 보호 확대 방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만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최근에는 여성 자영업자(경영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경영지원 및 공공구매 의무화 지원, 업종 및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 지원사업 등도 마련되는 등 독자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엽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도,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대책이 구성되고 있다.

3. 여성 노동시장 및 자영업자 변화 추이

한국 경제의 산업화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 경기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1963~2018년의 기간 동안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8.4%에서 73.7%로 감소한 반면, 여성은 37.0%에서 52.9%로 증가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의 증가세는 201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고용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것도 역할을 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에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고용주,

임금근로자,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당수의 저학력자는 세대효과(cohort effect)가 반영된 고연령 집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연령·저학력층이 상대적으로 비임금근로자 집단 내에 많이 분포될 것인바, 여성 비임금근로자를 위한 정책 수립 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저학력 경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고착화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되고 있었다. 이는 여성 비임금근로자 내부에서도 다양한 분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를 살펴보았을 때, 전통적으로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18년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문직 종사자에 분포하는 비율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 중에도 사무직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 중심의 열악한 일자리 일변도였다면, 최근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의 일자리로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4. 자영업 부문 여성 종사자 노동공급 및 소득분포

3장에서는 비임금근로 선택에 대한 결정요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비임금근로 선택의 결정요인을 횡단면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어서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내 성별 소득분포의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여성 취업자가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과 거주지역 등이 있었으며, 산업 및 직업 등 일자리 관련 특성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비임금

근로자 내에서 근로형태를 결정하는 데에는 상당히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성 취업자가 무급가족종사자를 선택하는 것에는 혼인상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생활비는 선택확률을 낮추고, 배우자의 월소득은 선택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영업자 선택 구조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여성 비임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 근로형태별로 지원수단 및 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격차가 저소득층에서는 음(-)의 수준이고, 고소득층에서는 양(+)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의 크기는 비임금근로자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분포가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소득분포보다 좌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할 때 가구원 간 근로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일 것인바, 가구 내 근로형태의 조합 및 그에 따른 가구소득총액 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5. 여성 자영업 종사자들의 이행 분석 : 생애주기 관점

한국 여성들의 자영업 부문(무급가족종사자 또는 자영업주) 진입은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사건과 관련이 높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 중의 여성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8월 현재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87%가 여성으로 나타난다. 무급가족종사가 여성화된 고용의 한 형태가 된 것이다. 생애주기에 따라 임금근로에서 이탈(exit)하여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한국 여성고용의 중요한 특성이며, 무급가족종사자의 여성화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다른 OECD 국가 여성들이 생

애주기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 또는 임시직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임금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OECD, 2007).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자본 창업이 경력단절을 가진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재진입(또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하나의 선택)을 위한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기에, 여성 자영업의 생존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경제활동 참여의 한 형태로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자영업주로의 진입이 한국 여성들에게 생애주기상으로 경제활동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인지 종단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20차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 최초 진입 이후부터 추적해온 직업력과 생애주기상의 사건들을 반영하는 가족력이 여성 개인의 자영업 부문(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진입 및 이탈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멀티레베레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실업,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자영업으로의 진입(4가지 이행)과 이탈(4가지 이행), 그리고 임금, 실업,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진입(3가지 이행)과 이탈(3가지 이행) 등 총 14가지 이행을 분석하였다.

가족력과 관련한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결혼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자영업으로의 이행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무급가족종사로 진입하는 데는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인 경우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임금근로의 이행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이는 결혼을 했음에도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이들 자영업 부문이 여성으로 하여금 임금근로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활동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신이 속한 코호트(cohort)의 평균 첫 출산 연령보다 일찍 출산을 한 경험은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본인 노동에 대한 직접적 경제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급가

족종사자 상태에서 자신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발생하는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데에 이른 나이의 출산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는 생애주기 사건으로 인해 줄어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임금근로를 연장하려고 한다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론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존재가 현재 임금근로를 하는 여성들의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행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여성의 비경제활동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는 한국 여성들의 생애주기적 고용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여전히 임금근로 시장에 머물러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선택효과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직업력 또한 중요한 이행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축적된 임금근로 경력은 비경제활동에서 벗어나 무급가족종사자가 될지 자영업자가 될지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축적된 일자리 수가 많은 것이 자영업자로 경제활동 상태에 진입할 경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로 진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길수록 여성 자영업자들은 다시 임금근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무급종사자로의 진입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가족력과 직업력은 여성의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 이행을 결정하는 요인이지만,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상이하다. 이는 여성들이 생애사건을 맞이하기 이전부터 노동시장에서 축적해온 개인의 경력에 따라 자영업 부문 진입과 이탈 가능성이 달라지며, 이탈의 방향성 또한 달라지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 자영업자에게 상용직 근무경력이 임금근로 시장 재진입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로서 과거의 노동시장 경력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또는 종사상 지위 유지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여성 자영업 종사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실태와 정책 과제

최근 자영업자의 근로자성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임금 노동자와 실질적으로 다름없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영업자도 마땅히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 사업에 근로계약 없이 종사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법과 노동시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인 가사사용인과 마찬가지로의 지위로 인해 제도적 사회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정책의 올바른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특수 노동 실태와 사회적 보호 현황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비임금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과 사회적 보호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남성 자영업자 수가 급감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수도 그 이전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했다. 남성 자영업자수와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동반 하락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도 나타나, 가족형 자영업이 경제 위기에 타격을 입을 때 가족 전체의 빈곤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남성과 다른 인적, 일자리 구성을 가진다.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배우자 비중이 93.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남성 무급가족종사자는 미혼 자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독립적인 경제활동의 필요성과 의지가 강한 고학력 청장년층 여성의 자영업 진출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다.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남성보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 비중이 더 높았다.

셋째, 비임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남녀 근로시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가 자영업주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가구주일 때에 비해 배우자일 때 남녀 모두 근로시간이 감소하지만, 감소 정도는 남성 배우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넷째, 여성 비임금 근로자는 남성보다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향이 더 높았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1년 이내 이직자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 비임금 근로자의 규모 대비 이탈자 수가 많아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남성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여성 비임금 근로자 국민연금 미가입/혜택 비중은 다른 변인을 통제하고도 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6.9% 낮았다. 고용주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일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그 가입 확률은 더 낮게 나타났다. 종사 사업장의 영세성이 여성 자영업자의 공적 연금 가입에 더욱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섯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무급가족종사자 보호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거의 같은 수준의 시간과 기간을 무급가족종사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같은 수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지위 보장과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자영업자를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과 체계 속에서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지 않다. 무급가족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무급가족종사자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 이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계약을 통하지 않고도 무급가족종사자가 공식적으로 경제 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무급가족종사자가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의미에서 공식적 고용관계에 놓인 지위를 획득하고 그에 기반한 사회보험 가입이나 혜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 이력과 취업 활동에 기반하여 잠재적 생산 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평가

하고 그에 기반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거나 임금의 손실을 평가하는 경제 및 복지 제도에서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무급가족종사자를 비공식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금 근로로 유도하여 임금 근로자가 갖는 사회적 보호 혜택을 누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무급가족종사자를 임금 근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보험 가입 비용을 초래하지만 사회보험 가입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던 가족 구성원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 형태를 변경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급가족종사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8시간 미만 무급종사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하고 실제 일한 시간을 조사하지 않는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18시간 미만 기준없이 1시간만 일해도 근로자로 정의하는 것을 고려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일은 통계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고 있다.

7. 분석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여성 취업자의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 선택과 소득 결정요인, 노동 이동과 사회적 보호 실태를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취업자가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거주 지역이었다. 산업 및 직업 등 일자리 관련 특성은 연령과 거주지역의 통계적 유의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의 여성 취업자가 임금 근로가 아닌 비임금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다. 여성 취업자가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를 선택하는 것에는 연령과 거주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무급가족종사자를 선택하는

데는 혼인상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와 배우자 월소득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선택에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월평균 생활비는 자영업자의 선택확률을 높이고 무급가족종사자의 선택 확률을 낮췄고, 배우자의 월소득은 자영업자의 선택확률을 낮추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선택 확률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임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 근로형태별로 지원수단 및 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무조건분위 회귀분석을 통해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 차이를 밝힌 결과,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격차가 저소득층에서는 음(-)의 수준이고, 고소득층에서는 양(+)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기여분은 가구 내 다른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때, 남성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수준은 남성 자신의 노동 시간 이상으로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여성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개인의 비임금근로 유형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존재하는 가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족력과 직업력이 여성의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진입 및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했다. 선행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결혼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자영업으로의 이행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무급가족종사로 진입하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혼 여성에게 자영업 부문은 여성이 임금근로 대신 선택하는 경제 활동임을 의미한다. 또한 출산 시기나 미성년 자녀의 존재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밝혀졌다. 임금 근로자 경력은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닌 자영업자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이전부터 축적한 상용직 경력은 자영업을 그만

둔 여성이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최근의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와 특성 변화 및 근로실태는 여성 비임금 근로자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선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배우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족형 자영업이 경제 위기에 타격을 입을 경우 가족 전체가 빈곤에 빠질 위험이 크다. 반면 여성 자영업자는 최근 고학력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약진하고 있다. 배우자로서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주보다 더 오래 일을 하고 있어 단순히 가족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 이상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여성 비임금 근로자는 남성보다 현재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사업의 부진함을 이유로 현재 일자리를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지난 1년 이내 이직자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 비임금 근로자의 규모 대비 이탈자 수가 많아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남성보다 더 컸다. 일용 근로를 제외하면 대체로 임금근로자보다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사람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 자영업자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남성 자영업자보다 국민연금 가입 비중이 훨씬 낮았다. 임의 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에서 여성 자영업자가 남성에 비해 가입 확률이 낮다는 것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임의 가입일 경우 상당수 여성이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배우자 여성이다. 남성의 경우 미혼자녀로서 무급가족일을 하고 있지만 부모의 가족 사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무급가족종사자 보호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거의 같은 수준의 시간과 기간을 무급가족종사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같은 수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지위 보장과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자영업자를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과 체계 속에서 보

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지 않지만 가족 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그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관련 연구의 측면에 있어서도, 임금 근로자와 다름없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특히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관련한 주제는 최근에야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은 취약한 노동시장적 지위와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남성은 보통 자영업자가 되지만 여성의 대다수는 무급가족종사자로서 비공식적으로 사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간주될 뿐 온전한 근로자로서 대우와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이 자영업으로 뛰어 들고 있지만 남성 자영업자보다 훨씬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체를 이끌고 있다. 임금 노동시장에서 겪는 여성들의 일자리 불안정성과 빈곤은 비임금 노동시장의 여성들에게도 예외 없이 만성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자영업 진입은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사건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여성화는 생

애주기에 따라 임금근로에서 이탈하여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한국의 여성 고용시장 특성을 잘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에서 여성이 동일한 생애주기 사건을 겪을 때 시간제 근로, 일시적인 일자리 변동, 다른 비전형적 형태의 임금근로자로서 지위를 갖는 것과 구별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어떤 경우에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를 선택하고, 그 일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며, 자영업을 그만 둔 이후에는 어떤 직업경험을 갖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자영업자의 생존이 어려운 현실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근로 실태의 취약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 위에서 자영업자 대책의 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 연구는 여성 자영업자 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 자영업자의 소득, 노동이동, 사회적 보호 실태를 임금근로자 및 남성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법제도적 혹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영업 대책과 현황을 개괄하면서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법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검토했다. 3장에서는 임금근로에 대한 취업 대안으로서 자영업 선택을 둘러싼 요인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여성 자영업 선택의 특수성을 밝혔다. 또한 여성 자영업자의 소득 실태를 여성 임금근로자와 남성 집단과의 비교 속에서 분석했다. 4장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이동을 분석했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력이 임금근로, 무급가족종사자, 실업, 비경제활동과 자영업 간의 진입과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5장에서는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근로시간 및 일자리 이동 계획과 이유 등 근로실태와 사회적 보호 실태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자영업자 정책이 여성 집단에게 갖는 정책 내용의 타당성이나 효과를 분석한 것은 아니다. 최근 자영업자와 여성고용에 대한 일련의 다양한 정책들이 시시각각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하나하나 평가하여 피드백을 제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를 고려하여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는 한편, 이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정책적 주안점,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제2장

여성 자영업 노동시장과 정책적 접근법

제1절 자영업 대책과 일반 현황

1.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기준들

가. 개념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는 그 목적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예컨대 통계목적에 위한 조사방법인지 세무목적 조사인지의 여부,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에 따른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규모와 유형이 변화하기도 한다.¹⁾ 또한 비임금근로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각 제

1) 자영업자 관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목록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를 합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참조). 하지만 국세청 「국세통계」에서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현황 등에 관한 통계 조사에서 자영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용어설명은 없으며 사업장 사업자와 인적 용역자로 구분하고 있다[국세통계, 14-2-17 자영업자 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업태) 참조].

도의 목적에 따른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²⁾ 예컨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사기준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자영업자와 유사한 개념인 소상공인은 소기업³⁾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기업으로 정의되며, 구체적인 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 원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를 제시하고 있다.⁴⁾⁵⁾⁶⁾ 1997년 4월 10일 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5331호)이 제정되었는데, IMF 이후 자영업·소상공인 창업이 확대됨과 동시에 기존 영세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소상공인 개념이 법정화되기에 이른다.

-
-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에도 일반소상공인 대상, 장애인 기업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성공불용자 등 각각의 제도마다 지원대상과 한도, 가산금리 등이 모두 다르고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공단의 경우에도 성실실패자 등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지원 대책에 중점적인 목적과 방향성은 설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명확한 범위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 제2조제2호의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한다.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단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4.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5. “대기업 등”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에 소기업 개념에는 포함되지만 소기업과는 다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한편에서 2000년 소기업 개념에 소상공인의 개념을 포함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314호)에서 소상공인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⁷⁾ 이후 소기업과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으나,⁸⁾ 2000년에 정립되었던 소상공인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변함이 없다.⁹⁾

한편 자영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등록자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으로, 근로자가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그림 2-1 참조). 노동법상 대표적인 회색지대라 할 수 있는 완전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자들,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라고 명명되는 범주도 개인사업자가 된다. 개인사업자(자영업)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분류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표 2-1 참조).¹⁰⁾

나. 현 황

<표 2-1>과 같은 구분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통계청 경제총조사나 전

7) 제364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회의록 (2018.10.31.), 34면.

8) 그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 법에서 규정하여 왔던 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소기업 제품 등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2015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다([법률 제13086호, 2015. 1. 28., 전부개정] [시행 2015.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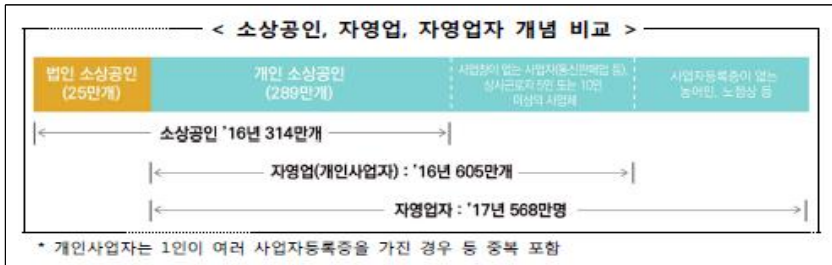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10)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국사업체조사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통계 산출을 하게 된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보유 여부,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서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포함)를 의미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 국세청 국세통계에서 그 산출근거를 찾을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566만 2천여 명이고, 그중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 참조).

[그림 2-1]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 개념 비교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소벤처기업부, p.18.

<표 2-1> 소상공인·자영업·자영업자 규모

소상공인	법인 소상공인	개인 소상공인
	25만 개	289만 개
자영업 (개인사업자)	개인 소상공인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 (통신판매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사업체
	289만 개	약 316만 개
자영업자	개인 소상공인	289만 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 (통신판매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사업체	약 316만 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8),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관계부처협동회의의 보도 자료, p.29, 필자 재구성.

〈표 2-2〉 성/종사상지위별 취업자(2019. 8)

(단위: 천 명)

성별	종사상지위별	규모
계	계	27,358
	비임금근로자	6,799
	* 자영업자	5,662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35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27
	- 무급가족종사자	1,138
	임금근로자	20,559
	- 상용근로자	14,288
	- 임시근로자	4,857
	- 일용근로자	1,415
남자	계	15,565
	비임금근로자	4,169
	* 자영업자	4,020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144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875
	- 무급가족종사자	150
	임금근로자	11,396
	- 상용근로자	8,565
	- 임시근로자	1,902
	- 일용근로자	928
여자	계	11,794
	비임금근로자	2,630
	* 자영업자	1,642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91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252
	- 무급가족종사자	988
	임금근로자	9,163
	- 상용근로자	5,722
	- 임시근로자	2,954
	- 일용근로자	487

주: - 취업자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경제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가 394만 8천여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경제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른 자영업자 수가 다른 것은 각각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2-3 참조).

〈표 2-3〉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종사상지위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0,889,140	21,259,126	21,626,904
자영업자, 무급가족	3,874,946	3,889,038	3,947,956
상용종사자	13,446,841	13,692,035	13,944,003
임시 및 일용근로자	2,600,960	2,712,028	2,763,785
기타 종사자	966,393	966,025	971,160

주: - 자영업자: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동일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는 사람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함

·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암묵적인 고용계약을 하고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람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으며 상여금·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사업체의 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 임시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함

· 같은 사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처음부터 임시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람

-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함

·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기타 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또는 그 외 기타 종사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표 2-4〉 개인사업자 수(2018)

총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7,673,637	939,020	6,734,61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2019」 9-8-1 사업자 현황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포함)는 673만 4천여 명에 이른다(표 2-4 참조).

2. 자영업 관련 정책과 유형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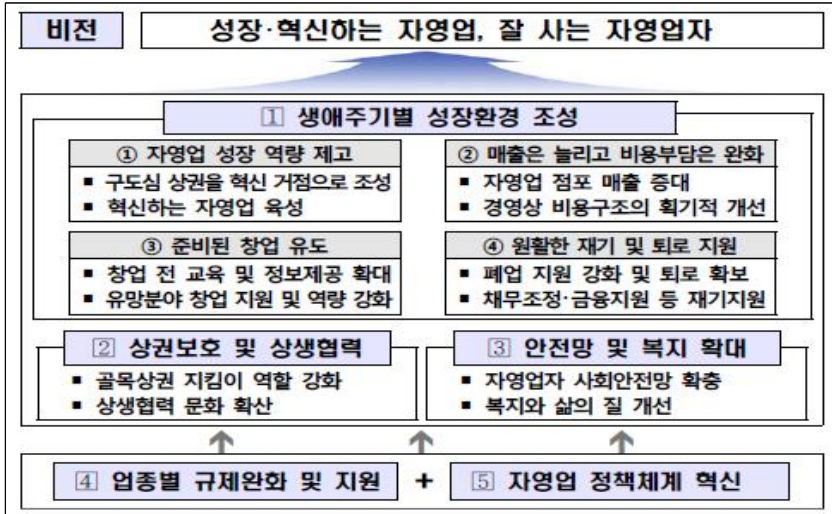
가. 자영업자 종합대책

최근에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회의 자료에는 2022년까지 추진할 8가지 핵심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그림 2-2]와 같이 자영업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세부적으로 ①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상품권의 발행, ②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육성, ③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확보, ④ 0%대 수수료를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⑥ 부실채권 조기 정리 및 폐업지원기능 강화, 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개선 추진, ⑧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이 있다.

또한 상권특색이 반영된 경관을 마련하고, 임대인·임차인·지역주민·지자체 등 상권 주체의 자율적인 협의제를 도입하고, 자율규제 및 상생활동을 유도하는 목표를 추진하며, 구도심 상권 개발을 자영업이 밀집한 곳에 집중 육성하는 방법을 시행 중이다(그림 2-3 참조).

추가적으로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해 상점가, 상권 인근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자영업자와 지역주민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 구축을 통한 복지 및 삶의 질 개선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공간의 인력활용은 자영업자 중 폐업(예정) 자영업자에서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심으로 채용할 예정이다(그림 2-4 참조).¹¹⁾

〔그림 2-2〕 자영업자 관련 정책 추진방향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소벤처기업부,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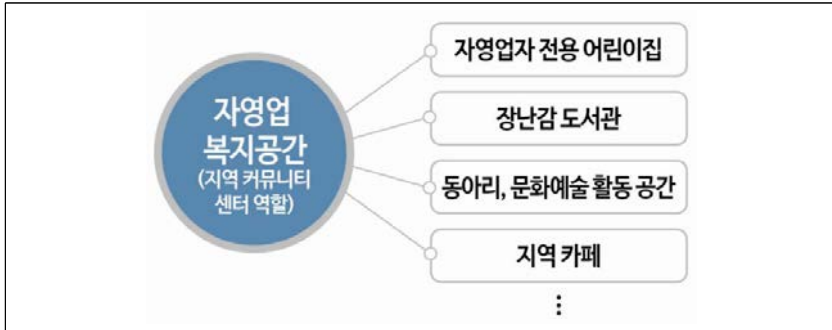
〔그림 2-3〕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소벤처기업부, p.11.

1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취득과정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림 2-4] 자영업 복지와 삶의 질 개선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소벤처기업부, p.11.

<표 2-5> 생활밀착형 업종별 규제완화 및 지원

< 업종별 규제완화 >	
▶ 미용업: ‘(가칭)뷰티산업 진흥·육성법’ 제정을 추진하여 미용업의 육성·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의 지정·규격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운영	
▶ 외식업: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본인 인증 절차 강화 및 온라인 교육 평가제도 도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계좌점 간 복합매장(shop-in-shop) 허용요건 완화* * (현행) 벽, 층으로 분리 → (개선) 선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구획	
▶ 식료품업: 영세자영업자 HACCP 인증 시 컨설팅 및 자금 등 우대 지원	
▶ 광고업: 벽면 이용 간판 설치 층수 완화(3층 이하 → 5층 이하) * 행안부 표준조례안 개정	
▶ 관광업: 여행업 관련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가칭)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및 관광공연장업 무대 기준** 완화 * 일반여행업(2→1억 원), 국외여행업(6→3천만 원), 국내여행업(3→1.5천만 원) ** 관광공연장업 등록 무대면적 기준 요구[실내공연장(100㎡), 실외공연장(70㎡)]	
▶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 하향조정 * 2019년에는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이에 따른 업체 수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각 업계 의견 수렴 후 추가 경감 추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택배업: 물류신고센터를 설치(2019. 3.)하여 분쟁 조정 원활화, 참고원가제*를 도입(2020년 도입, 2021년 시행)하여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배송수수료 인상) * 화주·운수업체 등이 운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화물차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하여 공표	
▶ 자동차 정비업: 전구교환, 타이어펍크 수리 등 소액 단순작업의 경우 견적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하도록 개선	

〈표 2-5〉의 계속

〈업종별 규제완화〉	
▶ LPG판매업·운반차: LPG판매사업자 공급범위 확대(3톤 미만 → 10톤 이하), 폐차·매각 등으로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변경등록에 필요한 소요기간 반영(즉시신고 → 30일 이내)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9)	
▶ PC방, 노래연습장: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게임산업진흥·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현행) 사업자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해서 제출 → (개선) 분실 사유서 작성 시 허용 - PC방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장 설치기준 구체화(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 (현행) 허가관청은 “투명 유리”로 된 창만을 설치 요구 → (개선)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으로 구체화	
〈업종별 지원〉	
〈외식서비스업 분야〉	
▶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등 조직화* 및 공동사업** 지원 확대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 2018. 20 → 2019. 50개소 ** (사례) 안산 대부도 칼국수 지구: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조직화되어 국산 밀을 쌀국수로 가공하여 회원에게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발전 - 포스몰* 거래 활성화(수수료 인하 등 추진)를 통한 식재료 조달비용 절감 * 포스몰(POS-Mall): 식당에서 구매·판매·재고를 관리하는 POS단말기와 연계한 사이버 거래소	
▶ 외식업 설비가 갖춰진 사업장에서 매장운영 실전경험과 컨설팅 지원을 받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역 위주로 확대(2019, 5개소) * 현재 서울 2, 경기 1, 전북 1, 전남 1 개소가 운영 중이며, 강원, 충청, 경상권 확대	
▶ 외식업 자영업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준비단계) 해외진출아카데미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진출단계) 해외 주요 거점별 안테나숍(3~4개, 푸드코트 형태) → (확산단계) 현장지원 전담조직 및 코디네이터 배치	
▶ 외식업체 소규모·무담보 대출 지원 확대(2018. 74 → 2019. 100억 원) * 지원금리: (고정) 일반업체 3.0%, 농업경영체 2.5%, (변동) 2% 내외	
〈관광서비스업 분야〉	
▶ ‘(가칭)지역관광혁신지원센터’를 시범 신설(1곳)하여 소규모 관광업 창업부터 금융, 경영, 일자리까지 일괄 지원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지원 행정시스템* 구축, 사업화 자금 및 인큐베이팅** 지원 * 창업 행정정보 관리 및 레저선박 입출항 지원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2018. 8~2019. 3, 2억 원) ** 지정 컨설턴트 운영, 관광공사 창업 교육 제공, 창업자 네트워크 구축 등	

〈표 2-5〉의 계속

＜업종별 지원＞	
▶	마리나 정비면허·정비업 신설*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해수부-고용부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자동차정비사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자동차정비사가 자격시험 응시 시 가점 부여
＜공예 분야＞	
▶	공예기술 전수 및 공방운영 등 실무지식을 배우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2019, 150명) 및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 공예가 활동공간 제공, 기술교육 및 생산, 공방 경영, 인재양성 등 지원 - 공예주간 운영(수도권, 지역 3곳), B2B 구매 시스템 마련, 해외 주요 공예페어 참가(미국·영국·프랑스 등), 공예전 개최(연 5회) 등 추진
＜어업 분야＞	
▶	노량진 수산시장(2007~2019, 총 2,241억 원) 및 부산공동어시장(2015~2022, 총 1,729억 원) 현대화를 통해 소매상인·중도매인 사업 환경 개선
＜지역서점 분야＞	
▶	지역서점의 문화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서점을 주민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교류의 터전으로 조성 * 저자 초청 특강, 독서동아리 운영, 작은 음악회, 시낭송, 구연동화, 지역 문화행사 등 -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확산* 및 생활문화시설 지정 추진을 통해 지역서점 지원 근거 마련 및 이미지 개선 * 미제정 6개 광역지자체(대전, 세종, 경남, 충북, 충남, 강원) 제정 유도 - 소형서점용 POS 보급(2019, 300개) 및 지역 서점 POS 연계·구축(지역서점 포털:서점-ON) 참여 확대 등 정보화 및 공동구매 기반 마련
▶	서비스표준: 소상공인이 주로 애로를 겪거나 간과하기 쉬운 업무 프로세스*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서비스 표준’ 개발·보급 * 고객응대, 품질관리, 고객불만처리 및 피해 처리방법 등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소벤처기업부, 24~25면.

나. 소상공인·소기업 대책

소상공인에 관한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상공인 특별법)¹²⁾에 정의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개념에도 불구하고

12)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용업종제

〈표 2-6〉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 추진

혁신 리더형	혁신 아이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경력/기술 등) 및 혁신의지 보유 ex) 백년가게, 명문 소공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기술) / 서비스 품질 경쟁우위 ex) 4차 산업기술 활용, 新사업아이템 보유
혁신 마케팅형	혁신 그룹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화된 마케팅 방식으로 시장개척 ex) 홈쇼핑 입점, 글로벌시장 개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 네트워크 활동(조직화/협업화) ex)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체 구성운영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소벤처기업부, p.13.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 혹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대상을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개개의 대응책마다 조금씩 상이하고,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히 지원하는 방식이나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 이외에는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사업자 등을 포섭하기 어려운 문제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고용위기, 산업위기 등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또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022년까지 총 1.5만 명 육성을 목표로 혁신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금리우대, 플랫폼 연계마케팅, 홈쇼핑 입점 및 컨설팅 지원을 하

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되었고, 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그중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증가한 반면에 생계형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증가하여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곧, 대기업들이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진출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해온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 자본이나 고도한 기술 대신 단순노무 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이른바 ‘생계형’ 사업 분야였으며, 이로 인해 결국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를 낳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이에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2018. 6. 12.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

고, 혁신형 소상공인이 고용한 청년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사업주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2019년 상반기 내 지원을 검토 중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¹³⁾에 명기되어 있으며 중소기업기준은 업종에 따른 매출액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이다.¹⁴⁾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소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중심의 사업으로 인력, 수출부분, 내수, 경영, 금융지원 방식의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지원정책¹⁵⁾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표 2-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 원	36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40만 원	48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 원	240만 원
	대규모기업	10만 원	120만 원
대체인력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 원	720만 원
	대규모기업	30만 원	360만 원
비정규직 재고용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 원	720만 원
	대규모기업	30만 원	360만 원

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1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4) 강민정·김은지·박수범·권소영·윤자영·김근주(2018),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 일자리 정책 실행방안: 모성보호제도』,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47.

15)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지역혁신형 소공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도심제조업 가업 승계 지원사업, 우수 도시형 소공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 사업 등, 지역사회에 특성화된 지원방법과 마케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2-8〉 중앙부처소관 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정책

소관부처	정책명	대상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5인 이상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 협동조합
	나들가게 육성	슈퍼마켓 점주
	유망 프랜차이즈화 지원	가맹본부 성장 목표, 신규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2019년 적용기준 125% 이하인 소상공인
	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자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상인회, 조합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상인회, 조합
	온누리상품권 발행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공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 수준 이하 업체
	소상공인 긴급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성공불용자 지원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제도전 지원 특례보증	성실실패자, 법적 채무 종결기업 등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 도, 군 농촌 주민
	사회적 농업 육성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소재조직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지원	농업인 및 농업법인
고용노동부	유해작업환경 개선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 위주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채당금조력지원제도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

자료: 중소기업부 정책정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료,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참조 후 필자 재구성.

또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가입자격을 확대하였다.¹⁶⁾¹⁷⁾

제2절 여성 노동시장 정책과 자영업자

1.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여성과 자영업자

정부정책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의 방안은 대상자·분야별로 구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지원(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고용보호 사각지대 해소’라는 큰 틀 속에 지속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한 대체인력지원서비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및 급여 지원, 직장어린이집과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방안 등이 추진 중이다.¹⁸⁾ 추가적으로 시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 ⑫ (생략)

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의 경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자차기사(2019. 1. 1.),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쿼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및 전속성에 관해서는 각 적용법령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예: 「우체국예금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종사자의 입직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원일이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보다 빠른 경우에 한함)은 제한된다.

간선택제 고용 및 전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부정책들은 ‘고용’이라는 범주, 즉 근로자 중심인 정책들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이러한 틀 속에서 간접적인 지원 또는 보호 확대 방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여성 자영업자(경영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경영 지원 및 공공 구매 의무화 지원, 업종 및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 지원사업 등도 마련되는 등 독자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지만,¹⁹⁾ 아직까지 지엽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도,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대책이 구성되고 있다. 예컨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농업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직업역량 강화 및 양성이 평등한 농촌사회 구현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환경 등 생활안정과 관련된 정책도 수행되고 있다.²⁰⁾

2. 여성 자영업 종사자의 주요 대책

가. 여성 자영업 종사자 관련 정책의 흐름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1월~12월 31일까지 창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2.0%의 저렴한 금리로 최고 1억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8)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do>(접속일: 2019년 7월 5일)

19)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supportPolicy/supportPolicyList.do?target=3>(접속일: 2019년 7월 5일)

20)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mafra/398/subview.do>(접속일: 2019년 7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의 자영업 및 창업과 관련하여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공간과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시 우대를 하고 있다.

〈표 2-9〉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2019)

지원 규모	60명 내외 * 2018년 지원현황: 14명 신규지원, 지원금액 565백만 원, 1인당 평균 4,036만 원 지원(2018. 12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등급 1~7등급 ○ 저소득계층 ○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부양가족기준: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단, 25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인인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인 경우에 인정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신용관리대상자(신용등급 8, 9, 10등급) ✓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동 업종 창업의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창업 업종이 성인전용의 유흥, 퇴폐, 사치, 향락 및 오락업종, 간이주점인 경우 우대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해당 서류 구비)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보증금 최대 1억 원까지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 연 2.0% 고정 금리, 분기별 납부 <심사·평가내용> 신청자의 경영능력, 자금조달 능력, 해당업종 종사여부, 사업실현가능성, 시장전망, 건물 채권확보 가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정책, www.mss.go.kr

〈표 2-10〉 여성 창업보육센터 지원

지원 규모	전국 17개 지역센터 225개 창업보육실 운영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여성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여성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 기업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2년 연장가능) * 입주공간면적: 33.1㎡ 내외 ▪ 입주시설: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보안장비 제공 ○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판로(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각종 제품판매 플랫폼 입점지원) 등 ○ 여성기업 경영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정보제공 ▪ 여성기업(인), 유관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형성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정책, www.mss.go.kr

〈표 2-11〉 여성 기업확인서 발급

지원 규모	여성기업 약 13,000개사 *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기업에 한함, 위 지원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협동조합 등),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특허법인 등) ✓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원 내용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심사·평가내용>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정책, www.mss.go.kr

나. 여성 자영업 관련 연구 동향

2015년 이후 ‘여성 자영업’ 관련 선행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경력단절의 원인과 재취업 시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여성기업 혹은 자영업,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구분될 때 정부의 지원정책과 정책제언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크게 여성기업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살펴보면,²¹⁾ 강희우(2019)에서는 일·가정 양립 및 남성 위주의 비즈니스 관행과 인적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 불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 기업이 많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기업에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나 우수사례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련되어 특수한 외부환경의 영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경아(2016)는 결혼, 가사, 양육, 가족과 남편의 태도 등을 원인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위의 연구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 관심업종 취업정보 알선, 시스템 확보 요구 등, 여성이 재취업 시장에서 특정업종(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등)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²²⁾

범위를 확장하여 ‘여성’이 기업으로 운영하거나 실질적 경영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 기업인’으로서 처해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선행연구들도 있었다. 남기정(2019)은 여성창업기업과 남성창업기업의 생존특성을 비교하였는데, 분석결과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생존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창업지원기관은 여성창업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등의 상품개발이 지원 시스템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²³⁾ 이러한 여성 경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 혹은 사업장(법인)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생존율이 특별히 낮은 원인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는데, 신용카드 카드지출자료를 바

21) 강희우(2019), 「여성기업 지원 정책 개선방향」, 『조세재정 브리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6-8.

22) 김경아(2016),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 및 재취업 방안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 p.101.

23) 남기정(2019), 「여성창업기업과 남성창업기업의 생존특성 비교연구」, 『여성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151-155.

탕으로 개인사업자 규모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폐업과 생존율을 알아 본 문유경(2018)에 따르면, 2002-2016년 동안 남성 자영업자보다 여성 자영업자의 폐업과 생존율이 현저히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히려 개인 사업장 혹은 법인의 창업 규모는 여성 창업자 수가 약 314만 명, 남성 창업자 수는 약 235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실의 원인으로는 여성이 미용업, 요식/제과업 등 특정 분야에서 생존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창업 이전의 경력 혹은 경험의 축적량에서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²⁴⁾

한편, 자영업이나 가족기업에서 무급가족종사자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급가족종사자는 그동안 관심 밖의 영역으로 분류되거나 법적 용어로 정리되지 않은 통계를 위한 용어로만 기능하고 있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주로 노동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사자 지위별 혹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분류할 때 구분되어 사용되었으며, 김복순 외 3인(2019)의 노동동향 연구에서 2019년 1월 기준 953,000명으로 파악되었다.²⁵⁾ 특정 산업군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를 분류한 연구가 있었는데 유재홍(2019)은 고용형태별 SW산업의 개발 및 제작업 인력 비중을 살펴 보았다. 전체 SW산업에서 임시 및 일용직, 12,569명,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5,379명, 상용종사자는 275,29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된 약 5,000명의 근로자는 패키지 SW 개발 및 공급업,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IT 서비스 제공업 등에 분포되어 있다.

정성미(2018)는 여성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변화 부문의 연구를 통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2017년(1~10월)에는 고용원 여부와 무관하게 자영업자가 모두 증가했는데 2018년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흐름으로 패턴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영업 노동시장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노동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로 이동하고 노동시장이 나빠지면 임금근로에서 유입되

24) 문유경·전기택·배호중·김근태(2017),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Ⅰ)』,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126-127.

25) 김복순(2019), 「주요노동동향」,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142.

거나 다른 지위로 이동이 되지 않으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²⁶⁾

신동주 외(2018)의 연구에서는 영세업자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합으로 표현했다. OECD 기준의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통계청 기준의 비임금노동자를 의미하고 비임금노동자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누는데 그러한 기준에 따르면 취업자 대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016년 기준 21.23%,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일 확률이 높는데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무급가족종사자가 된다고 설명했다.²⁷⁾

한편, 이승렬(2018)²⁸⁾, 유경아·김영란·박창수·이태용(2018)²⁹⁾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우 상용직과 임시직 비율이 증가하고 고용주/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무급가족종사자 관련 정책

2019년 주요노동동향 조사에 따르면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는 2016년 기준 1,126,000명에서 2019년 1월 기준 953,000명으로 줄었다.³⁰⁾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1999년 8월 기준 214.8만 명에서 2018년 8월 118.1만 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8월 38.1퍼센트에서 2018년 25.5퍼센트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수는 2018년 686.2만 명에 이른다. 자영업자의 처지가 자본가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 규모는 노동의 이질화에 또 다른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³¹⁾

26) 정성미(2018), 「2018년 여성 노동시장 평가와 특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p.9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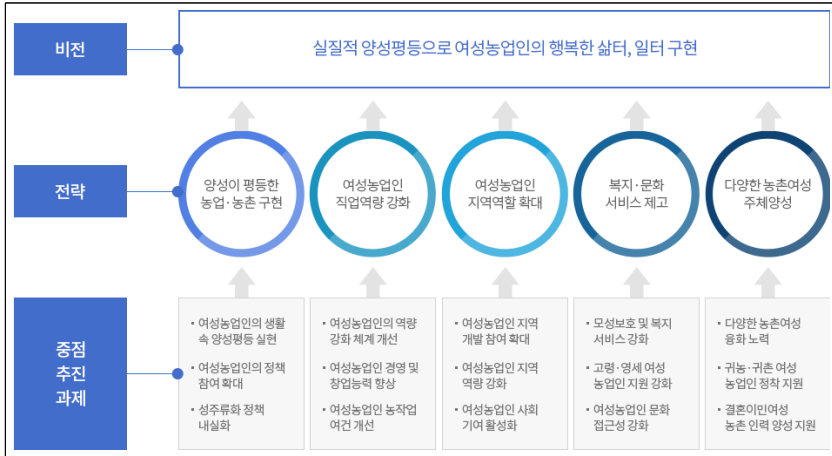
27) 신동주·최배근(2018),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 증가의 원인 - 탈공업화와 영세자영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5호, 한국산업경제학회, pp.1851-1852.

28) 이승렬(2018),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p.47-48.

29) 유경아·김영란·박창수·이태용(2018), 「고용상태 변화와 고용지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호, 한국산학기술학회, pp.253-254.

30) 김복순(2019), 「주요노동동향」,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142.

[그림 2-5]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중점추진과제

무급가족종사자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경우, 전체 농가구인 중 약 51.1%(2017년도 통계청 조사 기준)를 나타내고 있고, 전문 농업경영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성보호 및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개선 문제에도 종합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3.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범위(유형)

가. 여성 자영업자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정의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는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단,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님)를 의미한다.³²⁾

31) 장시복(2019),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 「마르크스주의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p.48

32) 유경아·김영란·박창수·이태용(2018), 「고용상태 변화와 고용지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호, 한국산학기술학회, p.254. : 경제활동인구는 성격에 따라 1군(상용직), 2군(고용주, 자영업자), 3군(임시직, 일

무급가족종사자란 용어는 법적 정의규정에서 도출된 용어가 아니라, 통계표준용어 혹은 실무상 노동관련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통계표준용어에서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³³⁾ 이에 따라 가족관계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요 종사자지위별 비교 연구에서 활용범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로 구분하여 지표를 나타낸다. 무급가족종사자란 “동일 가구 내에 살고 있는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즉, 작업량에 따라 지불하기로 약정한 임금과 급료 없이 적어도 정상 작업시간의 1/3 이상을 작업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에는 임금근로자(Wage & salary workers)와 비임금근로자(Unpaid workers)로 구분한다.

전체 취업자 통계에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성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 비임금근로자가 구분된다.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 / 無給家族従事者 / 불완전취업자)의 정의는 문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란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사람을 의미”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지난 1년(2018) 동안 1만 6000명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고용원을 두지 않고 아들이나 딸 등이 아르바이트한 경우가 다수이다.³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³⁵⁾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무급가족종사자

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무급가족종사자), 4군(실업자)의 4개 군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포함된다.

33) 통계청, http://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4&keyWord=0&cd=SL4050&sTt=, 통계표준용어, 종사상지위분류 설명(접속일 2019년 6월 10일).

34) <http://kosis.kr/index> 국가통계포털(접속일 2019년 6월 12일): 전국사업체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35)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는 118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 6000명 늘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2012년 133만 4000명을 기록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증가로 전환하여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86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만 6000명 줄었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5.5%로 1년 사이 0.5%포인트 하락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5만 1000명으로 1년 동안 7만 1000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3만 명으로 12만 4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9만 9000명으로 1년 동안 3만 5000명 줄었다. 여자는 266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라는 통계를 고용 질이 좋아졌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나. 노동시장에서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현황

종사상지위별 여성 취업자는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상용직의 증가는 30대 후반과 40대와 50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 여부와 관계없이 자영업자가 모두 증가했는데, 2018년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는 반대로 약 2천 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림어업에서 증가한 이유에 기인³⁶⁾하며 다른 산업분야인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분야에서는 크게 감소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변화가 크게 없었다고 분석하였다.³⁷⁾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2017년(1~10월)에는 고용원 여부와 무관하

통계청 보도자료, p.8.

36) 통계청·추경호 의원실, 최저임금인상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줄어 들었지만 농림·어업분야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업종으로부터 실직으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비농업분야에서 일하던 고령 농촌 여성들의 실직영향도 있다고 보았다. 농림·어업 취업자 부분은 전체 6만 1540명이 증가하였고, 이 중 60세 이상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약 3만 명, 60세 이상 남성 자영업자는 약 2만 4천 명으로 나타났다.

37) 정성미(2018), 「2018년 여성 노동시장 평가와 특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p.95-96.

게 자영업자가 모두 증가했는데 2018년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흐름으로 패턴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영업 노동시장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노동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로 이동하고 노동시장이 나빠지면 임금근로에서 유입되거나 다른 지위로 이동이 되지 않으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³⁸⁾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는 농림어업에서 3만 4000명 증가한 영향으로 제조업(-19천 명), 도소매업(-18천 명)은 크게 감소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변화가 없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는 2018년 크게 증가한 농림어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낮은 계층의 직업과 자영업 일자리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 특히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주와 임금근로자보다 사회적 위험에 더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자이고, 저학력층, 장년층, 장시간 노동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20.3%가 산재보험제도 가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급가족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통계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급가족종사자의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산재보험 적용 확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³⁹⁾

전체 여성 취업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무급가족종사자나 자영업자로 구분되는 특수고용형태 여성근로자들은 원천적으로 여성관련 법제 규율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대부분 여성의 노동이 공식적인 노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적 영역 또는 법 적용이 원천 배제되는 영세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 매우 차별적이며, 불평등한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⁴⁰⁾

38) 정성미(2018), 「2018년 여성 노동시장 평가와 특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pp.95-96.

39) 안중순(2016), 「여성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과 노동시장지위에 따른 위험대응의 차이」, 『여성경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81.

40) 문강분(2008), 「여성노동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실제」, 『여성노동』 창간호, 한국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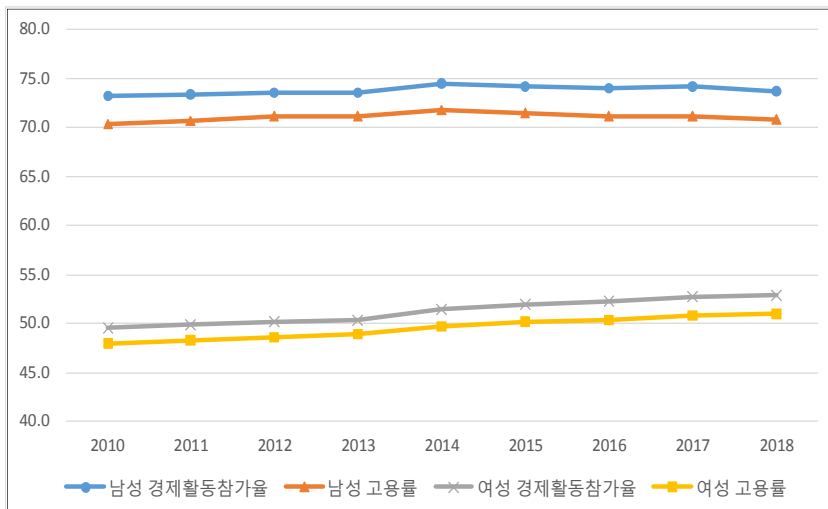
제3절 여성 노동시장 및 자영업자 변화추이

1. 2010년 이후 여성노동시장 변화추이

한국 경제의 산업화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 경기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1963~2018년의 기간 동안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8.4%에서 73.7%로 감소한 반면, 여성은 37.0%에서 52.9%로 증가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의 증가세는 201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그림 2-6]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2010~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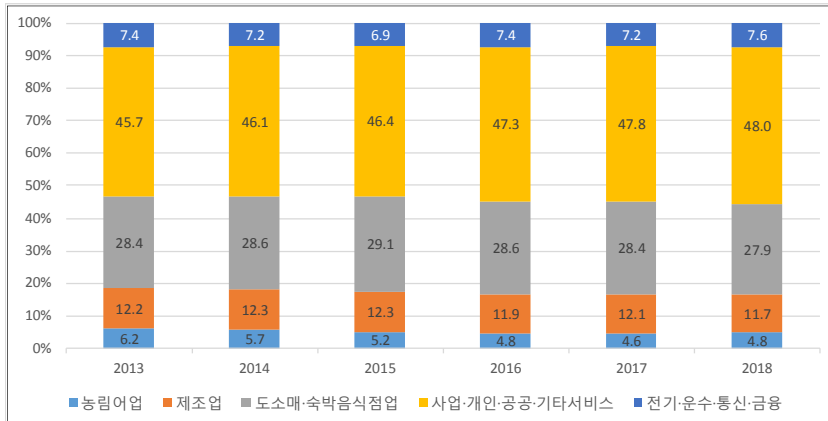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는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고용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것도 역할을 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지원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에 한계가 있으며,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추이 및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변화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의 취업구조 변화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직업별 분포, 종사상지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2-7]은 여성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보여준다. 2013년에 가장 많은 여성 취업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사업·개인·공공·기타서비스업으로 45.7%를 차지하고, 도소매·음식숙박점업에 28.4%, 제조업에 12.2%의 순으로 나타난다. 5년 후인 2018년의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비중의 순서에는 변화가 없지만, 사업·개인·공공·기타서비스업 분야의 비중은 다소 증가(2.3%p)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점업과 제조업 분야의 비중은 약간 감소(각각 0.5%p)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여성 취업자의 산업 분포 추이(2013~2018)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2-12>에서 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최근까지 5년 동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무종사자 및 서비스종사자의 비중도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판매종사자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및 사무직 종사자의 증가는 최근 강화된 지식산업화 추세 및 보건·교육·공공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의 증가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15%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으로부터, 전문성과 직업위신의 측면에서 2000년대에 접어들어 여성노동시장이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2-8]에서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또한 2010년 이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과 상관없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노동시장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구조 조정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 취업자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2010년에 전체 여성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10.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12.9%였으나, 2018년에는 각각 8.4%, 10.5%로 감소한다.

<표 2-12> 여성취업자의 직종분포 추이(2013~2018)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관리자	0.4	0.4	0.3	0.3	0.3	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6	22.0	22.4	22.6	23.1	23.2
사무종사자	18.7	19.0	18.8	19.4	19.5	20.2
서비스종사자	16.5	16.6	16.8	17.2	17.2	17.3
판매 종사자	14.6	14.8	14.6	14.1	13.9	13.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4	5.0	4.4	4.1	3.9	4.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9	2.7	2.8	2.9	2.9	2.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7	3.8	3.7	3.6	3.5	3.3
단순노무종사자	16.1	15.7	16.0	15.8	15.7	1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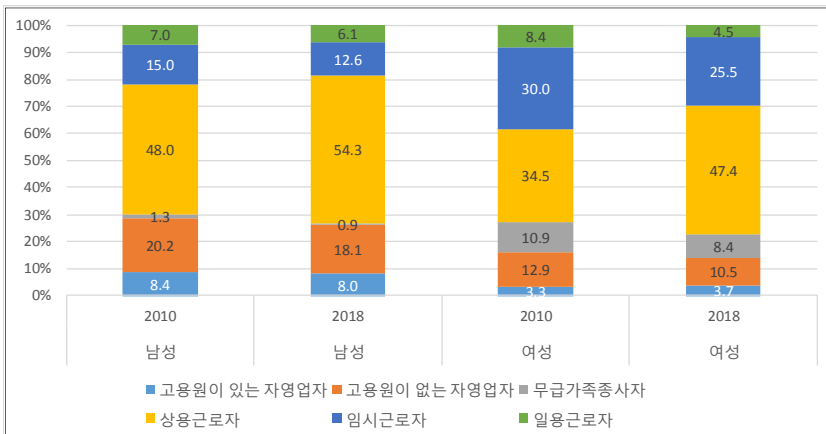
2010년 이후 임금근로자 노동시장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상용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일용 및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과는 달리 2018년 현재 여성 취업자의 25.5%가 임시근로자(남성의 경우 12.6%)이고, 일용근로자가 4.5% 수준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이 상용근로자 비중(47.4%)보다 많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부터 여성 취업자의 인적자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고학력화와 고령화 추이는 여성 취업자의 인적 특성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먼저, 여성 취업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9]와 같이 2010년 이후에도 50세 미만의 청년층 및 장년층 취업자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상의 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에 20대와 50대 연령층이 각각 19% 수준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8년에는 20대 취업자 비중이 16.8%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50대 취업자 비중은 23.4%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은 인적자본의 대표적인 변수로 활용된다. 산업화와 동시에 여성의 교육기회가 늘어남으로써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80년에는

[그림 2-8]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분포 추이(2010 vs. 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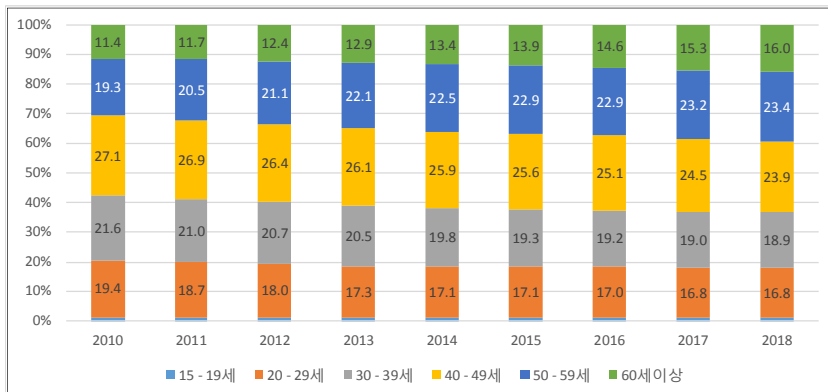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전체 여성 취업자 중 66%, 중졸 이하는 17% 수준이었지만, 이후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는 2010년 이후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그림 2-10 참조), 2010년에 각각 15.3%와 11.1% 수준이었던 초졸 이하 및 중졸 학력의 취업자 수 비중이 2018년에는 각각 10.0%와 8.8% 수준으로 감소했다. 고졸 학력의 취업자 비중 역시 2010년 39.1% 수준에서 2018년에 37.3%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 학력의 취업자 수 비중은 2010년 34.5%에서 2018년 43.8%로, 약 10%p가량 증가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고학력화 추이는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고질적인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시기의 경력단절 현상이 2010년대 들어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통적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 시기로 일컬어진 20대 후반에 그 전후시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연령계층별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으로 나타냈다. 2000년대 이후 만혼화 추세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의 시기가 30대 전반으로 늦춰지는 경향이 있으나, 경력단절을 나타내는 저점(低點)은 여전히 관측되었다. 1980년대 이후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 경력단절자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20대 취업률(고점)도 높아진

[그림 2-9] 여성 취업자의 연령 분포 추이(2010~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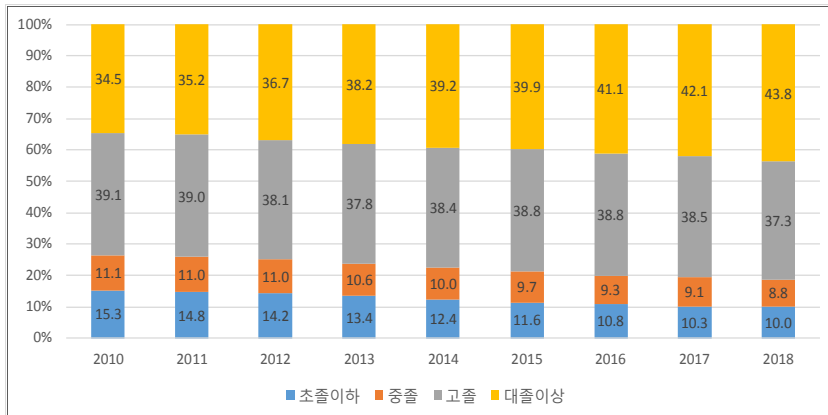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점을 감안하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의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림 2-11]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출산 및 양육 시기가 30대 전반에서 30대 후반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2-10] 여성 취업자의 학력 분포 추이(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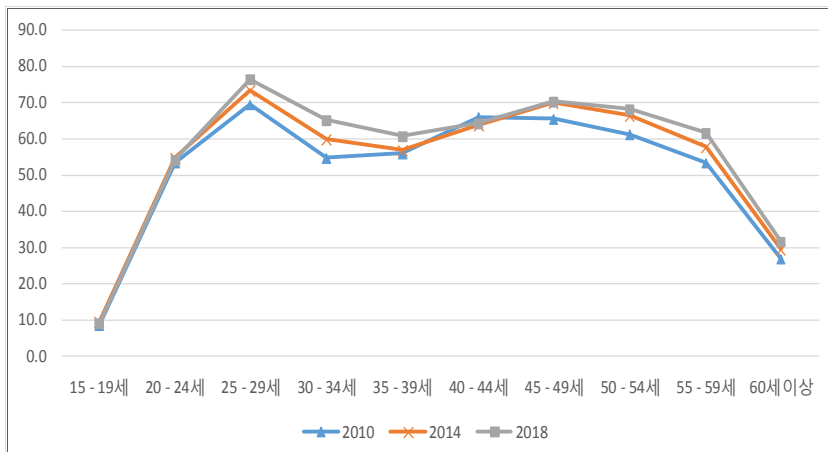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2-1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2018)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2010년 이후 여성 비임금근로자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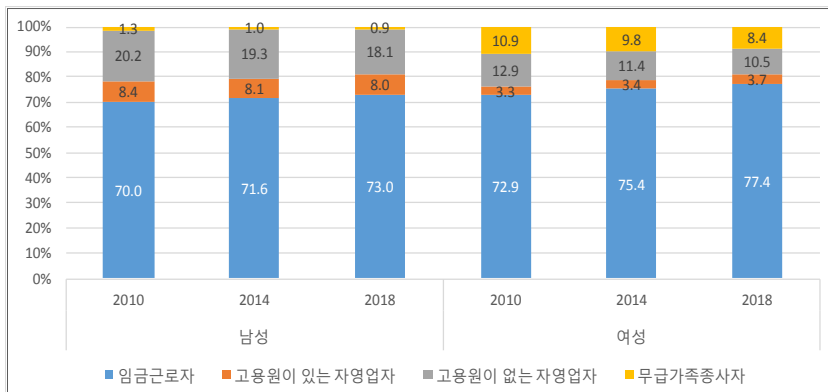
가.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분포 추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그림 2-12 참조). 남성의 경우 구성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대비하여, 여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10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아주 미약하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변화를 임금근로자의 변화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 양상이 더욱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3]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2010년 이후에도 그 증가세가 이어져서 2018년 현재 44.1%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임금근로자

[그림 2-12]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분포 추이(2010~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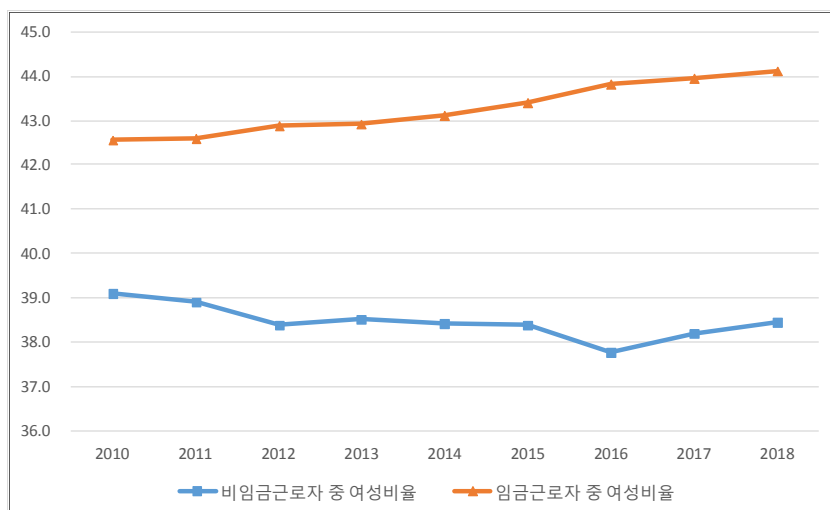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중 여성 비율은 2000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감소세가 2010년대 초반까지는 이어졌으나 2016년 이후에 다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임금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은 2010년에 39.1% 수준에서 2016년 37.8%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8년 현재 38.5% 수준으로 2016년 대비 약 1%p 정도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은 여성 비임금근로자가 남성에 비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가 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추이가 뚜렷한 것으로부터, 가족형 자영업의 쇠퇴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최근 몇 년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여성 비임금근로자 비중에 대한 특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2-13] 임금·비임금근로자 중 여성비율 추이(2010~2018)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나.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변화

지금부터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학력, 가구주 관계 등)과 취업구조의 특성(산업 및 직종 등), 그리고 그 변화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임금근로자와의 비교와 더불어, 비임금근로자 내부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사이의 비교분석을 함께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2014년, 2018년 원자료이다.

먼저 <표 2-13>에서 여성 취업자의 연령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주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의 연령층보다 40대 연령층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5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3>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연령분포

(단위: 천 명, %)

	2010년				2014년				2018년			
	임금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임금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임금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30세 미만	1,942 (26.7)	9 (2.8)	85 (6.6)	30 (2.8)	1,873 (22.9)	6 (1.7)	72 (5.9)	38 (3.6)	1,939 (21.9)	9 (2.2)	69 (5.7)	26 (2.7)
30~39세	1,747 (24)	76 (23)	206 (16)	127 (11.7)	1,815 (22.2)	65 (17.8)	169 (13.6)	101 (9.5)	1,851 (20.9)	75 (17.8)	153 (12.7)	80 (8.3)
40~49세	1,901 (26.1)	136 (41.3)	329 (25.6)	341 (31.2)	2,086 (25.5)	151 (41.3)	298 (24.1)	271 (25.5)	2,100 (23.7)	141 (33.2)	294 (24.3)	201 (20.9)
50세 이상	1,694 (23.3)	108 (32.9)	665 (51.7)	595 (54.4)	2,400 (29.4)	143 (39.1)	699 (56.5)	653 (61.4)	2,967 (33.5)	198 (46.8)	692 (57.3)	654 (68.1)
전 체	7,284 (100)	329 (100)	1,285 (100)	1,093 (100)	8,173 (100)	365 (100)	1,238 (100)	1,064 (100)	8,858 (100)	424 (100)	1,207 (100)	961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표 2-14>에서 여성 취업자의 학력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학력에서 고용주, 임금근로자,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고용주와 임금근로자 집단에서 대졸 이상 학력의 비율이 45%를 넘지만,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집단에서는 각각 34.9%, 19.8%이다.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집단에서는 중졸 이하 학력의 비중이 각각 30%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당수의 저학력자는 세대효과(cohort effect)가 반영된 고연령 집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연령·저학력층이 상대적으로 비임금근로자 집단 내에 많이 분포될 것인바, 여성 비임금근로자를 위한 정책 수립 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저학력 경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고착화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 비임금근로자 내부에서도 다양한 분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2010년은 여성 비임금근로자 중 중졸 이하 학력의 비중이 거의 50% 수준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4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졸 이상 학력층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 고용주의 고학력화 현상이 두드러져 대졸 이상의 비율이 2010년 39.8%에서 2018년 50.1%까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주의 경우 중졸 이하 학력의 비중이 적은 반면, 대졸 이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자영자보다도 고용주 집단에 전문직 및 고소득 직종에 많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2010년 이후 여성 취업자의 평균 학력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는데, 이 추이가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견고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학력화 추이를 실감할 수 있다.

<표 2-15>에서 여성 취업자의 혼인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미혼이 25.3%, 유배우자가 61.1%, 사별·이혼이 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업자의 유형별로 나눠보면,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경우 미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배우자 비율은 비임금근로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중 미혼인 비율이 2010년에는 7.1%이었으나 2018년에 9.0%로 증가하고, 사

별·이혼의 비율은 14.5%에서 약간 증가하여 2018년에는 15.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학력분포

(단위: 천 명, %)

	2010년				2014년				2018년			
	임금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임금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임금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중졸 이하	1,481 (20.3)	56 (16.9)	560 (43.5)	543 (49.7)	1,461 (17.9)	40 (11)	458 (37)	473 (44.5)	1,369 (15.5)	45 (10.7)	364 (30.2)	379 (39.4)
고졸	2,924 (40.1)	143 (43.3)	416 (32.4)	420 (38.4)	3,140 (38.4)	156 (42.6)	424 (34.3)	439 (41.3)	3,297 (37.2)	166 (39.1)	421 (34.9)	392 (40.8)
대졸 이상	2,880 (39.5)	131 (39.8)	309 (24.1)	130 (11.9)	3,572 (43.7)	169 (46.3)	356 (28.8)	152 (14.3)	4,192 (47.3)	212 (50.1)	422 (34.9)	190 (19.8)
전 체	7,284 (100)	329 (100)	1,285 (100)	1,093 (100)	8,173 (100)	365 (100)	1,238 (100)	1,064 (100)	8,858 (100)	424 (100)	1,207 (100)	961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표 2-15〉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혼인상태 분포

(단위: 천 명, %)

	2010년				2014년				2018년			
	임금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임금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임금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미혼	2,168 (29.8)	29 (8.8)	140 (10.9)	24 (2.2)	2,348 (28.7)	26 (7)	134 (10.9)	30 (2.8)	2,667 (30.1)	40 (9.4)	168 (14)	24 (2.5)
유 배우자	4,292 (58.9)	243 (73.9)	831 (64.7)	1,046 (95.8)	4,801 (58.7)	276 (75.7)	794 (64.1)	1,016 (95.5)	5,038 (56.9)	310 (73.2)	731 (60.5)	919 (95.6)
사별 /이혼	824 (11.3)	57 (17.3)	314 (24.4)	23 (2.1)	1,024 (12.5)	63 (17.3)	310 (25)	18 (1.7)	1,152 (13)	74 (17.4)	308 (25.5)	18 (1.9)
전 체	7,284 (100)	329 (100)	1,285 (100)	1,093 (100)	8,173 (100)	365 (100)	1,238 (100)	1,064 (100)	8,858 (100)	424 (100)	1,207 (100)	961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지금부터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로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16 참조). 일반적으로 여성은 가구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용주 및 자영자 집단에서 여성 본인이 가구주인 비중이 2018년을 기준으로 각각 38.5%, 44.4%로 나타난 것은 매우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임금근로자 중 가구주의 비율은 2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이혼 또는 사별로 가구주가 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으로 비임금근로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중 96.6%가 가구주의 배우자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이 가구 내에서 협업 배우자로 결합하고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표 2-16〉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가구주와의 관계 분포

(단위: 천 명, %)

	2010년				2014년				2018년			
	임금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임금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임금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가구주	1,827	131	522	3	2,048	140	513	0	2,427	163	536	2
	(25.1)	(39.7)	(40.6)	(0.3)	(25.1)	(38.3)	(41.5)	(0)	(27.4)	(38.5)	(44.4)	(0.2)
배우자	3,470	170	616	1,022	3,944	204	597	996	4,207	238	545	906
	(47.6)	(51.5)	(47.9)	(93.5)	(48.3)	(56)	(48.2)	(93.7)	(47.5)	(56.2)	(45.1)	(94.3)
자녀	1,668	22	94	34	1,873	14	84	39	1,960	17	94	33
	(22.9)	(6.7)	(7.4)	(3.1)	(22.9)	(3.9)	(6.8)	(3.7)	(22.1)	(4.1)	(7.8)	(3.4)
부모	78	3	38	29	104	3	31	24	73	2	19	18
	(1.1)	(0.8)	(3)	(2.7)	(1.3)	(0.7)	(2.5)	(2.2)	(0.8)	(0.4)	(1.6)	(1.8)
기타	241	4	15	5	203	4	13	5	190	3	14	3
	(3.3)	(1.3)	(1.2)	(0.5)	(2.5)	(1.1)	(1.1)	(0.5)	(2.2)	(0.8)	(1.1)	(0.3)
전 체	7,284	329	1,285	1,093	8,173	365	1,238	1,064	8,858	424	1,207	96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이제 비임금근로자의 사업 특성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하고, 또 비임금근로자 내부 구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별⁴¹⁾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비임금근로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유통서비스업의 여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인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바,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여성 비임금근로자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10년 5.0% 수준에서 2018년 6.9%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경우에는 비임금근로자 유형별로 증감이 현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는데,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2010년에 비해 2018년에 감소한 반면, 자영자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비임금근로자 전체에서 사회서비스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2010년 대비 2018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를 살펴보았다(표 2-18 참조). 2018년 기준으로 여성 고용주 및 자영자는 서비스직, 관리/전문가, 판매직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농림어업/기능관련직(36.7%)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판매직(22.4%), 서비스직(1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전통적으로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18년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문직 종사자에 분포하는 비율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 중에도 사무직의

41) 여기서 서비스업의 네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대분류를 기준으로, 유통서비스업은 G(도매 및 소매업) + H(운수업), 생산자서비스업은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K(금융 및 보험업)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은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P(교육서비스업) +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U(국제 및 외국기관), 개인서비스업은 I(숙박 및 음식점업)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을 의미한다.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 중심의 열악한 일자리 일변도였다면, 최근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의 일자리로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표 2-17〉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산업 분포

(단위: 천 명, %)

	2010년				2014년				2018년			
	임금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임금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임금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농림 어업	98	6	211	373	76	4	184	347	66	3	159	316
	(1.4)	(1.7)	(16.4)	(34.1)	(0.9)	(1.1)	(14.9)	(32.6)	(0.8)	(0.7)	(13.2)	(32.9)
광공업	1,062	17	48	124	1,160	19	37	95	1,183	20	37	72
	(14.6)	(5.3)	(3.7)	(11.4)	(14.2)	(5.3)	(3)	(8.9)	(13.4)	(4.8)	(3.1)	(7.5)
유통 서비스	1,104	68	315	272	1,212	74	298	281	1,256	89	267	242
	(15.2)	(20.7)	(24.5)	(24.9)	(14.8)	(20.2)	(24.1)	(26.4)	(14.2)	(21)	(22.1)	(25.2)
생산자 서비스	1,332	23	71	41	1,526	22	86	33	1,661	31	110	39
	(18.3)	(7.1)	(5.5)	(3.7)	(18.7)	(6)	(6.9)	(3.1)	(18.8)	(7.4)	(9.1)	(4.1)
사회 서비스	2,218	64	197	24	2,617	85	213	18	3,062	76	194	19
	(30.5)	(19.6)	(15.3)	(2.2)	(32)	(23.2)	(17.2)	(1.7)	(34.6)	(17.9)	(16.1)	(1.9)
개인 서비스	1,313	147	439	238	1,434	157	417	264	1,431	198	435	244
	(18)	(44.6)	(34.2)	(21.8)	(17.5)	(43.2)	(33.7)	(24.8)	(16.2)	(46.7)	(36)	(25.4)
기타	158	3	5	22	149	4	3	25	199	6	5	29
	(2.2)	(1.1)	(0.4)	(2)	(1.8)	(1.1)	(0.2)	(2.4)	(2.3)	(1.4)	(0.4)	(3.1)
전 체	7,284	329	1,285	1,093	8,173	365	1,238	1,064	8,858	424	1,207	96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표 2-18〉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직업 분포

(단위: 천 명, %)

	2010년				2014년				2018년			
	임금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임금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임금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관리 /전문가	1,699 (23.3)	92 (27.9)	272 (21.1)	34 (3.1)	2,037 (24.9)	110 (30.2)	294 (23.8)	27 (2.6)	2,254 (25.5)	113 (26.8)	305 (25.3)	32 (3.4)
사무직	1,648 (22.6)	13 (4)	11 (0.9)	112 (10.2)	1,912 (23.4)	18 (4.9)	18 (1.4)	107 (10.1)	2,164 (24.4)	25 (6)	18 (1.5)	104 (10.9)
서비스직	1,042 (14.3)	125 (37.9)	290 (22.6)	170 (15.6)	1,157 (14.2)	127 (34.7)	284 (23)	187 (17.6)	1,322 (14.9)	155 (36.7)	346 (28.7)	162 (16.8)
판매직	914 (12.5)	75 (22.9)	306 (23.8)	258 (23.7)	953 (11.7)	88 (24.1)	292 (23.6)	259 (24.4)	963 (10.9)	108 (25.5)	255 (21.1)	216 (22.4)
농림어업 /기능 관련직	222 (3)	15 (4.5)	266 (20.7)	419 (38.4)	199 (2.4)	14 (4)	229 (18.5)	393 (36.9)	223 (2.5)	13 (3)	212 (17.6)	352 (36.7)
장치기계 조립직	278 (3.8)	6 (1.9)	19 (1.5)	30 (2.7)	375 (4.6)	5 (1.3)	15 (1.2)	19 (1.8)	347 (3.9)	4 (1)	15 (1.3)	16 (1.7)
단순노무	1,481 (20.3)	3 (0.9)	122 (9.5)	70 (6.4)	1,539 (18.8)	4 (1)	107 (8.6)	71 (6.7)	1,584 (17.9)	5 (1.2)	55 (4.6)	79 (8.2)
전 체	7,284 (100)	329 (100)	1,285 (100)	1,093 (100)	8,173 (100)	365 (100)	1,238 (100)	1,064 (100)	8,858 (100)	424 (100)	1,207 (100)	961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

제3장

자영업 부문 여성 종사자 노동공급 및 소득분포

제1절 문제제기

본 장에서는 비임금근로 선택에 대한 결정요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비임금근로 선택의 결정요인을 횡단면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어서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내 성별 소득분포의 차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임금근로 선택요인에 대한 횡단면 분석은 개인의 비임금근로 선택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정태적인 관점에서 추정함으로써, 현재 개인에게 직면한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비임금근로자로서 취업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정태적 분석은 비임금근로 선택에 관해 많은 함의를 제공하지만, 개인이 비임금근로 형태로 진입 및 퇴출하는 상태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정태적 분석은 특정 시점에서 비임금근로자로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 횡단면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임금근로 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이유는 비임금근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횡단면 분석은 현재 상태의 비임금근로 비중을 근거로 비임금근로 선택

결정모형을 다루고 있다. 현재 상태의 비임금근로 비중은 비임금근로로의 진입, 지속, 탈출 등의 동태적 변화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결과이다. 따라서 횡단면적 분석을 통해 과거로부터 축적된 비임금근로 노동시장의 현상들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형태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분포의 차이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소득분포 차이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인가의 결정과 함께 어떤 취업형태로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노동경제학의 고전적인 연구주제이지만, 비임금근로 선택에 관한 분석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임금근로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비임금근로와 임금근로 간의 선택 결정요인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비임금근로 선택에 관한 연구들이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요인분석과 연계되어 수행되었다.

금재호 외(2009)는 출산 및 미취학아동의 보육이 비임금근로 진입에 미치는 효과를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 수와 자녀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그것이 비임금근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동일한 분석방법을 미국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성별이 비임금근로 종사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7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비임금근로 종사확률이 7%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 임금근로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유연한 비임금근로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7세 이하 자녀가 1명 증가할수록 여성의 비임금근로 종사확률은 약 4.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자녀의 나이를 세분한 결과, 3세 이상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지 여부가 비임금근로 종사확률을 10.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분석한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는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이로써 비임금근로로의 진입은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공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유연노동공급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특히, 영유아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자보다는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비임금근로 종사를 선호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들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를 가진 여성 임금근로자의 유연노동공급은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 더 제한적이며, 출산·육아로 인한 생애경력단절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출산·육아가 비임금근로 진입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4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류재우(2004)의 연구는 이 기간 동안 비임금근로 비중의 증가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과 소득분포의 변화, 소득결정요인의 변화, 신규진입자의 특성에 관한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비임금근로 부문은 소득수준 및 소득 분산(분포) 등의 측면에서 ‘직업’으로서의 매력력이 표본기간 동안 증대되었으며, 자영업자의 숙련수준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음(-)의 선택성이 축소 또는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임금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하락 없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며, 그 근거로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가 임금근로 부문에서의 소득기회 감소라는 방출요인보다는 비임금근로 부문의 흡입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병유(2003)는 경제활동참가와 비임금근로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비임금근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참가와 비임금근로 선택의 추정치를 얻은 후,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방법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와 비임금근로 선택에 관한 inverse Mill's ratio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편의항을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함수를 추정하는 2단계 과정에서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선택에 따른 선택편의를 조정하는 데 활용한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얻어진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의 선택에 따른 소득 기회의 차이를 비임금근로 선택

의 구조모형에 포함시켜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 또는 직업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비임금근로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경험의 비임금근로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의 소유 여부는 고용주 선택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은 비임금근로 선택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업률과 비임금근로의 선택 사이에는 대체로 정(+)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비임금근로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소위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미(2002)는 여성의 경력단절 가능성이 비임금근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주 및 자영자를 비롯하여 18시간 이상의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패널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1차년도(1998년)에 노동시장에 취업해 있던 여성들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노동공급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다항로짓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노동공급 변화유형은 노동시장 퇴장, 근로시간 증가, 그리고 근로시간 감축 등의 세 가지이다. 분석 결과, 어린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자녀보육의 보조자가 있는지 여부는 여성의 취업 선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비임금근로 선택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어린 자녀 수의 증가는 노동공급 변화에 있어서 노동시장 퇴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근로시간 감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는 노동시장 퇴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시간 감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은 낮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것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임금근로 선택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선행연구에서 많이 검토된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횡단면 측면에서 남성의 비임금근로 선택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연

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비임금근로 선택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금재호 외, 2009; 김기승, 2006; 전용석·김두순, 2004; 성지미, 2002; 문유경, 2002).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남성은 비임금근로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재호 외, 2009; 류재우·최호영, 1999). 본 장에서는 이처럼 인구학적 변인이 비임금근로 선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미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제시된 결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함과 동시에, 연령이나 학력, 혼인상태 등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금재호 외(2003; 2009), 성지미(2002)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모형에 추가하여 여성의 비임금근로 선택은 여성이 노동공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노동공급(flexible labor supply)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본 장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일·가정 양립 부담이 비임금근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6세 미만 자녀 수’ 변수와 더불어 ‘6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 수’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한편, 문유경(2002)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비임금근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총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배우자(남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비임금근로 선택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금재호 외(2009)에서는 가구의 전체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비임금근로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가구소득에 따른 비임금근로 선택의 효과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생활비’ 변수와 ‘배우자의 소득’ 변수를 사용하여 본인의 비임금근로 선택이 가구 전체 및 배우자의 경제수준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취학 자녀 및 취학 자녀의 수와 가구 및 배우자의 경제수준이 여성의 비임금근로 진입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횡단면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비임금근로 진입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체 생애 중 절반 이상을 기혼상태로 살아가는바, 자녀의 출산 및 육아가 여성에게 생산성 저하와 더불어 노동시장 내 차별

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모성임금 패널티’가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몇몇 선행연구들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사이의 시간배분에 근거하여 결혼 및 자녀양육과 기혼여성 비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Fields, 1987; Hundley, 2000). 이 중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과 근로시간에 초점을 맞춘 Hundley(2000)의 연구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녀양육 등으로 발생하는 가정생산에 대한 시간요구가 증가할 때 임금근로자보다 용이하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가용성의 정도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정생산시간과 시장근로시간의 상호교환을 분석한 Hundley(2001)의 연구에서는 비임금근로에서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육아 등의 필요에 따라 시장노동시간을 감축하고 가정생산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근로소득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임금근로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근로시간의 조정이 보다 유연한 기혼 비임금근로 여성이, 남성 비임금근로자와는 달리, 결혼 및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때 본인의 근로시간을 감축함으로써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분석한 연구들은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복순(2014)은 비임금근로 가구의 소득 및 빈곤 실태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비임금근로 가구의 소득 수준은 임금근로 가구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비임금근로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와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에 상관없이 비임금근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낮고, 남성 비임금근로 가구주와 남성 임금근로 가구주 사이의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비임금근로 가구주와 임금근로 가구주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반면, 다른 연령계층에서는 두 집단 간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50세 이상 가구주의 처분가능소득을 종사상지위별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비임금

근로와 상용직 사이의 소득격차가 약 20%가량 확대되었다.

반면, 최강식 외(2005)의 연구는 비임금근로 부문의 소득결정요인 및 소득분포를 임금근로 부문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 반면,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분석하면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비임금근로에 종사하는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강식·정진화(2004)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상관없이 비임금근로자의 시간당 근로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더 높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두 집단 간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여성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비자 차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이 여성 임금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에 의해 받는 차별(가격 차이) 이상이라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위직종일수록 차별이 줄어드는 반면, 비임금근로 부문에서는 직업에 상관없이 상당한 정도의 차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3절 여성의 자영업 선택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비임금근로(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선택결정에 대해 임금근로자 및 미취업자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분석하는 이항로짓모형을 먼저 분석하고,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분리), 임금근로, 미취업 간의 선택을 다룬 다항로짓모형을 분석한다. 다항로짓분석을 시도하는 주요 이유는 자영업 내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 선택에 대한 이질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1. 분석방법

가. 이항로짓모형

비임금근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y_i^* = \beta_0 + \sum_{j=1}^k \beta_j x_{ij} + \varepsilon_i \quad (3-1)$$

여기서 y_i^* 는 관찰되지 않는 잠재변수로서, 개인 i 가 비임금근로 선택 시 기대되는 평생수익의 현재가치와 비임금근로를 선택하지 않을 때 기대되는 평생수익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관찰되는 것은 개인 i 가 비임금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가변수인 y_i 이다. y_i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y_i = \begin{cases} 1 & \text{if } y_i^* > 0 \\ 0 & \text{otherwise} \end{cases} \quad (3-2)$$

본 연구에서 적용될 구체적인 로짓(logit)모형은 다음과 같다.

$$SelfEmp_i = \alpha_0 + \sum_{j=1}^k \alpha_j x_{ij} + \varepsilon_i \quad (3-3)$$

여기서 $SelfEmp$ 는 비임금근로자 여부이며, x_j 는 분석에 포함되는 설명변수들을 의미한다. 설명변수에 포함되는 변수들에 따라서 크게 3가지 분석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모형(1)은 기본 모형으로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잠재경력연수 등 지금까지 비임금근로 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구성한다. 모형(2)에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일·생활 균형 부담, 그리고 가구 내 환경이 비임금근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6세 미만 자녀 수, 6~18세 자녀 수, 월평균 생활비, 배우자 소득 등의 변수를 추가하고, 모형(3)에서는 일자리 관련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 직업, 근속연수 등의 변수를 추가한다. 여기서 모형(3)의 경우에는 미취업자가 제외된 임금근로자로 대조집단이 한정된다.

나. 다항로짓모형

로짓모형의 종속변수가 셋 이상의 반응범주로 확장되면 일반화 로짓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반응범주의 특성에 따라서 순서형(ordinal type)인 경우와 명목형(nominal type)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를 다항로짓모형이라고 한다.

로짓모형(식 3-4)과 다항로짓모형(식 3-5)의 차이를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og \frac{P(Y=1 | x)}{P(Y=2 | x)} = \beta_0 + \beta_1 x \quad (3-4)$$

$$\log \frac{P(Y=j | x_1, \dots, x_p)}{P(Y=J | x_1, \dots, x_p)} = \beta_{0j} + \beta_{1j}x_1 + \dots + \beta_{pj}x_p \quad (3-5)$$

본 분석에서는 종속변수를 미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나누고, 미취업자 또는 임금근로자를 참조집단으로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추정 결과는 참조집단에 대비하여 해당 취업형태 집단으로의 취업확률이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로 해석하게 된다. 독립변수는 기본적으로 이항로짓모형과 같다.

2. 분석자료

본 분석에서는 취업과 비임금근로 선택 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활용한다. KLIPS는 가구의 소득자료와 가구구성원의 인적 특성에 관한 자료와 함께 개별 가구원의 인적 특성 및 고용상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국규모의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이상호 외, 2014), 본 연구와 같은 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KLIPS 20차년도(2017년) 원자료 가운데 만 64세 이하의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분석에 활용된 총 표본 수는 11,112명(남성 5,558명, 여성 5,554명)이다. 이 중 미취업자가 분석에서 제외될 경우, 총사례 수는 6,917명(남성 4,066명, 여성 2,851명)이 된다. 여성 취업자의 자영업 선택요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 취업자의 자영업 선택요인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분석의 종속변수는 비임금근로자 여부이다. 즉,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이면 1, 아니면(임금근로자, 미취업자) 0의 값을 갖는 이산변수가 기본으로 사용되며, 일자리의 특성이 통제된 모형(3)에서는 비교집단에서 미취업자가 제외된다. 다항로지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종사상지위에 따른 범주형 변수(미취업자=1, 임금근로자=2, 고용주 및 자영자=3, 무급가족종사자=4)로 정의한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은 크게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정의는 <표 3-1>과 같다.

〈표 3-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설명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 변수	비임금근로자 여부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이면 1, 아니면(임금근로자, 미취업자) 0
	종사상지위	4개의 범주(미취업자/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
설명 변수 모형(1)	연령	만 나이
	연령제곱	만 나이의 제곱값
	교육수준	4개의 범주(중졸 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 이상)로 구분

〈표 3-1〉의 계속

	변수명	변수 설명
설명 변수 모형(1)	혼인상태	3개의 범주(미혼/유배우자/이혼·사별)로 구분
	거주지역	6개의 범주(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강원제주권)로 구분
	잠재경력연수	= 만 나이 - 교육연수 - 6
	잠재경력연수 제공	잠재경력연수의 제공값
모형(2) 추가	6세 미만 자녀 수	6세 미만 자녀의 수
	6~18세 자녀 수	6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의 수
	월평균 생활비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생활비(로그 만 원)
	배우자 소득	배우자의 월소득(로그 만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0
모형(3) 추가	산업	7개 범주(농림어업/광공업/유통서비스업/생산자 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기타)로 구분
	직업	5개 범주(관리·전문직/사무직/서비스·판매직/ 생산직/단순노무직)로 구분
	근속연수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년)
	근속연수 제공	근속연수의 제공값

- 주: 1)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하며, 임금근로자는 상용 + 임시 + 일용근로자를 의미함.
- 2)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권은 강원·제주를 의미함.
- 3)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대분류 기준으로, 농림어업은 A(농림어업), 광공업은 B(광업) + C(제조업), 유통서비스업은 G(도매 및 소매업) + H(운수업), 생산자서비스업은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K(금융 및 보험업) + L(부동산업 및 임대업) +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은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P(교육서비스업) +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U(국채 및 외국 기관), 개인서비스업은 I(숙박 및 음식점업)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기타는 나머지 산업부문을 의미함.
- 4) 표준직업분류(6차 개정) 대분류 기준으로, 생산직은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8(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을 의미함.

3. 분석결과

<표 3-2>는 미취업 및 임금근로 대비 자영업 선택에 대한 이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임금근로 결정요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연령은 비임금근로 선택에 주요한 요인이 아닌 반면,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영업 선택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혼인상태의 경우 남성은 미혼에 비해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임금근로 선택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여성의 혼인상태는 자영업 선택확률에 차이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주로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다른 지역 거주 여성의 자영업 선택확률이 지역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는 남녀 모두 자영업 선택확률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배우자의 월소득 증가는 남성의 경우에만 자영업 선택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녀 수는 성별에 상관없이 비임금근로 선택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 가구의 특성들이 통제된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자영업 선택요인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은 임금근로 대비 비임금근로 선택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취업자를 분석에서 제외하여도, 자영업 선택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2)의 추정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 취업자의 학력이 비임금근로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앞서 살펴본 결과와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일자리의 특성이 통제될 경우, 거주지의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산업 및 직업이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6~18세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여성 취업자가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2〉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 : 비자영업자 대비 분석결과

종속변수: 비임금근로 여부 (미취업/임금근로=0)		남성		여성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연령		0.063	0.126	0.708***	0.751***
연령제곱		-0.001	-0.001*	-0.006***	-0.007***
교육수준 (기준: 중졸 이하)	고졸	0.043	-0.01	-0.239	-0.25
	전문대졸	-0.074	-0.153	-0.363	-0.382
	대졸 이상	-0.168	-0.26	-0.622*	-0.665*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0.721***	0.715***	-0.133	0.055
	이혼/사별	0.388**	0.401**	-0.301	-0.119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165	0.202	0.486***	0.515***
	호남권	0.115	0.184	0.730***	0.766***
	대경권	0.024	0.083	0.344**	0.336**
	동남권	-0.277***	-0.268**	0.318***	0.289**
	강원·제주권	0.297	0.349*	0.486**	0.554**
잠재경력연수		0.149**	0.136**	-0.205**	-0.219**
잠재경력연수 제곱		-0.002**	-0.001*	0.002**	0.003***
6세 미만 자녀 수			0.021		-0.169
6~18세 자녀 수			-0.045		-0.095
월평균 생활비			0.552***		0.356***
배우자 월소득			-0.111***		-0.041
상수항		-5.606***	-9.642***	-16.955***	-19.425***
결정계수(Pseudo R ²)		0.135	0.152	0.103	0.109
표본 수		5558	5382	5554	5359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차년도(2017년) 자료.

〈표 3-3〉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 : 임금근로자 대비 분석결과

종속변수: 비임금근로 여부 (임금근로=0, 미취업 제외)		남성			여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연령		-0.244**	-0.216*	0.096	0.449***	0.458***	0.487***
연령제곱		0.002**	0.002	-0.001	-0.003**	-0.004**	-0.004**
교육수준 (기준: 중졸 이하)	고졸	0.031	0	0.056	-0.198	-0.163	-0.058
	전문대졸	-0.085	-0.138	-0.091	-0.3	-0.329	0.046
	대졸 이상	-0.001	-0.051	-0.001	-0.625	-0.65	-0.194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0.468***	0.525***	0.482**	0.348*	0.166	0.212
	이혼/사별	0.236	0.255	0.253	-0.233	-0.338	-0.338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131	0.158	0.071	0.369**	0.370**	0.295
	호남권	0.083	0.155	-0.156	0.636***	0.632***	0.391**
	대경권	0.051	0.101	0.004	0.371**	0.331**	0.169
	동남권	-0.292***	-0.284***	-0.201	0.295**	0.266**	0.076
강원·제주권		0.331*	0.362*	0.104	0.640***	0.679***	0.444
잠재경력연수		0.257***	0.247***	0.111	-0.169*	-0.169*	-0.187*
잠재경력연수 제곱		-0.003***	-0.003***	-0.001	0.002*	0.002*	0.002
6세 미만 자녀 수			-0.02	0.037		0.175	0.264
6~18세 자녀 수			-0.005	-0.019		0.043	0.160*
월평균 생활비			0.394***	0.682***		0.124	0.286**
배우자 월소득			-0.100***	-0.079***		-0.001	-0.005
산업 (기준: 농업)	광공업			-3.771***			-3.311***
	유통서비스			-2.358***			-2.466***
	생산자서비스			-3.202***			-2.959***
	사회서비스			-3.849***			-4.224***
	개인서비스			-1.949***			-1.849***
	기타			-3.803***			-2.848***
직업 (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직			-1.395***			-1.999***
	서비스/판매직			0.686***			-0.22
	생산직			-0.05			-0.382
	단순노무직			-0.833***			-2.396***
근속연수				-0.009			0.055***
근속연수 제곱				0.000*			-0.000***
상수항		1	-1.883	-6.351**	-11.399***	-12.270***	-10.546***
결정계수(Pseudo R2)		0.085	0.096	0.271	0.094	0.096	0.28
표본 수		4250	4088	4066	2981	2868	2851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차년도(2017년) 자료.

지금까지 비임금근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제 자영업 내 근로형태에 대한 선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3-4 참조). 먼저 미취업자 대비 선택요인을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로 선택요인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미취업자 대비 임금근로 선택에 있어서는 학력이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녀 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 내에서도 (미취업자 대비) 고용주 및 자영자를 선택하는 것과 무급가족종사자를 선택하는 결정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이 고용주 및 자영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혼인상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선택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미혼에 비해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 및 사별한 경우 무급종사자로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 역시 여성이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 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 수의 증가가 여성이 고용주 및 자영자로 취업하는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하는 확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는 여성이 고용주 및 자영자로 취업하는 확률을 증가시키지만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하는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배우자의 월소득 증가는 자영업자로의 취업확률은 감소시키고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취업확률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취업자와 대비하여 어떠한 형태의 비임금근로자로 취업을 하는지에 대한 결정요인이 그 형태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는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의 형태별 선택요인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미취업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로 취업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성 취업자의 연령은 임금근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비하여 무급가족종사자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산업 및 직업 등 일자리의 특성들이 통제되면, 임금근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비하여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 확률에

〈표 3-4〉 다항로짓모형 분석결과 : 미취업자 대비 분석결과

모형(2) (기준: 미취업자)		남성			여성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
연령		0.491***	0.404***	0.318	0.466***	1.102***	0.822***
연령제곱		-0.007***	-0.006***	-0.006**	-0.007***	-0.011***	-0.009***
교육수준 (기준: 중졸 이하)	고졸	0.617***	0.365	0.728	0.687***	0.021	0.209
	전문대졸	1.526***	1.029***	1.091	1.307***	0.315	0.252
	대졸 이상	1.139***	0.494	1.543	1.519***	0.373	-1.055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1.698***	2.385***	-2.049**	-0.178	0.058	-2.079***
	이혼/사별	0.990***	1.528***	-1.81	0.447**	0.379	-1.531*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204	0.338*	0.845**	0.289***	0.511***	0.971***
	호남권	0.127	0.223	1.120***	0.244**	0.912***	0.823***
	대경권	-0.267*	-0.114	-1.058	-0.029	0.248	0.498**
	동남권	0.243**	-0.078	0.212	0.083	0.403***	0.15
	강원·제주권	-0.333	-0.062	1.397***	-0.384**	0.035	0.836***
잠재경력연수		0.087*	0.237***	0.213	0.02	-0.229**	-0.215
잠재경력연수 제곱		0	-0.002**	0	0.002***	0.004***	0.004**
6세 미만 자녀 수		0.387*	0.416*	-0.13	-0.760***	-0.218	-1.139***
6~18세 자녀 수		0.052	0.057	-0.115	-0.314***	-0.129	-0.443***
월평균 생활비		0.041	0.647***	-0.014	0.140**	0.770***	-0.334***
배우자 월소득		-0.061**	-0.189***	0.614***	-0.109***	-0.280***	0.597***
상수항		-9.980***	-15.211***	-11.006**	-9.568***	-27.860***	-17.704***
결정계수(Pseudo R ²)		0.287			0.141		
표본 수		5382			5359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차년도(2017년) 자료.

거주지 및 잠재경력연수 등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를 선택하는 것과 무급가족종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던 월평균 생활비 및 배우자의 월소득

〈표 3-5〉 다항로짓모형 분석결과 : 임금근로자 대비 분석결과

모형(3) (기준: 임금근로자)		남성		여성	
		자영업	무급가족	자영업	무급가족
연령		0.080	0.339	0.610***	0.265
연령제곱		-0.001	-0.004	-0.005***	-0.002
교육수준 (기준: 중졸 이하)	고졸	0.009	0.149	-0.155	0.180
	전문대졸	-0.134	-0.180	0.011	0.219
	대졸 이상	-0.101	0.669	0.055	-0.993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0.668***	-3.620***	0.356	-3.432***
	이혼/사별	0.458*	-3.052**	-0.194	-2.598***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045	0.374	0.236	0.487*
	호남권	-0.188	0.101	0.543***	-0.363
	대경권	0.047	-1.428*	0.258	0.028
	동남권	-0.200	-0.302	0.206	-0.384
	강원·제주권	-0.033	1.179*	0.261	0.662
잠재경력연수		0.124	-0.074	-0.209*	-0.175
잠재경력연수 제곱		-0.001	0.003	0.003*	0.002
6세 미만 자녀 수		0.051	-0.212	0.529***	-0.348
6~18세 자녀 수		-0.016	-0.203	0.257***	0.041
월평균 생활비		0.689***	0.343	0.532***	-0.337**
배우자 월소득		-0.098***	0.671***	-0.163***	0.987***
산업 (기준: 농림어업)	광공업	-3.543***	-5.727***	-3.032***	-4.249***
	유통서비스	-2.087***	-4.876***	-1.688***	-3.622***
	생산물서비스	-2.934***	-5.799***	-1.791***	-5.186***
	사회서비스	-3.608***	-5.756***	-2.995***	-7.496***
	개인서비스	-1.798***	-3.255***	-1.135**	-2.915***
	기타	-3.515***	-19.997	-4.093***	-3.074***
직업 (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직	-1.421***	-0.969	-2.794***	-1.227***
	서비스/판매직	0.643***	1.451**	-0.044	-0.460
	생산직	-0.056	0.093	-0.017	-0.317
	단순노무직	-0.961***	0.735	-2.801***	-1.736***
근속연수		-0.007	0.119	0.037***	0.089***
근속연수 제곱		0.000	-0.009*	-0.000***	-0.000***
상수항		-6.578**	-8.951	-15.383***	-3.411
결정계수(Pseudo R ²)		0.285		0.333	
표본 수		4,066		2,851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차년도(2017년) 자료.

등의 요인들은 임금근로를 선택하는 확률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임금근로를 선택하는 것과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 주된 요인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성별로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 취업자가 비임금근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 형태에 따라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의 취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요인도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 비임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형태로 지원수단 및 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4절 비임금근로 부문의 소득분포 분석

비임금근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지, 즉 비임금근로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비임금근로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가족의 배경, 직무만족도, 그리고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에 직면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일련의 연구들은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이 임금근로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서, 비임금근로자, 특히 고용주 또는 자영자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보다 위험을 더 선호하는 특성을 지니거나 능력 자체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보다 능력이 떨어져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임금근로를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오히려 기업이 정신(entrepreneurship)을 갖춘 뛰어난 능력자가 비임금근로를 선택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매우 이질적(heterogenous)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의 편차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해서도 집단 내 편차가 큰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류재우, 2004). 따라서 평균에서의 효과를 추정하는 고전적인 회귀분석(classical regression analysis)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으로부터 다양한 특성을 갖는 비임금근로자 집단의 소득결정요인과 소득분포를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비임금근로자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절의 분석에서는 최근 소득불평등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무조건부 분위회귀모형 방법을 활용하여 종사상지위가 전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및 비임금근로자 내 성별 소득분포의 차이 등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1. 분석방법 :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개인의 이질적 효과를 통제한 조건부 분위회귀분석(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면 전반적인 소득분포에 미치는 총량 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 조건부 분위회귀분석 모형에서의 추정결과는 통제변수들이 모두 통제된 유사집단의 소득분포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의미만 부여될 수밖에 없다. 반면, Firpo et al.(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전체적인 임금분포에 미치는 총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 분석에서와 같이 자영업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변화가 무조건부 임금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즉,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 분위별 분포의 변화를 비교하여 소득불평등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Firpo et. al.(2009)은 그들의 연구에서 재중심 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를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해 특정 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 즉 근로소득의 무조건부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

할 수 있다. RIF는 종속변수인 근로소득 분포로부터 얻어지는 특정 통계량(예컨대, 분위 수)에 대해 개별 관측치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영향 함수(Influence Function: IF)를 포함한다.

RIF를 활용하면 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비임금근로자 비중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RIF-선형회귀모형을 설정하면, 설명변수가 RIF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RIF_{\tau, y_i} = \alpha_{\tau} + \beta_{\tau} X_i + \varepsilon_i \quad (3-6)$$

여기서 β_{τ} 는 설명변수 x 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무조건부 분위 수 q 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한계효과를 의미한다.

2. 분석자료

본 분석에서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분포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앞선 비임금근로 결정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KLIPS 20차년도(2017년) 원자료 가운데 만 64세 이하의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취업자의 시간당 소득액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시간당 소득액은 KLIPS가 제공하는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월평균소득을 월근로시간(주당 근로시간 \times 4.3)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바, 무급가족종사자의 기여에 따른 소득배분을 고려하고자 한다. 예컨대, 가구 내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액을 무급종사자 수(자영업자 본인 포함)로 나눈 소득액을 가구 내 무급가족종사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상적인 시간당 소득액을 계산하였다. 소득분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추정을 위해 사용된 통제변수들은 앞서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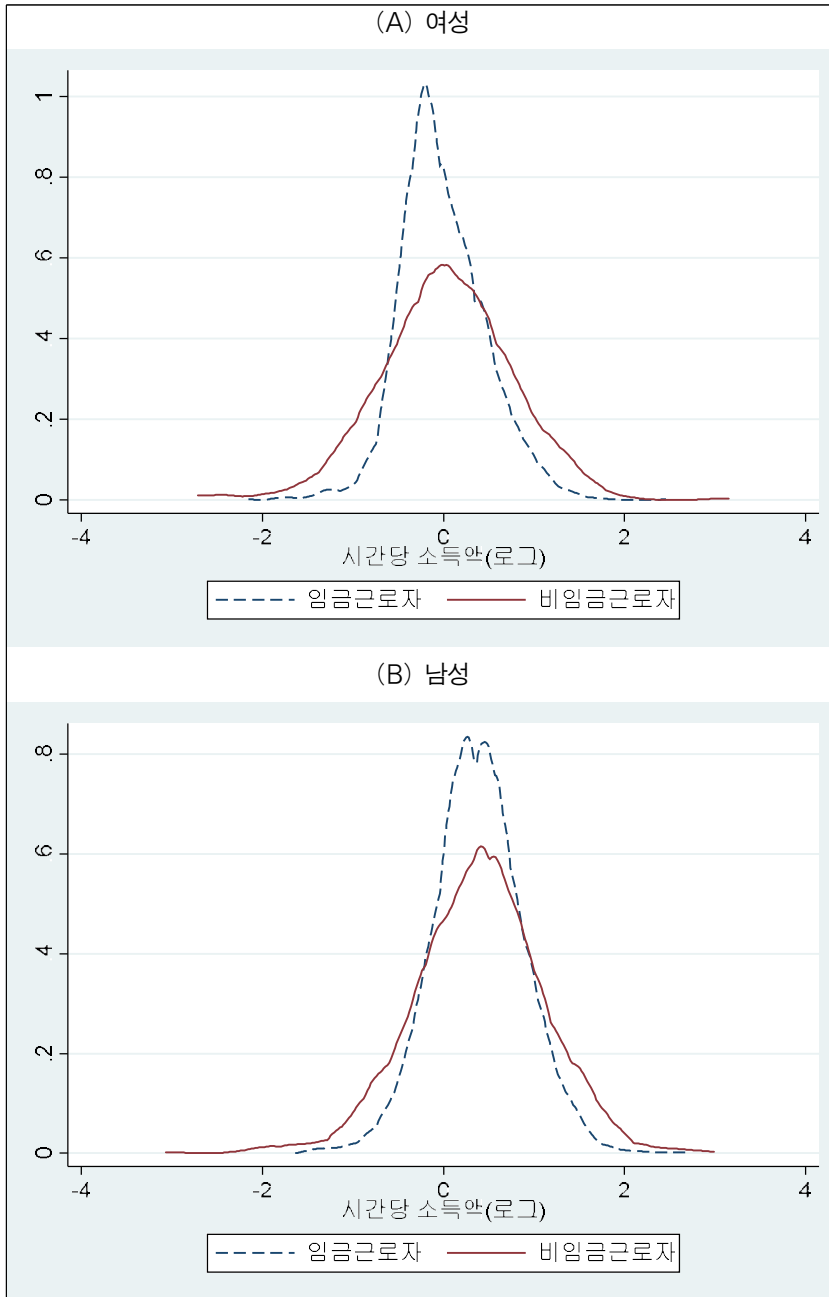
이상의 변수들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총표본 수는 6,577명(남성 3,979명, 여성 2,598명)이다. 이 표본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제외되어 있는바,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상적인 소득액을 배분하여 분석에 포함하면 표본 수가 6,865명(남성 4,039명, 여성 2,826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림 3-1]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시간당 소득액의 분포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상관없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액은 평균 주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소득액은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에 임금근로자에 비해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정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성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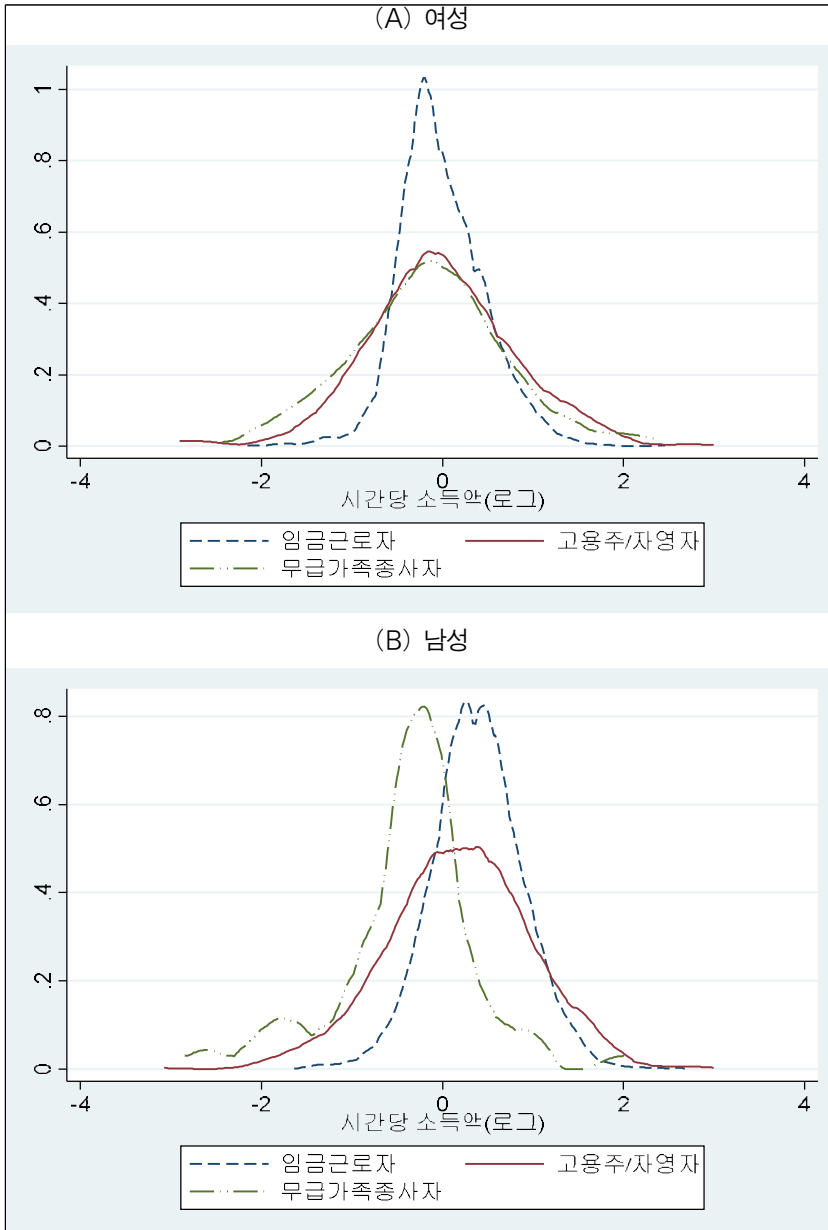
[그림 3-2]는 종사상지위별 소득분포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무급가족종사자의 시간당 소득액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가구 내 자영업자의 소득을 무급종사자 수로 나누어 배분된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렇게 무급가족종사자에게 가상적인 소득액을 배분한 후, 종사상지위별로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종사상지위별로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상관없이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분포는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분포보다 좌측으로 이동 및 치우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비임금근로자 내에서 자영업자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보다 극명하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분포가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에 비해 상당히 저소득 구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비임금근로자 내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근로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1]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차년도(2017년) 자료.

[그림 3-2] 종사상지위별 소득분포



주: 무급가족종사자의 시간당 소득액은 가구 내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의 월소득액을 종사자 수로 기준으로 배분한 것을 월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차년도(2017년) 자료.

3. 분석결과

<표 3-6>은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시간당 소득액 수준의 차이를 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다. 분위별로 소득 수준의 차이가 다르게 추정되는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성별로도 소득격차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에서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성과 달리 저소득층에서도 소득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수준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임금 수준이 높은 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낮고, 고소득층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 것과 더불어, 중위 수준의 소득 수준에서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미세하게 우측(고소득)으로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3-6〉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 임금근로자 vs. 비임금근로자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 (로그 만 원)		10% 분위	25% 분위	50% 분위	75% 분위	90% 분위
비임금근로 여부 (임금=0, 비임금=1)	여성 (N=2,598명)	-0.144***	0.038	0.139***	0.190***	0.221***
	남성 (N=3,979명)	-0.021	-0.004	0.084***	0.092***	0.205***

주: 1) 통계변수로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잠재경력연수, 자녀 수, 월 평균 생활비, 배우자 월소득, 산업, 직업, 근속연수 등을 활용함(자세한 추정결과에는 부표 3-1과 부표 3-2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차년도(2017년) 자료.

<표 3-7>은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격차 수준을 소득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본 분석을 위해서 가구 내 자영업자 소득을 활용하여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가상적인) 소득을 배분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격차가 저소득층에서는 음(-)의 수준이고, 고소득층에서는 양(+)의 수준이라는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크기의 정도는 비임금근로자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에 상관없이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분포가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분포보다 좌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소득배분을 하지 않은 분석결과와의 차이를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분포가 하향조정(좌측으로 이동)됨으로써,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격차가 저소득층에서 보다 뚜렷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남성인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이 가구 내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에게 배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남성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분포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는 남성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3-7>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분포 차이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 (로그 만 원)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여성 (N=2,826명)	고용주/자영자	-0.306***	-0.058*	0.105***	0.177***	0.345***
	무급가족종사자	-0.269***	-0.063	0.120***	0.164**	0.216**
남성 (N=4,039명)	고용주/자영자	-0.352***	-0.200***	-0.044*	-0.016	0.115**
	무급가족종사자	-0.534**	-0.540***	-0.173***	0.0002	0.034

주: 1) 통제변수로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 잠재경력연수, 자녀 수, 월평균 생활비, 배우자 월소득, 산업, 직업, 근속연수 등을 활용함(자세한 추정결과는 부표 3-3과 부표 3-4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차년도(2017년) 자료.

이상의 결과로부터,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구원 간 근로의 형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인바, 여성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무급가족종사자가 노동시장에서 기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소득은 가구 내 다른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에게 귀속되며, 이로 인해 남성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수준이 노동 제공량 이상으로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가구 내 자영업자의 소득을 가구 내 무급가족종사자에게 배분하면, 고소득층에서의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 격차가 반감되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굳이 여성이 아니더라도,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개인의 비임금근로 유형뿐만 아니라, 가구 내 근로 유형의 조합 및 그에 따른 가구소득액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5절 소 결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여성 취업자가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비임금근로의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그 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 수준은 어떻게 다른지를 소득분위별로 추정해보았다.

첫 번째로, 여성 취업자가 비임금근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연령과 거주지역 등이 있었으며, 산업 및 직업 등 일자리 관련 특성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임금근로자 내에서 근로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예컨대, 여성 취업자가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를 선택하는 것에는 연령과 거주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생활비는 선택확률을 높이고, 배우자의 월소득은 선택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여성 취업자가 무급가족종사자를 선택하는

것에는 혼인상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생활비는 선택확률을 낮추고, 배우자의 월소득은 선택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영업자 선택 구조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여성 비임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근로형태 별로 지원수단 및 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의 차이를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격차가 저소득층에서는 음(-)의 수준이고, 고소득층에서는 양(+)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의 크기는 비임금근로자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분포가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분포보다 좌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구원 간 근로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일 것인바, 가구 내 근로형태의 조합 및 그에 따른 가구소득총액 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다만, 본 장의 연구에서 가구 단위 근로형태의 조합에 따른 소득분포 및 소득격차 등은 분석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비임금근로 선택에 있어서도 개인의 동태적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한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 이후 다루어질 분석들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기는 하겠으나, 여성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제언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사 과정에서의 비임금근로의 결정유형, 가구 구성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분포 등이 보다 면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표 3-1〉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 여성(임금 Vs. 비임금)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액 (로그 만 원)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비임금근로 여부		-0.144***	0.038	0.139***	0.190***	0.221***
연령		0.042	0.032	0.125***	0.150***	0.034
연령제곱		0	0	-0.001***	-0.001***	0.001
교육수준 (기준: 중졸 이하)	고졸	-0.177**	0.011	-0.036	-0.184***	-0.454***
	전문대졸	-0.182**	0.123	0.11	-0.007	-0.501***
	대졸 이상	-0.275**	0.116	0.112	0.008	-0.439**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0.069	0.002	-0.015	0.097	0.159
	이혼/사별	0.037	0.009	-0.009	0.037	0.171*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074*	-0.018	0.041	0.019	0.009
	호남권	-0.027	-0.053	-0.022	-0.07	0.039
	대경권	-0.115***	-0.065*	-0.028	-0.025	-0.049
	동남권	-0.019	-0.051**	-0.013	-0.04	-0.013
	강원·제주권	-0.134	-0.029	0.022	-0.02	-0.341***
잠재경력연수		-0.028	-0.009	-0.057***	-0.076***	-0.052
잠재경력연수 제곱		-0.000*	0	0.001***	0	-0.001**
6세 미만 자녀 수		-0.049	-0.041*	0.047*	0.064	-0.057
6~18세 자녀 수		-0.027	-0.031**	-0.024	0.01	0.017
월평균 생활비		0.046***	0.046***	0.056***	0.103***	0.165***
배우자 월소득		-0.018**	-0.001	-0.007	-0.025**	-0.01
산업 (기준: 농림어업)	광공업	0.819***	0.429***	0.218**	0.284***	0.241**
	유통서비스	0.702***	0.366***	0.116	0.210**	0.192
	생산자서비스	0.805***	0.461***	0.305***	0.412***	0.419***
	사회서비스	0.808***	0.424***	0.221**	0.299***	0.215*
	개인서비스	0.702***	0.318***	0.128	0.242***	0.209*
	기타	0.845***	0.469***	0.393***	0.525***	0.252
직업 (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직	0.063***	0.038*	0.050*	0.026	-0.063
	서비스/판매직	-0.017	-0.170***	-0.193***	-0.161***	-0.185***
	생산직	-0.018	-0.164***	-0.272***	-0.299***	-0.302***
	단순노무직	-0.082	-0.217***	-0.278***	-0.213***	-0.165**
근속연수		0	0.004***	0.013***	0.033***	0.045***
근속연수 제곱		0	-0.000***	-0.000***	-0.000***	-0.000***
상수항		-2.220***	-1.510***	-2.749***	-3.379***	-1.33
결정계수(Pseudo R ²)		0.134	0.207	0.304	0.295	0.217
표본 수		2,598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차년도(2017년) 자료.

〈부표 3-2〉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 남성(임금 Vs. 비임금)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액 (로그 만 원)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비임금근로 여부		-0.021	-0.004	0.084***	0.092***	0.205***
연령		0.019	0.134***	0.079***	-0.005	-0.070*
연령제곱		-0.001*	-0.002***	-0.001***	0	0.001***
교육수준 (기준: 중졸 이하)	고졸	0.215**	0.221***	0.084*	-0.003	-0.085
	전문대졸	0.354***	0.350***	0.151***	0.007	-0.072
	대졸 이상	0.409***	0.312***	0.202***	0.185**	0.026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0.339***	0.287***	0.279***	0.204***	0.161***
	이혼/사별	0.053	0.094	0.130***	0.076	0.028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074	0.002	0.017	-0.023	-0.054
	호남권	0.016	0.021	0.026	0.051	0.150**
	대경권	-0.062	-0.021	-0.064**	-0.062*	-0.128***
	동남권	0.103***	0.041	-0.015	-0.011	-0.073**
	강원·제주권	0.026	-0.009	-0.112**	-0.183***	-0.193**
잠재경력연수		0.047*	-0.035**	-0.022	0.017	0.035
잠재경력연수 제곱		0	0.001***	0	-0.001***	-0.001***
6세 미만 자녀 수		-0.018	-0.005	-0.01	-0.049*	-0.066*
6~18세 자녀 수		-0.024	0.017	0.037***	0.079***	0.036
월평균 생활비		0.164***	0.140***	0.150***	0.216***	0.331***
배우자 월소득		-0.026***	-0.021***	-0.020***	-0.025***	-0.038***
산업 (기준: 농림어업)	광공업	0.773***	0.364***	0.174***	0.158**	0.311***
	유통서비스	0.597***	0.173**	0.059	0.036	0.086
	생산자서비스	0.702***	0.339***	0.202***	0.132*	0.221**
	사회서비스	0.700***	0.312***	0.157**	0.054	0.017
	개인서비스	0.458***	0.092	-0.032	-0.023	-0.004
	기타	0.900***	0.498***	0.301***	0.09	0.12
직업 (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직	0.03	-0.005	0	-0.122***	-0.169***
	서비스/판매직	-0.198***	-0.175***	-0.131***	-0.197***	-0.185***
	생산직	-0.024	-0.105***	-0.178***	-0.253***	-0.307***
	단순노무직	-0.268***	-0.322***	-0.244***	-0.268***	-0.268***
근속연수		0.012***	0.013***	0.017***	0.023***	0.021***
근속연수 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상수항		-2.698***	-3.836***	-2.441***	-0.942**	-0.081
결정계수(Pseudo R ²)		0.174	0.269	0.32	0.296	0.195
표본 수		3,979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차년도(2017년) 자료.

〈부표 3-3〉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 여성(임금 Vs. 자영업자/가족종사자)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액 (로그 만 원)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		-0.306***	-0.058*	0.105***	0.177***	0.345***
무급가족종사자		-0.269***	-0.063	0.120***	0.164**	0.216**
연령		0.014	0.032	0.112***	0.182***	0.107
연령제곱		0	0	-0.001***	-0.001***	0
교육수준 (기준: 중졸 이하)	고졸	-0.179**	-0.031	-0.018	-0.186***	-0.407***
	전문대졸	-0.15	0.082	0.139**	-0.044	-0.447***
	대졸 이상	-0.231	0.061	0.165*	-0.041	-0.476**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0.034	-0.085	-0.136**	-0.13	-0.146
	이혼/사별	0.01	-0.018	-0.005	0.024	0.097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106**	-0.037	0.02	-0.008	0.007
	호남권	-0.024	-0.048	-0.039	-0.048	0.106
	대경권	-0.109**	-0.094***	-0.001	0.014	0.022
	동남권	-0.019	-0.050*	-0.02	-0.061	-0.073
	강원·제주권	-0.292***	-0.112*	-0.072	-0.137	-0.405***
잠재경력연수		-0.009	-0.009	-0.049***	-0.101***	-0.098**
잠재경력연수 제곱		-0.001***	0	0.000**	0.000*	0
6세 미만 자녀 수		-0.049	-0.058**	0.037	0.087*	-0.105
6~18세 자녀 수		-0.028	-0.029**	-0.023	0.013	0.064*
월평균 생활비		0.073***	0.051***	0.067***	0.114***	0.188***
배우자 월소득		0.003	0.014*	0.017**	0.018*	0.036***
산업 (기준: 농림어업)	광공업	0.601***	0.314***	0.065	0.075	0.146
	유통서비스	0.519***	0.247***	-0.036	-0.022	-0.014
	생산자서비스	0.626***	0.351***	0.159**	0.205**	0.209
	사회서비스	0.640***	0.336***	0.072	0.109	0.066
	개인서비스	0.501***	0.184**	-0.052	-0.004	0.006
	기타	0.641***	0.446***	0.220**	0.292*	0.068
직업 (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직	0.083***	0.073***	0.057*	0.077	0.017
	서비스/판매직	0.019	-0.106***	-0.158***	-0.136**	-0.168**
	생산직	0.112*	-0.03	-0.223***	-0.260***	-0.301***
	단순노무직	-0.032	-0.128***	-0.221***	-0.167***	-0.118
근속연수		0	0.004***	0.010***	0.026***	0.031***
근속연수 제곱		0	-0.000***	-0.000***	-0.000***	-0.000***
상수항		-1.791***	-1.459***	-2.492***	-3.811***	-2.621**
결정계수(Pseudo R ²)		0.171	0.199	0.297	0.278	0.191
표본 수		2,826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차년도(2017년) 자료.

〈부표 3-4〉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 남성(임금 Vs. 자영업자/가족종사자)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액 (로그 만 원)		1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90%분위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		-0.352***	-0.200***	-0.044*	-0.016	0.115**
무급가족종사자		-0.534**	-0.540***	-0.173***	0.0002	0.034
연령		0.008	0.119***	0.092***	-0.011	-0.067
연령제곱		-0.001	-0.001***	-0.001***	0	0.001***
교육수준 (기준: 중졸 이하)	고졸	0.215*	0.262***	0.087*	-0.031	-0.140**
	전문대졸	0.412***	0.417***	0.161***	-0.001	-0.114
	대졸 이상	0.416**	0.401***	0.208***	0.175**	-0.024
혼인상태 (기준: 미혼)	유배우자	0.156**	0.234***	0.231***	0.158***	0.113**
	이혼/사별	-0.02	0.091	0.102**	0.057	0.031
거주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043	-0.011	-0.002	-0.034	-0.06
	호남권	-0.002	0.047	0.043	0.031	0.1
	대경권	-0.149**	-0.076**	-0.067**	-0.042	-0.138***
	동남권	0.091**	0.024	-0.012	-0.003	-0.089**
	강원·제주권	-0.107	-0.081	-0.118**	-0.175***	-0.198***
잠재경력연수		0.053*	-0.025	-0.029**	0.019	0.028
잠재경력연수 제곱		-0.001	0.001**	0	-0.001***	-0.001***
6세 미만 자녀 수		0.006	0.032	0.014	-0.035	-0.06
6~18세 자녀 수		-0.014	0.021	0.053***	0.085***	0.04
월평균 생활비		0.199***	0.167***	0.152***	0.198***	0.327***
배우자 월소득		-0.004	-0.006	-0.012***	-0.016***	-0.028***
산업 (기준: 농림어업)	광공업	1.233***	0.534***	0.251***	0.228***	0.307***
	유통서비스	1.155***	0.400***	0.163***	0.130**	0.104
	생산자서비스	1.209***	0.477***	0.279***	0.220***	0.245**
	사회서비스	1.202***	0.492***	0.232***	0.115*	0.009
	개인서비스	0.828***	0.175**	-0.006	0.034	-0.011
	기타	1.363***	0.646***	0.383***	0.174***	0.122
직업 (기준: 관리/전문직)	사무직	0.026	-0.013	0	-0.100**	-0.159**
	서비스/판매직	-0.310***	-0.230***	-0.186***	-0.205***	-0.201***
	생산직	0.033	-0.058*	-0.182***	-0.247***	-0.312***
	단순노무직	-0.218***	-0.364***	-0.278***	-0.276***	-0.281***
근속연수		0.009***	0.009***	0.016***	0.022***	0.021***
근속연수 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상수항		-3.154***	-3.868***	-2.752***	-0.821*	-0.087
결정계수(Pseudo R ²)		0.203	0.272	0.316	0.287	0.179
표본 수		4,039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0차년도(2017년) 자료.

제 4 장

여성 자영업 종사자들의 이행 분석 : 생애주기 관점으로

제1절 연구의 배경

한국 여성들의 자영업 부문(무급가족종사자 또는 자영업주) 진입은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사건과 관련이 높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 중의 여성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8월 현재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87%가 여성으로 나타나 무급가족종사는 여성화된 고용의 한 형태가 되었다(통계청, 2018). 생애주기에 따라 임금근로에서 이탈(exit)하여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한국 여성고용의 중요한 특성이며, 무급가족종사자의 여성화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다른 OECD 국가들의 여성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 또는 임시직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임금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점이다(OECD, 2007).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자본 창업이 경력단절을 가진 여성들에 경제활동의 재진입(또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하나의 선택)을 위한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기에, 여성 자영업의 생존율에 대한 관심이 높다(박미현·정영순, 2011; 임은의 외, 2015).

이에 경제활동참여의 한 형태로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자영업주로의 진입이 한국여성들에게 생애주기상으로 경제활동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인지 종단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여성 자영업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주의 구분 없이 자영업주로서만 여성들의 자영업 진입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자영업 이후 임금근로자,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는지, 이러한 이행에 가족력과 직업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데이터 1-20차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 최초 진입 이후부터 축적해온 직업력과 생애주기상의 사건들을 반영하는 가족력이 여성 개인의 자영업 부문(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으로의 진입 및 이탈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멀티레벨 이산시간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실업,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자영업으로의 진입(4가지 이행)과 이탈(4가지 이행), 그리고 임금, 실업,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진입(3가지 이행)과 이탈(3가지 이행) 등 총 14가지 이행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1. 여성의 생애주기와 자영업 진입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높고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간의 이동이 활발하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남성의 자영업 진출로 인해(성지미 & 안주엽, 2004), 자영업 진입에 관한 연구들은 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남성 임금근로자가 어떻게 자영업으로 이행하게 되는지, 이들에게 자영업이 어떻게 임금근로의 대안으로 선택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자영업으로의 진입이 임금근로자 외의 고용상태에 있는 잠재적 노동자에게 노동시장 진입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자영업이 실업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탈출구(안주엽, 2000)이

거나 장기간의 비경제활동을 벗어나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류재우·최호영, 2000). 특히 류재우·최호영(2000)은 임금근로자들 외에도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미취업자들의 자영업 진입 확률이 높은 것을 보여주며, 자영업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노동력의 대부분이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지거나 미취업 사이를 오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여성의 노동시장 내 고용상태 전환은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사건과 관련성이 높고, 생애주기와 연결되어 남성에 비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 중의 여성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8월 현재 전체 무급가족종사자의 87%가 여성으로 나타나 무급가족종사는 여성화된 고용의 한 형태가 되었다(통계청,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자영업 부분 진입과 이탈에 관한 종단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진성·장지연(2001)은 여성의 생애주기가 종사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6년 6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 1001명을 대상으로 여성이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를 선택하게 되는 요인을 다항로짓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혼인과 출산이 비임금근로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이며,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가 임금근로자로 일하던 여성에게 출산이나 결혼 등의 생애주기 사건 이후 새로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생애주기 사건이 비임금근로를 하던 여성의 근로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미(2002)는 노동패널 1998년 1차 조사에서 20~55세인 여성을 대상으로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어린 자녀의 존재와 자녀보육의 보조자 존재여부가 여성의 취업선택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지만 자영업선택에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임금근로는 여성의 자영업 선택 확률을 낮추고 자영업의 경우는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보였다. 가구의 높은 총소득 또한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보였다.

김주영(2010)은 여성가족패널 1차(2007년) 및 2차(2008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 전후의 일자리 변화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혼 전후로 일자리를 그만둔 대부분은 임금근로자이며 다시 재진입할 때는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진입하는 것을 보였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결정요인으로 배우자 월소득이 부의 효과를 가지며,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무직에 비해 여성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 수와 주택의 자산가치가 여성의 재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결혼기간과 지역의 고용률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영(2013)은 한국노동패널 1-11차를 활용하여 자영업 진입과 개인의 능력에 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영업자가 되는 사람은 능력의 양극에 있는 사람들이 될 확률이 높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능력 낮은 사람이, 여성의 경우에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1998-2008년 사이 능력이 낮은 사람과 능력이 높은 사람의 자영업 진입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능력이 자영업 소득과도 정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유경(2013)은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생애단계별 여성의 취업행태를 분석하였다. 15~49세 기혼여성 5,429명을 분석한 결과, 고용주일 경우 취업지속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용근로자로 나타났으며,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약 54%로 다른 종사상 지위에 취업지속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후로 무급가족종사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막내아 출산 전후 취업지속률은 임시근로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막내아 출산 전후로 동일한 종사상지위를 유지하는 비율은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순으로 높았다.

최은영(2016)은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2014년) 자료를 이용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프로필 경로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최소 5년 이상 경제활동참가가 어려우며 50대 초반 기혼여성 비임금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18-39세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45세 이후에 비임금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게 나

타났다. 직종으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40대 이전에는 전문 관리직, 40대 이후에는 생산직 종사자 비중이 높으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서비스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 여성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들의 이행

성지미·안주엽(2004)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차~제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 경험자 4,428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이 노동시장 퇴장 가교직과 노동시장 진입 가교직인지의 여부와 이러한 역할을 결정짓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퇴장 가교직의 비중이 진입 가교의 경우보다 높았으며, 남성이 상대적으로 진입 가교 일자리로 자영업을 활용하는 반면 여성에게 자영업은 퇴장 가교로써 활용되는 비중이 높았다. 프로빗 모형의 결과는 연령이 진입 가교직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을 낮추는 반면 퇴장 가교직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을 높였다. 남성일수록 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퇴장 가교직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임금근로로 복귀할 확률, 미취업으로 복귀하기보다는 진입 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장 가교직보다는 임금근로로의 복귀를 선택하였다. 한편 건강상 문제는 임금근로 복귀 가능성이 낮고 미취업을 택할 확률이 높아 진입 가교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퇴장 가교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민정(2017)은 한국노동패널자료 1998~2014년의 생애 취업 경험에 있는 여성 중 1998~2000년에 경력단절을 겪었지만 그 이전에 취업을 했던 124명을 대상으로 여성 베이비부머 노동시장 복귀 양상을 상용직 경력유지형, 지속적 경단 후 불안정노동형, 자영업 이후 미취업형, 지속적 무급가족종사자형, 장기미취업형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5가지 유형화 중 지속적 경단 후 불안정노동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으로 유형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기간이 짧고 배우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지속적 경단 후 불안정노동을 하거나 자영업 이후 미취업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첫 출산을 지연한 것이

상용직 경력유지형과 자영업 이후 미취업형이 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장기미취업형보다 상용직 경력유지형에서 출산 전 직종이 상용직인 비율이 높아 상용직 근로 경력을 가졌던 여성이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가 임시일용직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비임금근로자로서 자영업만으로 이행한 경우를 보는 사례가 다소 있지만, 이것을 동태적인 관점에서 이행을 추적한 경우는 없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영업 부문을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어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진입이 생애주기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3절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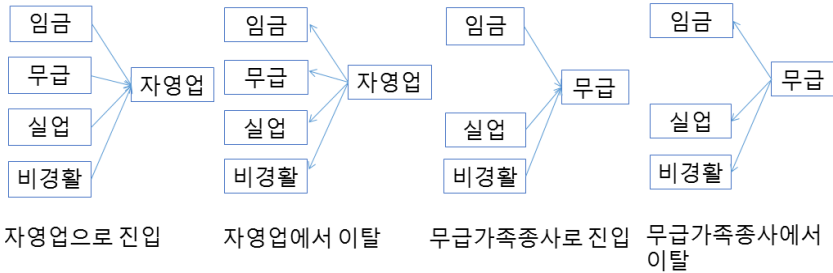
본 분석은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1998)부터 20차(2017)까지 포함된 1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20년간의 관측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존재하는 여성 8,131명을 분석한다.

멀티레벨 이산시간해저드모형(multilevel discrete-time event history analysis)을 이용하여 임금근로, 무급가족종사자⁴²⁾, 실업, 비경제활동에서 자영업으로의 진입 및 이들 4가지에서의 이탈, 그리고 임금근로, 자영업, 실업, 비경제활동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진입 및 이들 4가지에서의 이탈 등 총 14가지 이행을 분석한다(그림 4-1 참조).

이행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모형은 이산시간해저드모형(discrete-time hazard)이다. 이행(transition) 분석을 위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형은 콕스해저드모형

42) 경제활동상태는 한국노동패널의 현재 종사상지위 변수를 활용하였다.

[그림 4-1] 5가지 고용형태들 간의 14가지 이행



(Cox hazard model)이다. 사건사 분석은 관측기간 동안 모형의 종속변수인 관심사건(event, 예를 들어 실업 또는 결혼 등)이 발생하는 시간(time)을 분석하는 것으로 관측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risk of occurring the event)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사건 발생 위험에 놓여 있는 기간의 측정이 사건사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건발생의 기간 측정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시점의 측정이 가능한 연속시간의 생존 데이터(continuous-time survival data)인 경우 주로 비례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과 콕스해저드모형(Cox hazard model)을 사용한다. 반면, 사건발생이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떠한 시점에서든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측된 사건발생 시점이 한 달 또는 일 년 단위의 interval을 기준으로만 관측이 되어 정확한 사건발생 시기를 알 수 없는 데이터를 이산시간 생존데이터(discrete-time survival data)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 여성들의 일자리 만족도 변화에 관한 종단분석에서 서베이는 1년 단위로 실시되기에 t-1시점의 서베이의 만족도와 현재 t에서 만족도만 측정이 가능하다. 만족도의 변화는 관측기간인 1년 내의 어느 시점에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데이터상으로 변화라는 사건의 발생은 최소 측정 단위인 1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진 경우 이산시간해저드모형(discrete-time hazard)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각 경제활동상태들 간의 이행이다. 종속변수인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변화시점은 연-월-일 기준으로 직업력 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며, 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조사 이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 회고적 기록으로 시기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하

지만,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주요 통제변수들의 경우 매 조사시점인 연단위로 상태를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과 자가를 소유한 여부는 조사시점인 t 년도의 기준이며 만약 경제활동상태가 지난 조사와 현 조사 중간 지점에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시점에서의 가구소득 수준과 자가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의 측정 단위는 1년으로, 노동패널의 각 웨이브의 조사시기를 기준으로 변화 단위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노동패널이 1년 단위로 조사되기에 $t-1$ 인 1999년 2차 웨이브에서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한 여성이 t 인 2000년 3차 웨이브에서 임금근로자로 이행한 경우 1년을 변화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으로 측정한다. $t-1$ 인 1999년에서 처음 자영업을 시작한 여성이 $t+3$ 인 2003년에 임금근로자로 변한 경우 이 변화가 발생하는 데 걸린 시간은 4년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의 경우 관측기간 동안 이행이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 <표 4-1>의 각 여성별 에피소드(episodes)들을 보면 관측 기간 동안 한 여성이 최대 6개의 에피소드를 가진 것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한 개인이 만들어낸 사건 에피소드(episodes)들을 1단계로 보면, 이 에피소드들이 한 개인(2단계)에게 속하게 되는 2단계 멀티레벨형이 된다. 동일한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이행들은 그 여성이 가진 관측되지 않은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동일한 개인에게서 반복되는 에피소드들 간의 관측되지 않은 위험요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확률효과(Random effect)모형을 사용한다.

식 (4-1)은 t 에 대한 이산시간해저드(discrete-time hazard)를 나타내는 것으로 t 이전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여성 f 에 속한 에피소드들 e 의 시간 t 동안 사건(event)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리킨다.

$$h_{tfe} = \Pr(y_{tfe} = 1 | y_{sfe} = 0, s < t) \quad (4-1)$$

이는 이항변수로 구성된 종속변수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probability)을 나타낸다.

〈표 4-1〉 여성별 episodes 분포 : 이행분석 사용 관측치

N. of episodes	임금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실업	비경제활동
1	3,208	1,271	796	862	3,715
2	1,693	270	174	122	1,311
3	609	46	21	15	378
4	163	14	6	5	84
5	36	2			15
6	1				2
Total number of person-year observations	31,306	7,475	5,405	1,271	29,628
Total number of episodes	9,259	2,015	1,231	1,171	7,894
women	5,710	1,603	997	1,004	5,505

주 : 좌측절단(left-censoring)문제로 1차년도에 관측된 episodes는 제외함.
 자료 : 한국노동패널 1998-2017년도 자료.

$$\text{logit}(h_{tfe}) = \log\left(\frac{h_{tfe}}{1 - h_{tfe}}\right) = \alpha(t) + \beta'x_{tfe} + u_f \quad (4-2)$$

이항구조의 종속변수를 사건(event)의 지표로 사용하는 모델의 경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로짓(logit) 모델을 링크함수로 사용한다. 개인-기간 형태(person-period)로 데이터를 재구성하였을 때, 사건(event)인 y_{tfe} 가 t 시점에서 여성 f 에게 사건이 발생한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이 된다. u_f 는 여성 f 에 대한 확률효과이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_u^2 인 정규분포로 가정한다. 식 (4-2)가 보여주듯, 이 모델은 시간함수 t 와 시변 또는 시간불변 변수들을 포함한다. 계수 β 는 t 에서 사건이 발생할 로그오즈에 변수 X 의 한 유닛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한 t 내에서 β 영향은 고정된다고 가정한다.

〈표 4-2〉 경제활동상태 구분

경제활동			⑤비경제활동
①임금근로	비임금근로	④실업	
	②자영업		
	③무급가족종사자		

한 사건의 발생이 다른 사건의 발생 리스크를 제거하게 되는 경쟁리스크(competing ris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개의 모델을 각각 분석하며, 한 모델에서 종속변수로 보는 이행 이외의 이행들은 절단(censored)으로 처리한다. 다중공선성은 VIF로 확인하였고, 모든 모델에서 $VIF <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수 측정

종속변수는 이행(binary) 변수로 관측기간 동안 주 관심 이행 사건(총 14개의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측정하며, 이행이 일어났으면 1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0으로 코딩한다.

〈표 4-3〉에서 보듯이 주요 설명변수는 생애주기력을 반영하고 있는 가족력과 직업력이다. 가족력은 결혼한 적이 있는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코호트별 평균 첫 출산연령에 비해 각 여성의 출산이 이른 것이었는지를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총자녀 수는 연속형으로 포함하였다. 직업력은 생애 처음 임금근로에 진입한 이후 현재의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까지의 총일자리 경력을 측정한 것으로, 상용직으로 일했던 총기간 및 종사상 지위에 상관없이 일했던 총기간을 포함한다. 현재까지 가진 총일자리 수도 포함한다. 그 외의 통제변수로는 연령, 학력, 가구소득, 자가여부, 서울 거주여부 그리고 관측된 시기 등을 포함하였다. 〈표 4-4〉는 분석에 사용된 개인-기간 관측치(person-year observations)의 기초통계량이다.

〈표 4-3〉 변수 정의

종속변수		관측기간(interval time)동안 주 관심사건(interest event, 14개 이행 각각)의 이행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항지표로 이행이 일어나면 1, 일어나지 않으면 0
주요 설명 변수	가족력	ever-married(dummy)
		총자녀 수
		이른 첫 출산 유무(각 여성이 속한 cohort 평균에 비해)
		어린 자녀의 존재 유무: 18세 미만
	직업력	임금근로자로서 주된 일자리들의 총근무경력(상용직)
		임금근로자로서 주된 일자리들의 총근무경력(종사상지위 상관 없음)
		처음 노동시장 진입 이후 가진 총일자리 수
그 외 통제변수	연령 (15-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학력 (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이하, 4년제졸 이하, 석사 이상)	
	자가 여부(dummy)	
	가구소득(logged household income)	
	서울거주 여부(dummy)	
	시기(2000s, 2010s)	

〈표 4-4〉 개인-기간 관측치의 분포

(단위: %)

	임금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	비 경제활동
시기					
2000년대	44.4	43.7	48.9	67.9	47.6
2010년대	55.5	56.2	51.1	32.1	52.3
연령					
15-29세	24.7	4.3	2.4	31.0	12.0
30-39세	25.4	19.4	14.2	25.2	25.0
40-49세	24.7	28.8	27.3	23.1	15.5
50-59세	15.9	24.8	28.2	13.1	15.4
60세 이상	9.1	22.5	27.8	7.4	31.8
근무경력(상용직)	50.5	16.6	6.5	19.5	19.6
근무경력	72.1	26.4	10.1	28.6	28.3
총일자리 수	3.4	3.4	2.7	3.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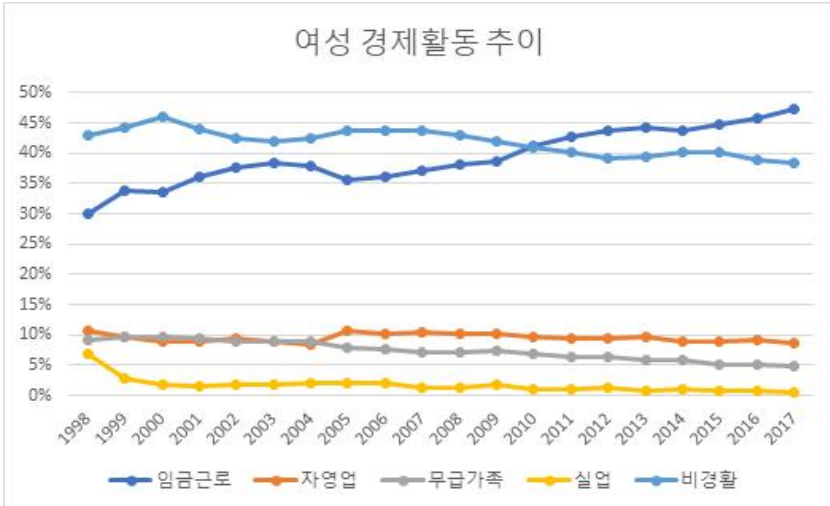
〈표 4-4〉의 계속

	임금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	비 경제활동
자녀 수	1.3	1.3	2.5	1.2	2.1
이른 첫 출산	22.2	24.6	25.4	19.2	23.4
18세 미만 자녀 유무	34.5	31.6	29.2	27.3	34.5
교육수준					
고졸 미만	4.2	11.4	9.8	5.5	14.5
고졸	52.5	59.5	78.9	61.5	57.1
전문대졸 이하	17.7	8.2	5.9	16.4	12.3
4년제졸 이하	22.2	17.8	4.9	15.0	14.5
석사 이상	3.2	2.8	0.2	1.4	1.5
결혼한 경험 있음	72.8	91.4	98.3	64.8	91.3
자가 여부	58.2	66.1	76.9	54.3	63.4
가구소득(logged)	8.08	8.07	8.01	7.66	7.73
서울거주 여부	23.1	18.1	14.0	22.9	19.2
Total number of person-year observations	31306	7475	5405	1271	29628

주: 좌측절단(left-censoring)문제로 1차년도에 관측된 episodes는 제외함.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17년도 자료.

[그림 4-2]는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들의 지난 20년간의 경제활동 추이를 보여준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제일 높았으나, 2010년 이후부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이를 추월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자영업자의 비중이 2000년 중반 이후 증가하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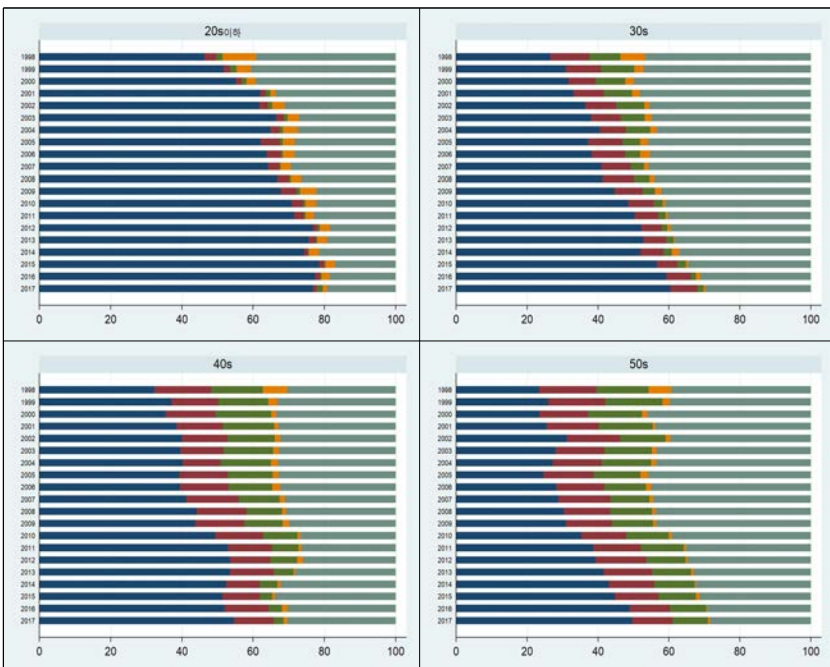
[그림 4-2] 여성 경제활동 변화 추이, 연도별 (person-year observ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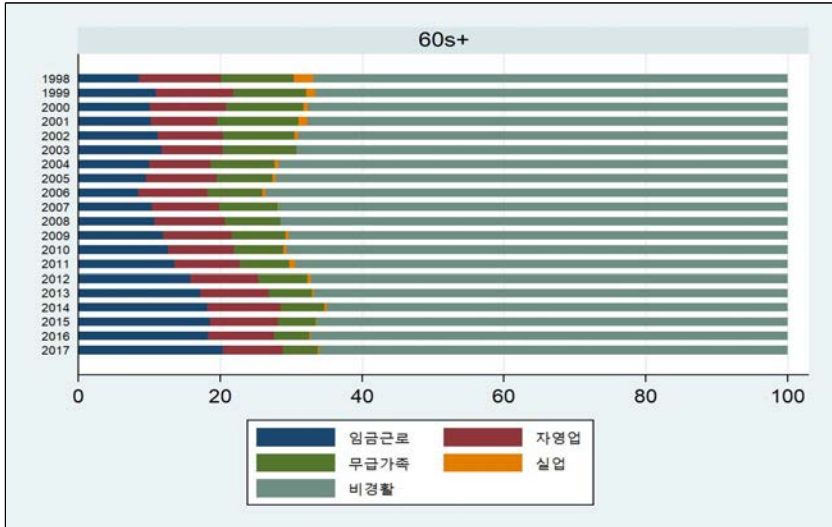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노동패널 1998-2017 중 본 분석에 사용된 대상.

[그림 4-3]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비중 추이



[그림 4-3]의 계속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17년도 자료.

[그림 4-3]에서 연령별 경제활동 비중을 보면, 20대 이하에서는 임금근로가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30대의 경우 비경제활동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40대부터는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가 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보인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30대를 기점으로 비경제활동으로 진입했다가, 자녀가 학령기 연령이 되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M자형 여성 고용의 특성(Bonneuil and Kim, 2017)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40-50대에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느는 것에서 이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경제활동 진입의 경로가 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지난 20년간 50대와 60세 이상 여성들의 임금근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분석결과

1. 자영업으로의 진입

<표 4-5>는 임금, 무급가족종사자,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할 오즈비(Odds ratio)를 보여주고 있다. 각 상태에서 머문 시간별 기준선해저드(부표 4-1 참조)를 보면, 4가지 상태 중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할 해저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순으로 자영업에 진입할 해저드가 높다. 임금근로에 있는 여성의 경우 8년차까지 자영업으로의 이행 해저드 확률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9년차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가 13년 이후 다시 증가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영업으로 진입할 해저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상태 또한 자영업 진입의 해저드는 각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감소한다.

가족력은 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자영업 진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많을수록 임금 근로자의 자영업 이행 오즈가 증가한다. 또한 자신의 코호트(cohort)의 평균 첫 출산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르게 첫 출산을 경험하고 현재 무급가족종사자로 있는 여성은 출산을 지연한 여성에 비해 자영업으로 이행할 오즈가 41% 증가한다. 여성의 은퇴에 관한 일 애착(work attachment) 이론(Hardy, 1991)에서 출산 지연은 여성의 일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는 여성이 출산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태도 때문에 출산이 늦어지며, 이러한 애착은 늦은 은퇴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지연된 출산은 서구국가들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생애주기 동안의 고용 지속성에 정(+)의 영향을 미쳐 은퇴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Pienta, 1999; Hank, 2004). 반면, 이른 출산을 한 경우 출산으로 인해 줄어든 노동시장 경쟁력을 보상하기 위해 중·고령기에 임금근로를 연장한다는 기회비용 이

론(opportunity cost)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Pienta, 1999; Hank, 2004; Kim and Rizzi, 2019). 본 모형에 확인된 이른 출산 경험이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기회비용 이론을 지지하는 하나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급가족종사자는 그렇지 않은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자영업으로 이행할 오즈가 약 22% 감소한다. 이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이전까지 어머니들에게 요구되는 자녀돌봄 시간이 많을 뿐 아니라 자녀교육에 필요한 교육비가 많이 드는 현실이 자영업 진입 확률을 낮추는 데 반영된 것이라 보여진다. 결혼한 비경제활동여성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영업으로의 이행이 54% 감소한다. 이는 결혼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정진성·장지연, 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축적된 직업력은 자영업으로의 진입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근무경력이 길수록 자영업자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졌던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자영업자로의 이행 오즈가 증가한다. 특히, 비경제활동자의 경우라도 현재는 노동시장에 있지 않지만 이전에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자영업으로 이행할 오즈가 증가한다.

그 외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또한 자영업 진입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 진입 확률이 증가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20대에 비해 30대의 경우 자영업으로 진입할 오즈가 2배 늘어나며, 40대에는 1.6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상태에 있는 40대의 경우 20대보다는 자영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 상태에서도 30대와 40대가 20대에 비해 자영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50대가 되면서 줄어들어 1.6배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으로 이행가능성은 줄어든다. 고졸학력의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졸 미만보다 자영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47% 줄어들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4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는 경제활동 상태의 여성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비경제활동여성의 자영업 진입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 높은 가구소득은 임금근로와 무급가족종사 그리고 비경제활동 여성들의 자영업 진입 가능성을 낮춘다.

2010년의 경우 2000년대의 비해 임금근로와 비경제활동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2010년의 자영업 진입 오즈(odds)가 2000년에 비해 45% 정도 낮으며, 비경제활동 여성의 경우 자영업으로 진입할 오즈는 2000년에 비해 2010년이 27% 낮다.

〈표 4-5〉 4가지 자영업으로의 이행 OR

Duration	임금→자영	무급→자영	실업→자영	비활→자영
가족력				
결혼해봄	0.82 (0.18)	0.74 (0.54)	0.84 (0.75)	0.46** (0.10)
자녀 수	1.24** (0.09)	0.97 (0.09)	0.70 (0.23)	1.05 (0.06)
이른 첫 출산	1.10 (0.14)	1.41* (0.29)	1.83 (1.06)	1.14 (0.14)
어린 자녀(18세 미만)	0.78* (0.11)	0.69 (0.19)	2.69 (1.85)	1.14 (0.17)
직업력				
주된 일자리 근무경력 (상용직)	1.00** (0.00)	1.00 (0.01)	1.01 (0.01)	1.00 (0.00)
주된 일자리 근무경력	1.00** (0.00)	1.00 (0.00)	0.99 (0.01)	1.00 (0.00)
일자리 수	1.13** (0.02)	1.01 (0.06)	1.19 (0.14)	1.13** (0.03)
연령				
20대 이하(r)				
30대	2.14** (0.41)	1.63 (1.03)	2.91 (2.53)	2.62** (0.52)
40대	1.65** (0.38)	1.89 (1.23)	8.25* (9.26)	2.81** (0.64)

〈표 4-5〉의 계속

Duration	임금→자영	무급→자영	실업→자영	비활→자영
50대	0.90	1.83	4.33	1.63*
	(0.26)	(1.24)	(5.81)	(0.45)
60대 이상	0.73	1.26	4.08	1.05
	(0.26)	(0.92)	(6.50)	(0.33)
교육수준				
고졸 미만(r)				
고졸	0.53**	0.57*	1.27	0.83
	(0.12)	(0.18)	(0.93)	(0.15)
전문대졸 이하	0.64	0.91	1.89	1.27
	(0.18)	(0.45)	(1.34)	(0.19)
4년제졸 이하	0.72	1.08	1.63	1.82*
	(0.20)	(0.52)	(2.59)	(0.57)
석사 이상	0.91	2.89		
	(0.34)	(3.48)		
자가 소유	1.14	0.77	1.95	1.34**
	(0.12)	(0.17)	(0.92)	(0.14)
가구소득(logged)	0.86**	0.79**	0.67	0.89*
	(0.06)	(0.08)	(0.17)	(0.05)
서울 거주	1.13	0.90	1.04	0.90
	(0.14)	(0.24)	(0.46)	(0.12)
Period				
2000s(r)				
2010s	0.55**	0.98	0.52	0.73**
	(0.06)	(0.21)	(0.33)	(0.08)
Random effect SD	1.04(0.14)**	0.73(0.36)	2.19(1.33)**	1.00(0.13)**
Log likelihood	-2291.5869	-632.69121	-174.56496	-2376.9217
총관측치(observations)	31306	5405	1271	29628

주: 가독성을 위해, 모델에 포함된 기준선택저드를 나타내는 duration 효과는 <부표 4-1>에 별도로 나타냄.

* p<0.1, ** p<0.05, 괄호 안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17년도 자료.

2. 자영업에서 이탈

자영업에서 임금근로, 실업 및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이행에 대한 기준 선해저드(부표 4-2 참조)는 기간의존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자영업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행 해저드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표 4-6 참조).

결혼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임금근로로의 이행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반면, 비경제활동 상태로의 이행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 비경제활동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는 한국 여성들의 고용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다만, 결혼을 했음에도 자영업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미혼의 경우보다 임금근로로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것은 이들 기혼여성에게 자영업이 임금근로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활동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많은 여성 자영업자일수록 자영업을 이탈하여 다른 형태의 경제활동 상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녀가 한 명 증가할수록 임금근로로 이행할 오즈는 13%, 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할 오즈는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의 근무경력은 여성자영업자에게 임금근로로 이행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행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근로자로 일했던 일자리가 하나 늘어남에 따라 임금근로자로 이행할 오즈는 13%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영업에서 벗어날 확률이 낮으며, 임금근로와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20대에 비해 이행할 오즈가 69% 감소하지만, 이는 50대의 경우에는 81%, 60대에는 90% 감소한다. 비경제활동으로의 진입 또한 30대는 45%, 40대에서 50대에선 60%대로 낮아지며, 60대에도 약 50% 수준으로 이행의 오즈가 감소한다. 높은 교육수준은 자영업자들이 무급가족종사와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할 오즈를 낮춘다. 4년제 졸업을 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

졸 미만인 경우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가 될 오즈가 약 70%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석사 이상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졸 미만 학력인 경우보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갈 오즈가 42% 낮아진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에서 임금근로로 이행할 오즈는 25%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오즈는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2000년대의 비해 자영업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의 자영업자는 2000년대의 자영업자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로 진입할 오즈는 47%, 실업은 55%,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진입할 오즈는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자영업에서 이탈 OR

Duration	자영→임금	자영→무급	자영→실업	자영→비활
가족력				
결혼해봄	0.65*	1.57	0.93	1.57**
	(0.17)	(1.18)	(0.59)	(0.33)
자녀 수	1.13*	1.21*	0.82	0.97
	(0.08)	(0.14)	(0.16)	(0.04)
이른 첫 출산	1.26	0.88	1.04	0.91
	(0.18)	(0.24)	(0.41)	(0.10)
어린 자녀(18세 미만)	1.10	0.91	0.96	1.09
	(0.19)	(0.28)	(0.41)	(0.14)
직업력				
주된 일자리 근무경력(상용직)	1.00*	0.98**	1.02	1.00
	(0.00)	(0.01)	(0.01)	(0.00)
주된 일자리 근무경력	1.00	1.00	0.99	1.00
	(0.00)	(0.01)	(0.01)	(0.00)
일자리 수	1.13**	0.91	1.05	1.00
	(0.03)	(0.06)	(0.07)	(0.02)
연령				
20대 이하(r)				
30대	0.31**	2.11	1.04	0.55**
	(0.08)	(1.82)	(0.75)	(0.11)

〈표 4-6〉의 계속

Duration	자영→임금	자영→무급	자영→실업	자영→비활
40대	0.33**	1.94	1.50	0.32**
	(0.09)	(1.72)	(1.14)	(0.07)
50대	0.19**	1.43	0.72	0.38**
	(0.06)	(1.32)	(0.65)	(0.09)
60대 이상	0.10**	0.78	0.42	0.46**
	(0.04)	(0.78)	(0.46)	(0.12)
교육수준				
고졸 미만(r)				
고졸	0.92	1.30		
	(0.24)	(0.60)		
전문대졸 이하	1.05	1.62	0.89	0.86
	(0.35)	(1.01)	(0.52)	(0.15)
4년제졸 이하	0.74	0.33*	0.61	0.91
	(0.24)	(0.22)	(0.33)	(0.13)
석사 이상	0.82		2.31	0.58*
	(0.36)		(1.55)	(0.19)
자가 소유	0.92	1.28	0.98	1.04
	(0.12)	(0.33)	(0.34)	(0.10)
가구소득(logged)	0.75**	1.27	0.76	0.82**
	(0.06)	(0.19)	(0.14)	(0.04)
서울 거주	1.24	1.10	0.99	1.10
	(0.19)	(0.35)	(0.41)	(0.13)
Period				
2000s(r)				
2010s	1.04	0.53**	0.45**	0.74**
	(0.14)	(0.14)	(0.18)	(0.07)
Random effect SD	0.79(0.21)**	1.22(0.36)**	0.00(0.16)	0.36(0.29)
Log likelihood	-1368.5511	-485.39538	-226.82618	-2084.2303
총관측치(observations)	7475	7475	7475	7475

주: 가독성을 위해, 모델에 포함된 기준선택제드를 나타내는 duration 효과는 <부표 4-2>에 별도로 나타냄.

* $p < 0.1$, ** $p < 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17년도 자료.

3.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진입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진입에 관한 기본해저드(부표 4-3 참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임금근로,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에서 무급가족종사자가 될 해저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참조). 기준해저드를 보면, 비경제활동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될 가능성이 제일 높으며, 다음으로 임금근로, 실업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한 비경제활동 여성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행이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확인된, 결혼이 비경제활동 여성의 자영업으로의 이행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자녀 수 한 명의 증가가 임금근로 여성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행 오즈를 1.6배 증가시키며, 비경제활동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행은 1.2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임금근로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할 오즈가 5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린 자녀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성지미, 2002; 최은영, 2016)을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음에도 현재 임금근로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다수의 여성들에 비해, 선택적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력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만 영향력을 보인다. 노동시장에서 상용직 일자리에서의 근무경력이 길수록 비경제활동 여성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종사상지위에 상관없이 축정한 근무경력은 오히려 무급가족종사가 되는 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졌던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비경제활동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할 오즈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사회·인구학적 통제요인 또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 젊을수록 실업자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30대의 실업자가 무급가족종사자가 될 가능성은 40대에

비해 약 5배($OR=1/0.21$), 50대 이상에 비해 약 11배($OR=1/0.09$) 높게 나타난다. 임금근로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할 오즈는 고졸일 경우 고졸 미만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높은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전문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 여성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행 오즈는 고졸 미만의 학력보다 낮았다. 즉 높은 교육수준이 비경제활동 여성들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동을 저해하는 반면, 임금근로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고졸 수준의 학력에서만 유의미할 뿐 그 이상의 고학력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표 4-7〉 무급가족종사자로 진입 OR

Duration	임금→무급	실업→무급	비경활→무급
가족력			
결혼해봄	2.04	-	2.48**
	(1.05)	-	(0.96)
자녀 수	1.63**	1.31	1.27**
	(0.21)	(0.43)	(0.08)
이른 첫 출산	1.29	0.87	1.04
	(0.30)	(0.57)	(0.16)
어린자녀(18세 미만)	0.47**	0.36	0.83
	(0.12)	(0.26)	(0.15)
직업력			
주된 일자리 근무경력(상용직)	1.00	1.07	1.01*
	(0.00)	(0.07)	(0.01)
주된 일자리 근무경력	1.00	0.93	0.98**
	(0.00)	(0.06)	(0.01)
일자리 수	0.97	0.96	0.93*
	(0.05)	(0.15)	(0.04)
연령			
20대 이하(r)			
30대	1.09		1.39
	(0.51)		(0.36)

〈표 4-7〉의 계속

Duration	임금→무급	실업→무급	비경활→무급
40대	1.25	0.21**	1.40
	(0.62)	(0.16)	(0.41)
50대	0.73	0.09**	0.80
	(0.41)	(0.10)	(0.27)
60대 이상	0.42		0.30**
	(0.30)		(0.12)
교육수준			
고졸 미만(r)			
고졸	2.87*		
	(1.65)		
전문대졸 이하	2.13	0.18	0.64**
	(1.45)	(0.21)	(0.12)
4년제졸 이하	1.07		
	(0.74)		
석사 이상	2.95		
	(2.64)		
자가 소유	1.40	2.06	1.17
	(0.31)	(1.33)	(0.17)
가구소득(logged)	1.32*	2.63**	1.13
	(0.19)	(1.20)	(0.09)
서울 거주	0.59*	1.43	0.68**
	(0.17)	(1.02)	(0.13)
Period			
2000s(r)			
2010s	0.41**	1.07	0.65**
	(0.10)	(0.81)	(0.10)
Random effect SD	1.78(0.30)**	0.00(0.47)	0.97(0.21)**
Log likelihood	-794.67492	-57.389714	-1453.4215
총관측치(observations)	31306	824	29628

주: 가독성을 위해, 모델에 포함된 기준선택저드를 나타내는 duration 효과는 <부표 4-3>에 별도로 나타냄.

* p<0.1, ** p<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17년도 자료.

임금근로와 실업자 상태를 벗어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거주는 임금근로와 비경제활동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무급가족종사자로 진입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임금근로자가 무급가족종사자가 될 오즈는 2010년대에 60% 낮고,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무급가족종사자가 될 확률은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이탈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이행에 대한 기준선택지드(부표 4-4 참조)는 기간의존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실업으로의 이행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표 4-8 참조).

가족력 관련 요인들은 결혼 이외에는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이탈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혼은 무급가족종사자들의 임금근로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경우 싱글에 비해 무급가족상태를 벗어나 임금근로로 이행할 오즈를 84% 감소시킨다.

직업력은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임금근로로의 이행에 결정요인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에서 종사상지위에 상관없이 근무경력이 길수록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임금근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가졌던 일자리 수가 하나 증가함에 따라 임금근로자로 이행할 오즈가 9% 증가된다. 반면, 주된 일자리 근무경력이 길수록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무급가족종사자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20대에 비해, 30대에는 60%, 40대에는 75%, 50대는 65% 그리고 60대에는 56%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 오즈가 감소한다. 학력은 무급가족종사자들이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전문대졸 이상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오즈가 고졸 미만에 비해 1.5배, 4년제의 경우 약 4배 높게 나타난

다. 자가 소유는 무급가족종사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무급가족종사자를 벗어나 임금근로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될 가능성을 낮춘다. 반면, 서울 거주가 무급가족종사자들의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는 무급가족종사자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표 4-8〉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이탈 OR

Duration	무급→임금	무급→실업	무급→비경활
가족력			
결혼해봄	0.16**	0.74	1.38
	(0.08)	(1.11)	(0.57)
자녀 수	1.01	0.81	1.02
	(0.10)	(0.28)	(0.05)
이른 첫 출산	1.26	1.32	0.92
	(0.23)	(0.78)	(0.12)
어린자녀(18세 미만)	1.07	0.56	0.92
	(0.24)	(0.38)	(0.16)
직업력			
주된 일자리 근무경력 (상용직)	1.00	1.02	1.01
	(0.00)	(0.05)	(0.01)
주된 일자리 근무경력	1.01**	0.98	0.99**
	(0.00)	(0.05)	(0.01)
일자리 수	1.09*	0.86	1.00
	(0.05)	(0.16)	(0.04)
연령			
20대 이하(r)			
30대	1.13	1.90	0.40**
	(0.49)	(2.51)	(0.12)
40대	1.15	0.71	0.25**
	(0.53)	(1.02)	(0.08)

〈표 4-8〉의 계속

Duration	무급→임금	무급→실업	무급→비경활
50대	0.61	0.27	0.35**
	(0.31)	(0.44)	(0.12)
60대 이상	0.33*	0.26	0.44**
	(0.20)	(0.51)	(0.16)
교육수준			
고졸 미만(r)			
고졸	0.71		1.33
	(0.26)		(0.30)
전문대졸 이하	0.43	0.52	1.54*
	(0.22)	(0.45)	(0.36)
4년제졸 이하	1.14		4.40*
	(0.52)		(3.50)
석사 이상	3.53		
	(3.12)		
자가 소유	0.88	0.78	0.76**
	(0.16)	(0.46)	(0.10)
가구소득(logged)	0.79**	1.66	0.87**
	(0.07)	(0.66)	(0.06)
서울 거주	0.99	2.07	1.64**
	(0.22)	(1.25)	(0.23)
Period			
2000s(r)			
2010s	0.90	0.37	0.74**
	(0.18)	(0.28)	(0.10)
Random effect SD	0.01(0.19)	0.79(0.94)	0.01(0.09)
Log likelihood	-666.98908	-92.64109	-1310.0792
총관측치(observations)	5405	5405	5405

주: 가독성을 위해, 모델에 포함된 기준선택저드를 나타내는 duration 효과는 <부표 4-4>에 별도로 나타냄.

* $p < 0.1$, ** $p < 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17년도 자료.

제5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1~20차년도(1998-2017)에 포함된 1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멀티레벨 이산시간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가족력과 직업력이 여성의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진입 및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여성 생애주기적 노동이행에 관한 연구들이 자영업만을 다루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분석은 무급가족종사를 자영업과 구분하였다. 생애주기 동안 축적된 여성의 가족력과 노동시장 경력이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실업,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자영업으로의 진입(4가지 이행)과 이들 4가지 유형에서 자영업으로의 이탈(4가지 이행), 그리고 임금, 실업,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진입(3가지 이행)과 그리고 이들 3가지 유형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탈(3가지 이행) 등 총 14가지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력을 구성하는 요인 중 결혼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자영업으로의 이행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무급가족종사로 진입하는 데는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인 경우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임금근로로의 이행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이는 결혼을 했음에도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이들 자영업 부문은 여성이 임금근로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활동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코호트(cohort)별 평균 첫 출산 연령보다 이른 출산을 한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론은 여성이 생애주기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줄어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임금근로를 연장한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른 출산은 무급가족종사에서 노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발생하는 자영업과 임금근로로의 이행에

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분석의 결과는 자영업으로의 이행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 임금근로로의 이행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른 출산을 경험하고 현재 무급가족종사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금근로의 진입보다는 자영업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현재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존재는 현재 임금근로를 하는 여성들의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행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여성에게 비경제활동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는 한국 여성들의 생애주기적 고용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여전히 임금근로 시장에 머물러 있는 어머니들의 선택효과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노동시장에서 축적된 임금근로 경력은 비경제활동에서 벗어나 무급가족종사자가 될지 자영업자가 될지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축적된 일자리 수가 많은 것은 자영업자로 경제활동상태에 진입할 경우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로 진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길수록 여성자영업자들은 다시 임금근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무급종사자로의 진입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가족력과 직업력은 여성의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행을 결정하는 요인이지만, 각각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생애사건을 맞이하기 이전부터 노동시장에서 축적해온 개인의 경력에 따라 자영업 부문 진입과 이탈 가능성이 달라지며, 이탈의 방향성 또한 달라지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영업 진입 이전 노동시장에서 축적한 상용직으로의 근무경력이 자영업을 벗어나 임금근로로 재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영업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로서의 과거 노동시장 경력이 여성자영업자들의 소득활동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표 4-1〉 4가지 자영업으로의 이행 OR 기준선택저드

Duration	임금→자영	무급→자영	실업→자영	비활→자영
D1	0.03**	0.42	0.02	0.02**
	(0.02)	(0.41)	(0.04)	(0.01)
D2	0.03**	0.26	0.02*	0.02**
	(0.02)	(0.27)	(0.04)	(0.01)
D3	0.03**	0.19		0.02**
	(0.02)	(0.20)		(0.01)
D4	0.03**	0.19		0.01**
	(0.02)	(0.21)		(0.01)
D5	0.03**	0.22		0.01**
	(0.02)	(0.23)		(0.01)
D6	0.03**	0.22		0.01**
	(0.02)	(0.24)		(0.01)
D7	0.03**	0.07**		0.01**
	(0.02)	(0.08)		(0.01)
D8	0.03**	0.13*		0.01**
	(0.02)	(0.16)		(0.01)
D9	0.01**	0.11*		0.01**
	(0.01)	(0.13)		(0.01)
D10	0.01**	0.27		0.01**
	(0.01)	(0.30)		(0.01)
D11	0.03**	0.48		0.01**
	(0.02)	(0.57)		(0.01)
D12	0.02**	0.06**		0.00**
	(0.02)	(0.08)		(0.00)
D13	0.04**			0.00**
	(0.03)			(0.00)
D14	0.04**			0.00**
	(0.03)			(0.00)
D15	0.02**			
	(0.02)			
Log likelihood	-2291.5869	-632.69121	-174.56496	-2376.9217
총관측치(observations)	31306	5405	1271	29628

주: <표 4-5>의 주요 변수 및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기준선택저드

* p<0.1, ** p<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17년도 자료.

〈부표 4-2〉 자영업에서 이탈 OR 기준선택저드

Duration	자영→임금	자영→무급	자영→실업	자영→비활
D1	1.29	0.00**	0.12	1.20
	(0.81)	(0.00)	(0.20)	(0.54)
D2	1.55	0.00**	0.07	0.88
	(1.01)	(0.00)	(0.12)	(0.41)
D3	1.07	0.00**	0.07	0.84
	(0.72)	(0.00)	(0.12)	(0.41)
D4	0.93	0.00**	0.08	0.63
	(0.64)	(0.00)	(0.14)	(0.31)
D5	1.15	0.00**	0.07	0.67
	(0.81)	(0.00)	(0.13)	(0.35)
D6	0.57	0.00**	0.11	0.90
	(0.43)	(0.00)	(0.20)	(0.47)
D7	0.60	0.00**	0.03*	0.59
	(0.48)	(0.00)	(0.06)	(0.33)
D8	0.94	0.00**	0.19	0.67
	(0.74)	(0.00)	(0.35)	(0.38)
D9	0.86	0.00**		0.45
	(0.71)	(0.00)		(0.28)
D10	1.26	0.00**		0.42
	(1.05)	(0.00)		(0.29)
D11	0.92			1.07
	(0.84)			(0.66)
D12	1.28			0.13*
	(1.19)			(0.15)
D13	0.56			0.35
	(0.70)			(0.31)
D14	0.74			0.69
	(0.92)			(0.55)
D15	1.47			0.37
	(1.38)			(0.30)
Log likelihood	-1368.5511	-485.39538	-226.82618	-2084.2303
총관측치(observations)	7475	7475	7475	7475

주: <표 4-6>의 주요 변수 및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기준선택저드.

* p<0.1, ** p<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17년도 자료.

〈부표 4-3〉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진입 OR 기준선택저드

Duration	임금→무급	실업→무급	비경활→무급
D1	0.00**	0.00**	0.00**
	(0.00)	(0.00)	(0.00)
D2	0.00**		0.00**
	(0.00)		(0.00)
D3	0.00**		0.00**
	(0.00)		(0.00)
D4	0.00**		0.00**
	(0.00)		(0.00)
D5	0.00**		0.00**
	(0.00)		(0.00)
D6	0.00**		0.00**
	(0.00)		(0.00)
D7	0.00**		0.00**
	(0.00)		(0.00)
D8	0.00**		0.00**
	(0.00)		(0.00)
D9			0.00**
			(0.00)
D10			0.00**
			(0.00)
D11			0.00**
			(0.00)
D12			0.00**
			(0.00)
Log likelihood	-794.67492	-57.389714	-1453.4215
총관측치(observations)	31306	824	29628

주: <표 4-7>의 주요 변수 및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기준선택저드.

* p<0.1, ** p<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17년도 자료.

〈부표 4-4〉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이탈 OR 기준선해저드

Duration	무급→임금	무급→실업	무급→비경활
D1	2.03	0.00**	0.72
	(1.69)	(0.00)	(0.44)
D2	1.70	0.00**	0.59
	(1.48)	(0.00)	(0.37)
D3	1.37	0.00**	0.48
	(1.21)	(0.00)	(0.31)
D4	1.37	0.00**	0.59
	(1.25)	(0.00)	(0.39)
D5	1.36	0.00**	0.60
	(1.26)	(0.00)	(0.40)
D6	0.63	0.00**	0.63
	(0.63)	(0.00)	(0.42)
D7	1.44		0.67
	(1.38)		(0.45)
D8	0.25		0.48
	(0.34)		(0.34)
D9	1.33		0.44
	(1.36)		(0.32)
D10	1.03		0.25
	(1.17)		(0.21)
D11	0.68		1.10
	(0.91)		(0.79)
D12	0.56		0.55
	(0.75)		(0.45)
D13	1.90		0.51
	(2.05)		(0.44)
D14			0.20*
			(0.17)
Log likelihood	-666.98908	-92.64109	-1310.0792
총관측치(observations)	5405	5405	5405

주: <표 4-8>의 주요 변수 및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기준선해저드.

* $p < 0.1$, ** $p < 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17년도 자료.

제 5 장

여성 자영업 종사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실태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은 애매한 노동 시장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은 보통 법적으로 사업체를 소유한 자영업자가 되지만 무급가족종사자는 비공식적으로 사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이 자영업을 영위할 때 누가 자영업자가 되고 무급가족종사자로서 활동하고 책임을 수행하게 되는가는 사회경제와 가족이 남녀에게 부여하는 성역할 규범과 그를 둘러싸고 구축된 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필요성과 욕구 증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임금 노동 시장 조건으로 인해 자영업자 규모는 2000년대 이후 증가하여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여성 임금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무급가족종사자 규모는 크게 감소해왔다. 1963년 취업자 가운데 31.22%가 무급가족종사자였다면 2018년 4.11%만이 무급가족종사자로 남아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영업 구조 조정의 여파로 자영업 규모가 감소하면서 무급가족종사자도 자연스럽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도 및 정책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사회보험료 감면과 같은 비공식 고용의 공식화 정책이나 임

금 근로를 장려하는 일자리 보조금 정책은 지하경제 종사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표적 대상으로 삼았지만, 무급가족종사자의 임금노동자로의 전환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자영업자의 근로자성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전통적이고 엄격한 의미에서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고용 형태가 등장하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노동자와 실질적으로 다름없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영업자도 마땅히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가족 사업에 근로계약 없이 종사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인 가사사용인과 마찬가지로 노동법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로 인해 제도적 사회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대상으로 편입되었지만 그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근로 이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안전망 편입이 쉽지 않다. 자영업자 실업 급여와 부조 지급이 쟁점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급가족종사자는 보호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남도가 현재 설계하는 농민 대상 기본소득인 농민수당 정책은 ‘농가’ 중심으로 기존 농업정책을 답습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여성 농민을 포함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 구성원인 여성과 청년 농민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⁴³⁾는 반발을 샀다.

Philipps(2008)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수행하는 노동이 임금 노동이나 무급 가사노동과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시장과 가족 간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시장과 가족 사이에 걸쳐 있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에 특별한 관심과 분석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이 수행하는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 노동은 이러한 이유로 온당한 경제 활동으로서의 대우와 사회적 보호에서 소외되어 왔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정책의 올바른 수립을 위해 필요한

43) 「농민수당 지급대상서 여성 배제 웬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4776.html#csidxf9554d0ceb7c016a25e4ce85ba68ba5>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특수한 노동 실태와 사회적 보호 현황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비임금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과 사회적 보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 연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의 비중은 유사한 수준의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다. 문유경(2002)은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이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자영업의 비중 증가는 여성 자영업자의 증가에 기인한 데 비해, 한국에서의 자영업 비중 증가는 남성 자영업자의 가파른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전병유(2003)는 이러한 배경으로 경제 침체기에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근로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생계를 위한 창업이 활발해졌음을 들고 있다.

임금 근로를 선택할 수 없는 여성은 대안적인 경제활동으로 자영업/무급가족종사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자영업은 중고령자의 경제 활동과 분리 불가능하다. 임금 근로에서 퇴장된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생애주기적 경제활동 참가의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이다(이승렬·손연정, 2018). 특히 중고령자 여성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요구가 등장했을 때 무급가족종사자로 지위가 전환되기도 한다. 최경덕·안태현(2019)은 고령 화폐ذ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을 돌보는 행위는 돌봄 제공자의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수발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 그러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영·심경수(2014)도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를 수발하고 있는 중·고령층 여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를 수발하고 있는 여성은 임금노동이나 고용주/자영업이 아니

라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의 돌봄 역할과 양립하기 적절한 유연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돌봄과 일 양립 필요가 없는 여성의 경우도, 가족 구성원이 같은 일에 종사할 때 남성은 자영업자로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로 정의되기 쉽다. 은기수(2012)는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 남성의 대부분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종사상의 지위가 파악되는 반면,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가족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하고, 확장하는 데 가시적으로나 비가시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서구 연구들은 가족 기업에서 여성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감춰진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임노동이 대규모로 형성되기 오래전,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과 시장이라는 공적 영역의 분리와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을 때 여성은 남성 가장이 이끄는 가족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가족 기업에서 여성이 비가시화되고 등록되지 않았던 것은 사회와 경제 전반에서 성별에 따라 남녀에게 구별되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던 제약 때문이기도 하다. 19세기 영국에서만 해도 여성은 배우자의 보호하에 있어야 했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 기업에서 사실상 파트너로서 일하면서도 기업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유할 수 없었다. 유럽에서도 20세기에 이러한 실태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Colli et al. 2003). 여성이 가족 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계약, 보상, 사회적 혜택을 받지 않고 일을 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결코 가족 기업의 소유주나 피고용인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자본주의적 경제 관계가 지배적이 된 오늘날 가족 기업 안에서 기업의 소유·경영자와 실제 노동을 수행하는 자의 관계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 기업에서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역할은 공식적인 지위나 소득 측면에서 온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Rodriguez-Modrono(2017)는 2011년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소규모 가족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39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전통적인 성별 분업 체계 아래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에 부여된 ‘중립성(neutrality)’으로 인해 여성의 역할은 가족의 일을 도와준다는 종속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했다. 가족 기업에서 여성 노동의 비공식적 성격은 인력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직무 특성 때문이 아니라, 가족 기업의 생산 구조가 여성 노동을 보조적인 유연한 노동으로 상정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여성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항상 대기 중이라는 관념으로 인해, 가족 기업 안에서 남성이 근로계약과 보상으로 일을 할 때 여성은 근로계약과 보상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 기업이 무급가족종사자 여성을 동원하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불경기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피고용인을 활용하기보다는 가족 노동을 활용한다. 한편 가족 기업 안에서 여성 노동 경험은 이질적일 수 있다. 여성은 가족 기업 안팎에의 미래의 일자리를 찾고자 경험과 경력을 쌓기 위해 임시적으로 그러한 종속적 역할을 자발적으로 떠안고 있다는 점도 밝혀냈다. 가족 기업에서 여성의 주변부적인 역할이 항상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로 인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족 기업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는 다양한 이유로 드러나기 어렵다. Rodriguez-Modrono(2017)에 따르면 비즈니스와 가족 간의 분업하에서 여성은 항상 가족 안에 위치되었고 조력자로서 비공식적 지원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가족 기업에서 여성 노동의 저평가는 여성 노동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노동은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분이 아니었고 돌봄 제공자로의 ‘자연스러운’ 역할에 부합하도록 행동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 기업에서 여성의 노동은 가족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마땅히 봉사해야 할 일로 여겨졌던 것이다. 둘째, 여성을 노동시장 안으로 통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법적, 문화적 제약이 존재했고, 이러한 제약이 가족 기업에서 여성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official recording)’ 인정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노동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고 이에 기반해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자영업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여성 자영업자

가 실업과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보호 논의는 임금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병희 외(2016)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28.0%이다. 사업장 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의 미가입 확률은 63.8%로 사업장 등록증이 있는 사업장의 미가입 확률 20.8%보다 높다. 임시근로자(61.4%)와 일용 근로자(76.6%)의 국민연금 미가입률보다는 낮지만 상용근로자(5.2%)보다는 높다. 재정패널 자료에 따르면 무급가족종사자의 87.9%가 공적연금 미가입 상태에 있었다. 안종순(2015)은 자영업자의 하위그룹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위험 대응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고용주,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다. 안종순(2017)은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이 사회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여성보다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정책 논리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호는 오랫동안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호 법제화가 가능해졌다. 오종은(2015)은 무급가족종사자의 특성을 밝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무급가족종사자의 20.3%가 산재보험제도 가입에 대한 긍정적 의사가 있었음을 밝혔다.

제3절 연구 자료와 방법

본 절에서 다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와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규모와 특성을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는 1-17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

고,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증가세는 주춤하고 무급가족종사자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을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둘째,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근로 실태를 근로시간과 일자리 이동 계획과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사회보호 실태를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공적연금 가입과 혜택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제4절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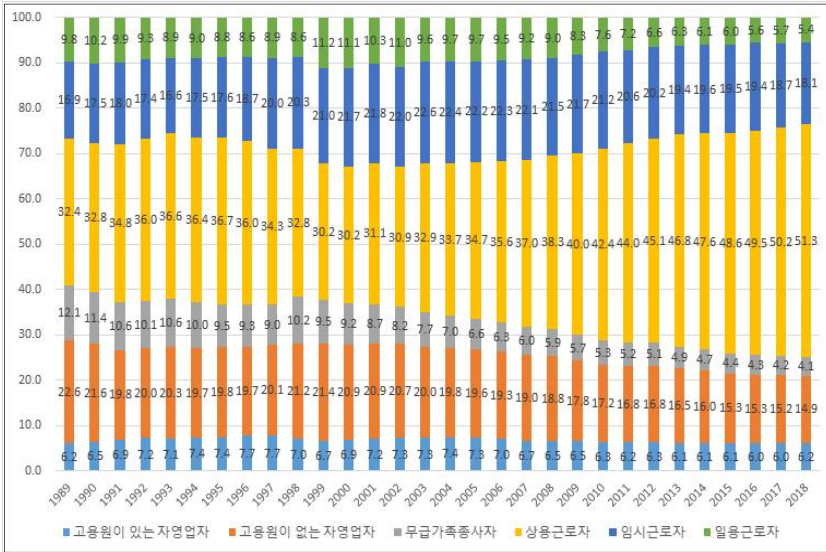
1.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규모와 특성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도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영세한 저소득층이며, 근로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서비스업 내에서도 도·소매판매 및 음식·숙박업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업종 특성으로 여성 자영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자영업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도·소매판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에서 대형화와 전문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심화된 경쟁 한가운데에서 남성보다 높은 폐업과 도산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40.9%에서 2018년 25.2%로 크게 하락하였다. 2003년의 신용대란을 기점으로 자영업 노동시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이후 꾸준히 자영업자 비중은 하락해왔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상용근로자의 성장이다 (그림 5-1 참조).

[그림 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2003년

〔그림 5-1〕 취업자 종사상지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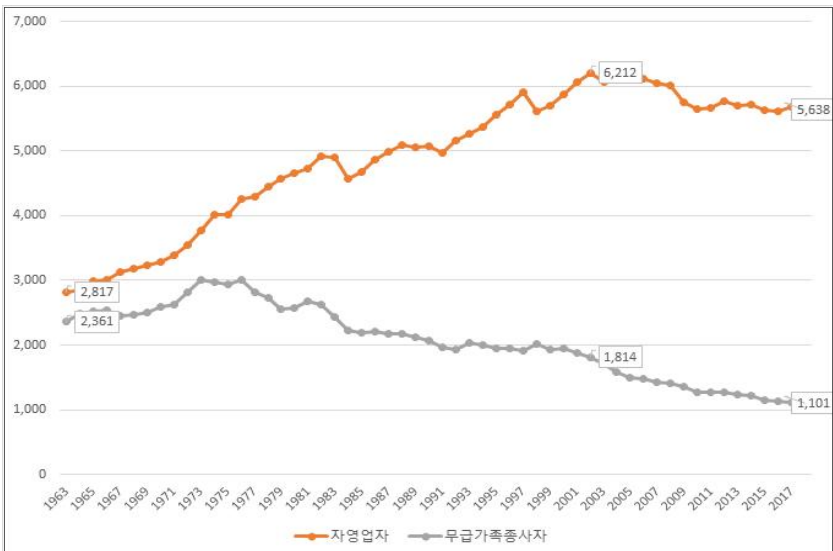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5-2〕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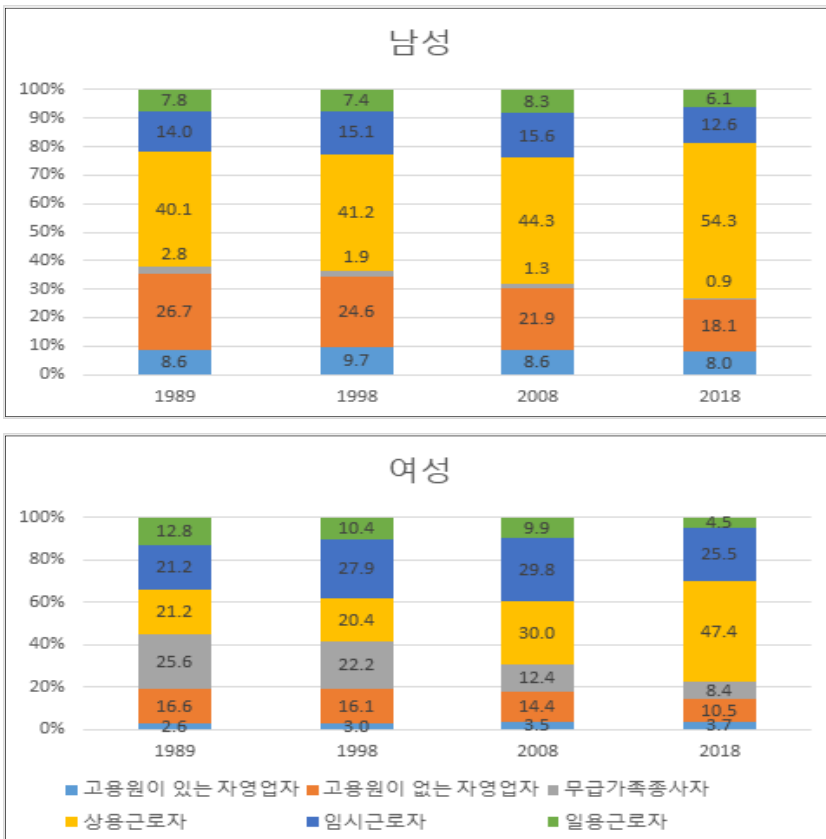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16 여성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정책적 개선 방안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자영업자는 5,638천 명으로 1963년 2,817천 명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상태이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2018년 현재 1,101천 명으로 1963년 2,361천 명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남녀 취업자의 지난 20년 동안의 종사상지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자. [그림 5-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모두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1989년 25.6%에서 2018년 8.4%로 하락했지만, 아직도 10.5%를 차지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과

[그림 5-3] 성별 종사상지위 규모 추이(198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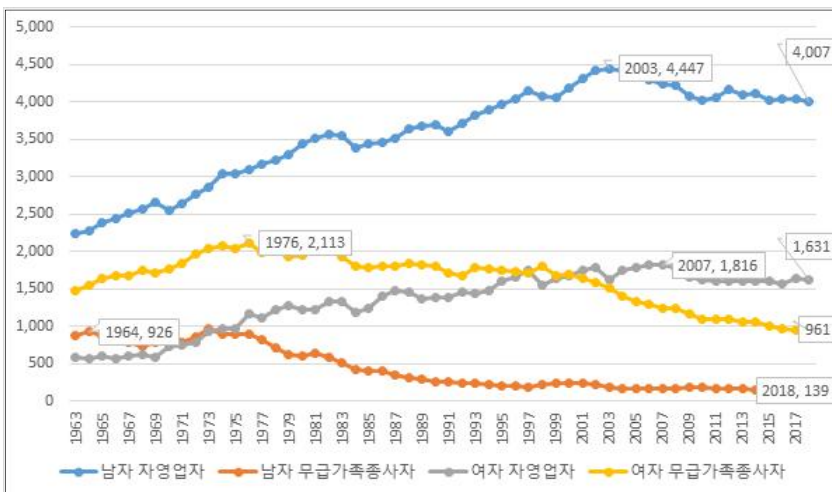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거의 맞먹는 규모를 차지한다. 여성 취업자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까지 고려하면 상당수의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1963년 이후 성별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그림 5-4]에 따르면 여성 자영업자 수는 2007년 1,816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하고 있어 2018년 현재 1,631천 명이다. 남성 자영업자 수는 여성보다 앞서 2003년에 4,447천 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계속 하락하여 2018년 현재 4,007천 명이다. 최근 3년 사이 남성 자영업자 수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여성 자영업자 수는 약간의 변동을 보이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1976년 2,113천 명으로 최고치에 도달한 뒤 계속 감소해왔다. 남성 자영업자 수가 급감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수도 그 이전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자영업자 수와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수의 동반 하락은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나타나고 있는 듯 보인다.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도 또

[그림 5-4] 성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한 번의 급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수요 위축으로 인해 자영업이 타격을 입은 결과가 반영된 듯하다. 이러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동반 감소는 자영업의 가족(생계)형 특징을 나타낸다.

이하에서는 2018년 현재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특성을 남성과의 비교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표 5-1>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장치위에 따른 남녀 취업자 수와 분포를 제시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61.19%는 남성이다. 비농가에 한정하면 비임금근로자 중 남성 비중은 62.03%로 큰 변화는 없다.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남성 비중이 각각 73.94%, 70.06%인 데 반해, 무급가족종사자의 86.88%는 여성이다.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분포도 살펴보았다(표 5-2 참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65.7%가 배우자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가구주가 90.82%로 가장 많았다.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배우자 비중이 93.68%를 차지했다. 반면 남성 무급가족종사자는 미혼자녀가 52.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2.65%도 미혼자녀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가구주가 44.55%, 배우자가 44.61%를 차지하여, 생계를 실질적으로 이끌거나 사업의 주체로서 여성이 자영업을 꾸리고 있는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비임금근로자 성별 분포(2018)

(단위: 천 명, %)

	성별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합계
전체	남자	1,221	2,823	155	4,199
		73.94	70.06	13.12	61.19
	여자	430	1,206	1,026	2,663
		26.06	29.94	86.88	38.81
비농가	남자	1,167	2,161	97	3,424
		73.7	67.73	12.95	62.03
	여자	416	1,029	650	2,096
		26.3	32.27	87.05	37.9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5-3〉에서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이 36.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비농가에 한정해서 보면 고졸이 41.57%로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농가를 중심으로 보면 남녀 모두 고졸이 가장 많고, 대졸, 초대졸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대졸 이상 비중이 여성 약 29%, 남성 약 21%로 여성이 다소 높다. 임금 근로 기회가 제한적인 고학력 여성이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 성별 비임금근로자 가구주와의 관계 분포(2018)

		남성				여성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합계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합계
전 체	가구주	94.67	93.9	4.21	90.82	36.53	44.55	0.14	26.14
	배우자	0.47	0.83	34.04	1.95	58.11	44.61	93.68	65.7
	미혼자녀	3.6	3.74	52.57	5.5	3.55	6.66	2.65	4.61
	기혼자녀	0.52	0.72	6.22	0.87	0.46	1.22	1.02	1.02
	손자녀	0	0.01	0	0.01	0	0	0	0
	부모	0.19	0.35	2.53	0.38	0.28	1.74	2.17	1.67
	미혼형제자매	0.43	0.23	0.43	0.3	0.95	0.7	0.03	0.49
	기타	0.12	0.22	0	0.18	0.11	0.52	0.32	0.3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 농 가	가구주	94.72	92.83	5.66	91.01	37.21	41.06	0.22	27.62
	배우자	0.5	1.04	47.75	2.17	57.48	46.94	93.25	63.4
	미혼자녀	3.5	4.46	43.86	5.25	3.67	7.65	3.58	5.6
	기혼자녀	0.52	0.68	0.84	0.63	0.47	1.22	0.68	0.91
	손자녀	0.00	0.01	0.00	0.01	0.00	0.00	0.00	0.00
	부모	0.2	0.39	1.89	0.37	0.29	1.75	1.8	1.48
	미혼형제자매	0.45	0.3	0	0.34	0.76	0.82	0.05	0.57
	기타	0.12	0.28	0	0.22	0.11	0.55	0.42	0.4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5-3〉 성별 비임금근로자 학력 분포(2018)

		남성				여성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합계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합계
전 체	초졸 이하	2.6	12.95	7.05	9.72	3.08	19.66	26.17	19.49
	중졸	5.18	13.37	9.05	10.83	6.09	11.56	16.25	12.48
	고졸	39.08	46.08	45.07	44.01	39.99	33.75	38.28	36.51
	초대졸	10.02	8.7	14.94	9.31	12.47	9.71	8.74	9.78
	대졸	36.16	17.47	22.5	23.09	31.37	21.9	9.94	18.82
	대학원졸	6.96	1.44	1.39	3.04	7.01	3.41	0.62	2.92
비 농 가	초졸 이하	2	6.36	3.63	4.8	2.57	12.29	9.58	9.52
	중졸	4.56	11.13	7.71	8.79	5.67	10.69	12.85	10.36
	고졸	38.98	50.02	50.95	46.28	40.39	36.61	50.19	41.57
	초대졸	10.09	10.14	11.06	10.15	12.56	11.31	12.3	11.87
	대졸	37.21	20.69	24.43	26.42	31.7	25.10	14.18	23.02
	대학원졸	7.16	1.66	2.22	3.55	7.10	4.00	0.90	3.65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 임금 근로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자(표 5-4 참조). 전체적으로나 비농가로 제한할 때나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는 남녀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 고용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남녀 연령 분포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40~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여성보다 남성에서 50대 이상 연령층에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독립적인 경제활동의 필요성과 의지가 강한 청장년층 여성의 자영업 진출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남녀의 연령 분포가 확연히 다른데, 가구주와의 관계 분포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여성의 경우는 50대 이상 연령층 비중이 높고 남성의 경우는 30대 이하 연령층의 비중이 높다.

〈표 5-4〉 성별 비임금근로자 연령 분포(2018)

		남성				여성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합계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합계
전 체	10대	0.09	0.06	0.84	0.1	0	0.1	0.15	0.1
	20대	1.85	2.21	25.21	2.96	2.08	5.69	2.97	4.06
	30대	15.57	9.8	22.99	11.96	18.41	12.52	7.54	11.55
	40대	32.8	21.59	13.31	24.54	34.72	23.81	18.88	23.68
	50대	31.66	29.8	13.7	29.75	32.4	27.77	34.03	30.93
	60-65	11.63	16.87	12.89	15.2	7.6	12.51	17.32	13.57
	65 이상	6.4	19.68	11.07	15.5	4.79	17.59	19.11	16.11
비 농 가	10대	0.1	0.08	0.54	0.1	0	0.12	0.24	0.13
	20대	1.94	2.82	25.73	3.16	2.15	6.61	4.1	4.94
	30대	15.68	11.8	21.24	13.38	19.03	14.44	10.21	14.04
	40대	33.65	25.91	9.68	28.09	35.1	27.01	26.54	28.47
	50대	31.82	33.01	14.44	32.08	31.78	29.56	40.52	33.4
	60-65	11.15	15.39	16.39	13.97	7.41	12.07	11.52	10.97
	65 이상	5.67	11.01	11.98	9.22	4.52	10.21	6.87	8.05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번에는 <표 5-5>에서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자. 비농가를 포함한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산업 분포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농림어업이 19.24%, 21.0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남성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20.37%이며, 여성도 21.73%로 농림어업과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12%로, 농림어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대표성이 매우 높은 3대 업종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유형별로 살펴보자. 남성의 경우 고용주의 24.62%는 도소매업, 15.52%는 숙박 및 음식점업, 15.99%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여성 고용주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35.71%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소매업이 20.28%로 그다음이며 교육서비스업도 11.89%를 차지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농림어업이 2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도소매업이 18.34%, 운수업이 19.93%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소매업이 21.45%, 교육서비스업이 14.89%, 농림어업이 14.65% 순이다. 무급가족종사자의 업종 분포를 보면, 남녀 각각 농림어업이 38.45%, 37.1%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그다음으로 높았다. 비농가로 한정할 경우, 농림어업의 비중은 현저히 낮아지고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5〉 성별 비임금근로자 산업 분포(2018)

		남성				여성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합계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합계
전체	농업, 임업 및 어업	4.38	24.6	38.45	19.24	0.94	14.65	37.1	21.09
	제조업	15.99	6.04	2.7	8.81	5.19	2.74	7.08	4.8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	0.02	0	0.01	0.00	0.00	0.00	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39	0.06	0	0.16	0.24	0.04	0.06	0.08
	건설업	12.33	7.87	3.35	9.00	1.23	0.37	3.28	1.63
	도매 및 소매업	24.62	18.34	23.98	20.37	20.28	21.45	22.67	21.73
	운수업	2.03	19.93	0.32	14	0.58	0.57	0.82	0.67
	숙박 및 음식점업	15.52	4.61	24.01	8.5	35.71	14.05	18.11	19.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1.51	0.00	1.42	0.48	1.57	0.17	0.85
	금융 및 보험업	0.96	0.49	0	0.61	0.16	0.88	0.19	0.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5	2.78	1.65	2.55	3.43	3.48	1.62	2.75

〈표 5-5〉의 계속

		남성				여성			
		고 용 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합 계	고 용 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합 계
전 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9	1.99	0.84	3	1.86	2.49	1.13	1.8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99	1.2	0.36	1.69	0.9	1.09	0.6	0.87
	교육 서비스업	3.29	2.4	1.02	2.61	11.89	14.89	1.41	9.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19	0.03	0.36	1.25	6.47	0.46	0.22	1.3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2.01	1.78	1.85	2.89	4.37	1.03	2.8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7	6.1	1.19	4.92	7.74	16.32	4.53	10.39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	0.02	0	0.01	0	0.57	0	0.26
비 농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1.2	3.19	2.57	2.5	0.08	3.89	2.93	2.84
	제조업	16.59	7.83	4.32	10.72	5.37	3.15	10.87	5.9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	0.03	0	0.02	0.00	0.00	0.00	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41	0.08	0	0.19	0.25	0	0.09	0.08
	건설업	12.69	10.07	5.37	10.83	1.28	0.44	5.1	2.05
	도매 및 소매업	25.44	23.59	38.42	24.64	20.79	24.2	34.94	26.85
	운수업	2.03	25.47	0.52	16.78	0.6	0.59	1.17	0.77
	숙박 및 음식점업	15.92	5.88	37.29	10.19	35.65	15.33	27.78	23.2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6	1.97	0	1.74	0.49	1.81	0.27	1.07
	금융 및 보험업	1.01	0.62	0	0.74	0.16	1.04	0.3	0.6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1	3.59	2.65	3.09	3.24	3.93	2.55	3.37

〈표 5-5〉의 계속

		남성				여성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합계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합계
비 농 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85	2.59	1.34	3.66	1.78	2.83	1.78	2.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13	1.57	0.57	2.07	0.93	1.28	0.95	1.11
	교육 서비스업	3.44	3.05	1.63	3.14	12.29	17.3	2.22	11.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8	0.04	0.57	1.53	6.14	0.54	0.34	1.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7	2.62	2.84	2.27	2.99	4.92	1.62	3.5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7	7.78	1.9	5.87	7.97	18.15	7.08	12.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	0.02	0	0.01	0	0.61	0	0.3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직종 분포를 살펴보자(표 5-6 참조). 비농가를 포함한 전체 남녀 비임금근로자의 직종 분포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남성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8.88%로서 농림어업종사자 19.15% 다음으로 비중이 컸다면,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가 24.78%로 가장 높고 판매 종사자가 21.34%로 그다음이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남성은 생산직, 여성은 판매서비스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남성은 판매 종사자가 25.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0.46%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가 36.7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4.53%, 판매종사자가 24.00%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남성의 경우 생산직 비중이 높았고, 여성은 서비스 판매 비중이 높았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남녀 모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 판매 종사자 비중이 그다음으로 높았다.

〈표 5-6〉 성별 비임금근로자 직종 분포(2018)

		남성				여성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자	합계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자	합계
전 체	관리자	2.01	0.00	0.00	0.59	2.94	0.00	0.00	0.4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46	10.3	3.73	13.01	24.53	24.96	3.02	16.44
	사무 종사자	9.00	1.84	1.43	3.9	6.26	1.68	10.82	5.94
	서비스 종사자	11.22	6.04	16.45	7.93	36.79	28.01	15.96	24.78
	판매 종사자	25.15	15.67	18.72	18.54	24.00	20.95	20.55	21.3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40	24.52	37.58	19.15	0.94	14.58	36.53	20.8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32	11.68	5.09	12.5	2.06	4.27	4.20	3.8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8.16	24.49	1.06	18.88	0.89	1.26	1.45	1.27
	단순노무 종사자	4.29	5.46	15.94	5.51	1.29	4.29	7.49	5.04
비 농 가	관리자	2.11	0	0	0.72	3.04	0	0	0.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28	13.3	5.98	15.81	24.65	28.87	4.76	20.55
	사무 종사자	9.35	2.4	2.3	4.77	6.47	1.93	16.65	7.4
	서비스 종사자	11.36	7.77	26.36	9.52	36.93	30.87	24.5	30.1
	판매 종사자	26.18	20.13	29.55	22.46	24.76	23.6	31.52	26.2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22	3.16	2.13	2.47	0.08	3.89	2.77	2.7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58	15.06	8.15	15.04	2.13	4.88	6.55	4.8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8.51	31.21	1.7	22.65	0.92	1.37	2.23	1.55
	단순노무 종사자	4.41	6.95	23.84	6.56	1.03	4.58	11.03	5.87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5-7〉 성별 비임금근로자 사업장 규모 분포(2018)

		남성				여성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합계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합계
전 체	1-4명	70.02	100	94.27	91.07	77.22	100	92.34	93.37
	5-9명	22.31	0	5.52	6.69	18.39	0	7.25	5.77
	10-29명	6.82	0	0.21	1.99	4.39	0	0.4	0.86
	30-99명	0.78	0	0	0.23				
	100-299명	0.08	0	0	0.02				
비 농 가	1-4명	69.89	100	93.75	89.56	77.18	100	89.49	92.21
	5-9명	22.23	0	5.92	7.74	18.29	0	10	6.73
	10-29명	6.99	0	0.34	2.39	4.53	0	0.51	1.06
	30-99명	0.81	0	0	0.28				
	100-299명	0.08	0	0	0.03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5-7〉에서 보듯이 자영업 종사자의 사업장 규모는 1~4명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93.37%, 남성은 91.07%로 큰 차이는 없다. 고용주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5인 미만 사업장 규모가 92.34%로 남성 94.27%보다 다소 낮는데, 남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할 경우 그 사업장의 대표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미혼 자녀마저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해야 할 정도의 영세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2. 근로실태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실태를 남성과 비교 분석했다. 〈표 5-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에 비해 여성은 36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이 69.06%로 남성 78.14%보다 낮았다. 비농가로 제한해도 남성에 비해 여성 자영업자는 36시간 이상 근로 비중이 낮다.

〈표 5-8〉 성별 비임금근로자 실제 일한 시간 분포(2018)

(단위: %)

		남성				여성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자	합계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자	합계
전 체	1~35시간	17.13	23.4	31.21	21.86	21.98	36.11	28.61	30.94
	36시간 이상	82.87	76.6	68.79	78.14	78.02	63.89	71.39	69.06
비 농 가	1~35시간	17.2	21.9	27.42	20.45	21.98	35.72	25.69	29.88
	36시간 이상	82.8	78.1	72.58	79.55	78.02	64.28	74.31	70.1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러나 종사상지위별로 성별 취업시간 분포에 차이가 있다.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36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이 더 높은 데 반해, 무급가족종사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36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가 자영업자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무급가족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자영업자보다 많았던 것은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 산업에서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장시간인 점에 기인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17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만 ‘무급가족종사자’로 간주하고 17시간 미만 일할 때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일을 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할 때 36시간 이상 근로시간 비중이 더 낮은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할 때 사업의 몰입과 책임 및 기여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5-9〉는 남녀 비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여성의 지난 주 실제 일한 주업에서의 근로시간은 41.49시간으로 남성 44.38시간에 비해 짧다. 농림어업을 주로 제외하고 비농가로 제한하면 여성은 42.65시간, 남성은 45.56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다소 길어진다.

종사상지위별로 구분해서 보면, 남녀 모두 고용주일 때 주당 근로시간이 약 47시간으로 비슷하다. 남성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3.46시간, 무급가족종사자가 40.27시간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다소 길지만, 여성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8.88시간, 무급가족종사자는 42.20시간으로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이 더 길다. 지난 주가 아니라 보통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을 보더라도 성별 종사상지위별로 나타나는 근로시간 특징은 크게 변함이 없다.

남성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일 때 근로시간이 더 길고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일 때 근로시간이 더 길다는 사실은 각각의 인적 특성과 일차리의 특성 차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 <표 5-10>은 성별로 구분하여 근로시간 결정 요인을 OLS 모형 추정을 통해 분석해 본 것이다. 모형에 포함시킨 독립변수는 종사상지위,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만 나이, 산업, 직업, 종사자규모, 사업체의 조직형태, 비농가 여부, 종사 기간이다. 이 모든 요인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앞의 기술 통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남성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짧고 여성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이 길다. 남성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무급가족종사자가 약 3.2시간

<표 5-9> 성별 비임금근로자 평균 주당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체		비농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주업 실제 취업시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7.03	47.12	46.93	47.1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3.46	38.88	44.95	39.51
	무급가족종사자	40.27	42.20	42.54	44.72
	합계	44.38	41.49	45.56	42.65
보통 일주일간 근무시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0.72	49.91	50.67	50.0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7.90	42.71	49.28	43.28
	무급가족종사자	42.23	44.87	43.85	47.53
	합계	48.51	44.70	49.60	45.9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적은 시간을 일하고 있고, 여성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무급가족종사자가 약 3.2시간 더 일하고 있다. 보통 주당 근무시간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추정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대비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 차이는 앞의 결과와 비슷하다.

<표 5-10>은 종사상지위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비임금 근로자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가구주 남성과 여성에 비해 배우자일 때 모두 근로시간이 감소하지만, 그 영향은 남성 비임금근로자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가구주와의 관계가 ‘기타’인 사람과 ‘기혼 자녀’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구주일 때에 비해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서 비임금 근로에 참여할 때 가구주보다 근로시간이 더 짧다. 학력 수준에 따라서도 근로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남녀 모두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연령은 남성 비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이 비임금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산업에 특수한 요인들이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농림어업 종사자보다 남녀 모두 근로시간이 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직종별로 남녀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달랐다. 여성의 경우 관리자에 비해 사무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상당히 짧았지만, 남성의 경우 이러한 직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관리자와 차이가 없었다. 남성의 경우 관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근로시간의 차이가 나타난 직종은 서비스, 판매 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관리자보다 주당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종사자 규모는 여성의 주당 근로시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5-9인 사업장 종사자보다 10-29명 사업장 종사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이 더 길었다. 남성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주당 근로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사업체의 조직형태를 보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사업체 종사자는 그렇지 않은 종사자보다 남성은 주당 근로시간이 6.1시간 더 짧았고 여성은 7.8시간 더 짧았다. 농가보다 비농가 비임금근로자는 남녀 모두 주당 근로시간이 더 짧았다. 일자리 종사 기간이 길수록 남녀 모두 주당 근로시간이 길어졌다.

〈표 5-10〉 성별 비임금근로자 근로시간 결정 요인

		(1) 남성	(2) 여성	(3) 남성	(4) 여성
		주된 일(주업) 실제 취업시간		보통 일주일간 근무시간	
종사상 지위 (기준=고용 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726***	4.154***	1.262***	3.149***
		(0.612)	(0.876)	(0.473)	(0.769)
	무급가족종사자	-3.244**	3.217***	-5.457***	1.727**
		(1.573)	(0.707)	(1.391)	(0.673)
가구주와 의 관계 (기준= 가구주)	배우자	-3.744*	-1.758**	-2.808*	-1.060*
		(2.001)	(0.720)	(1.567)	(0.632)
	미혼 자녀	-5.276***	-2.449	-4.584***	-4.713***
		(1.240)	(1.579)	(1.056)	(1.508)
	기혼 자녀	-3.034	0.477	0.309	0.794
		(2.443)	(2.319)	(1.743)	(2.106)
	손자녀	-1.062		-6.440***	
		(1.997)		(1.470)	
	부모(장인, 장모)	-6.185	-4.416***	-2.176	-5.413***
		(3.803)	(1.669)	(3.437)	(1.531)
	미혼 형제자매	-5.792**	2.334	-5.264***	3.702
		(2.301)	(3.070)	(1.930)	(3.175)
	기타	9.206***	4.379	0.946	0.353
		(2.870)	(4.204)	(4.214)	(4.420)
교육정도 (기준=초졸 이하)	중졸	0.281	1.235	0.382	1.112
		(0.868)	(0.950)	(0.706)	(0.812)
	고졸	-0.103	3.298***	-0.193	0.948
		(0.804)	(0.886)	(0.652)	(0.824)
	초대졸	-0.826	0.370	-0.081	-0.850
		(1.089)	(1.331)	(0.883)	(1.239)

〈표 5-10〉의 계속

		(1) 남성	(2) 여성	(3) 남성	(4) 여성
		주된 일(주업) 실제 취업시간		보통 일주일간 근무시간	
	대졸	-1.972**	-1.172	-1.802**	-2.668**
		(0.941)	(1.181)	(0.766)	(1.093)
	대학원졸	-4.634***	-2.199	-3.617***	-4.436**
		(1.477)	(2.057)	(1.169)	(2.080)
	만 나이	-0.272***	0.005	-0.217***	0.000
		(0.026)	(0.037)	(0.021)	(0.033)
산업(기준=농림어업)	제조업	3.901	8.091**	6.248*	8.140***
		(4.168)	(3.686)	(3.773)	(2.90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924**		-8.134**	
		(4.252)		(3.82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4.147***	8.274**	10.911**	7.081**
		(5.385)	(3.708)	(4.776)	(3.026)
	건설업	-2.280	2.232	3.157	4.749*
		(4.201)	(3.833)	(3.777)	(2.863)
	도매 및 소매업	8.387**	8.399**	9.061**	10.197***
		(4.175)	(3.487)	(3.775)	(2.727)
	운수업	8.694**	4.008	9.860***	9.813***
		(4.183)	(4.274)	(3.772)	(3.447)
	숙박 및 음식점업	14.170***	13.982***	14.246***	14.660***
		(4.272)	(3.402)	(3.870)	(2.6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21	9.155*	3.900	7.453**
		(4.373)	(4.753)	(3.946)	(3.524)
	금융 및 보험업	0.682	1.566	0.985	4.184
		(4.492)	(4.274)	(4.023)	(3.4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5.317	8.171**	5.277	8.156**
		(4.403)	(4.119)	(3.948)	(3.19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09	7.998**	3.363	8.445***
		(4.364)	(3.946)	(3.900)	(3.12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33	-0.435	2.236	3.212
		(4.269)	(5.189)	(3.803)	(3.239)

〈표 5-10〉의 계속

		(1) 남성	(2) 여성	(3) 남성	(4) 여성
		주된 일(주업) 실제 취업시간		보통 일주일간 근무시간	
	교육 서비스업	-3.366	-2.404	-3.280	-3.356
		(4.441)	(3.756)	(4.098)	(2.97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265	3.203	4.864	3.403
		(4.427)	(4.025)	(3.910)	(3.67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640*	8.203**	8.877**	10.077***
		(4.553)	(3.750)	(4.135)	(2.93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518**	9.906***	9.689**	10.335***
		(4.231)	(3.388)	(3.826)	(2.589)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3.987	14.261**	-1.055	11.532**
		(4.180)	(5.907)	(3.778)	(5.855)
직업 (기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09	-6.683*	1.465	-5.894
		(2.175)	(3.462)	(1.751)	(5.080)
	사무 종사자	-2.303	-11.587***	-1.109	-13.045**
		(2.238)	(3.660)	(1.799)	(5.096)
	서비스 종사자	5.708**	0.349	5.369***	-1.398
		(2.380)	(3.802)	(1.996)	(5.116)
	판매 종사자	3.731*	-0.454	4.016**	-2.643
		(2.169)	(3.742)	(1.797)	(5.10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108	-0.129	5.787	-1.961
		(4.551)	(4.927)	(4.022)	(5.6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838*	-3.302	3.945**	-2.045
		(2.114)	(3.955)	(1.729)	(5.15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719	-7.701*	2.215	-8.077
		(2.143)	(4.159)	(1.732)	(5.291)
	단순노무 종사자	1.129	-8.758**	2.201	-10.052*
		(2.286)	(3.923)	(1.884)	(5.218)
종사자 규모 (기준= 5-9명)	1-4명	-1.021	1.930	-0.238	0.241
		(0.894)	(1.327)	(0.710)	(1.185)
	10-29명	-1.065	5.673*	0.538	2.482
		(1.516)	(2.905)	(1.325)	(2.658)

〈표 5-10〉의 계속

		(1) 남성	(2) 여성	(3) 남성	(4) 여성
		주된 일(주업) 실제 취업시간		보통 일주일간 근무시간	
	30-99명	1.998		-3.223	
		(3.296)		(2.156)	
	100-299명	1.896		-0.635	
		(2.111)		(1.170)	
사업체 조직형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사업체	-6.136***	-7.866***	-5.334***	-7.515***
		(0.825)	(0.881)	(0.639)	(0.794)
가구구분 (농가/ 비농가)	비농가	-4.834***	-2.560**	-3.873***	-2.052**
		(1.145)	(1.002)	(0.926)	(0.861)
종사기간	종사 기간(년)	0.086***	0.073***	0.075***	0.100***
		(0.021)	(0.023)	(0.016)	(0.020)
	상수항	57.486***	37.332***	54.785***	43.860***
		(4.902)	(5.631)	(4.314)	(6.229)
	표본 수	6,221	4,455	6,221	4,455
	R-squared	0.213	0.328	0.223	0.350

주: 괄호 안은 강건한 표준오차.

*** $p < 0.01$, ** $p < 0.05$, * $p < 0.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5-11〉 성별 비임금근로자 평균 종사 기간

(단위: 년)

	전체		비농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1.16	8.28	10.65	8.0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5.52	12.89	11.78	9.56
무급가족종사자	8.15	18.68	6.15	12.28
평균	13.98	14.37	11.23	10.1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5-11〉은 남녀 비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종사 기간을 제시했다. 종사상지위별로 종사기간의 남녀 차이가 존재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여성보다 남성의 종사 기간이 길다. 무급 가족종사자는 여성은 18.68년인 데 반해 남성은 8.15년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길다. 비농가로 국한하면, 남녀의 종사 기간 격차는 감소하여 평균 10-11년이다.

<표 5-12>에서는 비임금 근로자의 향후 일자리 계획을 살펴보았다. 현재 일자리를 ‘1년 이내 확장할 계획’이나 ‘계속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약 92%, 여성은 약 91%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종사상지위

<표 5-12> 성별 비임금근로자 향후 일자리 계획(2018)

(단위: %)

		남성				여성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합계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합계
전체	1년 이내 확장할 계획	1.89	1.29	1.11	1.46	1.17	1.00	0.70	0.91
	계속 유지할 계획임	91.42	90.46	84.37	90.52	88.12	87.63	92.50	89.59
	6개월 이내에 그만 둘	1.13	0.84	4.69	1.06	1.33	1.57	0.62	1.16
	6개월~1년 이내에 그만	0.85	0.6	0.00	0.65	1.1	1.69	0.38	1.09
	1년 이후에 그만 둘 계	2.29	2.07	2.16	2.14	2.91	2.82	1.77	2.43
	잘 모르겠음	2.42	4.74	7.68	4.17	5.37	5.31	4.02	4.82
비농가	1년 이내 확장할 계획	1.86	1.35	1.77	1.54	1.21	1.13	0.78	1.04
	계속 유지할 계획임	91.42	89.26	83.16	89.82	87.72	87.11	91.44	88.58
	6개월 이내에 그만 둘	1.02	1.07	4.58	1.15	1.38	1.64	0.82	1.33
	6개월~1년 이내에 그만	0.89	0.67	0.00	0.73	1.13	1.93	0.42	1.31
	1년 이후에 그만 둘 계	2.31	2.22	3.02	2.28	3.01	2.76	1.57	2.44
	잘 모르겠음	2.5	5.42	7.47	4.48	5.55	5.42	4.97	5.3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 무급가족종사자는 약 85%가 확장하거나 계속 유지할 계획을 가진 반면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약 93%가 현재 일자리를 지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 고용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현재 일자리를 지속할 계획을 가진 사람의 비중이 더 낮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가 현재 일자리를 유지할 비중이 고용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다소 높았다. 비농가로 제한할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농가 무급가족종사자 남성은 6개월 이내 그만둘 계획을 가진 사람의 비중이 4.58%로 여성 0.82%에 비해 높았다. 여성 비임금 근로자가 남성과 달리 고용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비해 현재 일자리를 유지할 계획을 가진 사람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다른 임금 근로에 대한 대안이 없거나 단순히 가족을 돕는 사람이 아닌 전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자리를 그만 두려는 비임금 근로자의 이유는 <표 5-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비농가 임금근로자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현재 일자리를 그만 두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남성은 33.33%, 여성은 46.75%가 ‘현 사업이 부진하여’라고 응답했다. 여성은 ‘현 사업이 부진하여’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남성의 경우는 ‘수익이 더 나는 업종으로 바꾸기 위해’라는 응답도 17.12%로 높았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낮은 수익성이 일자리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동과 그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비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이전 직장 이직 시 종사상지위를 살펴보았다. <표 5-14>에 따르면 현재 비취업자 가운데 그만 둔 지 1년 이상 지났거나 일자리가 없었던 사람은 남성이 78.22%, 여성이 84.46%이다. 그만 둔 지 1년 미만인 사람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임시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순서로 높다. 이전 직장 종사상지위가 비임금 근로자인 남성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68%로 가장 비중이 컸고, 그다음은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고 있다.

〈표 5-13〉 성별 비임금근로자 일자리 그만두려는 이유(2018)

{단위: %}

		남성			여성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합계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합계
전 체	수익이 더 나은 업종으로 바꾸기 위해	21.45	13.15	16.02	5.34	4.09	4.39
	보다 적성에 맞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0.00	3.25	2.13	5.70	3.84	4.28
	임금근로로 취업을 원하여	12.82	6.17	8.46	1.40	9.37	7.47
	향후 전망이 없어서	21.01	11.97	15.09	4.92	4.56	4.65
	현 사업이 부진하여	23.68	34.02	30.45	57.55	40.95	44.91
	개인적인 사유(건강문제 등)	14.69	28.31	23.61	9.43	23.2	19.91
	개인적인 사유(가족돌봄 등)	1.77	0.96	1.24	15.66	7.35	9.33
	기타	4.59	2.16	3.00	0.00	6.64	5.06
비 농 가	수익이 더 나은 업종으로 바꾸기 위해	20.5	15.18	17.12	5.34	4.59	4.79
	보다 적성에 맞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0.00	3.75	2.38	5.70	4.31	4.67
	임금근로로 취업을 원하여	11.96	7.12	8.89	1.40	10.53	8.15
	향후 전망이 없어서	20.68	13.82	16.33	4.92	3.85	4.13
	현 사업이 부진하여	25.07	38.07	33.33	57.55	42.95	46.75
	개인적인 사유(건강문제 등)	15.05	20.37	18.43	9.43	18.43	16.09
	개인적인 사유(가족돌봄 등)	1.87	1.11	1.39	15.66	8.25	10.18
	기타	4.86	0.57	2.14	0.00	7.09	5.2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다음은 1년 이내 이전 직장을 그만 둔 사람들의 사유를 살펴보았다. <표 5-15>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직장을 그만 둔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전 직장을 그만 둔 이유를 자발적 이유와 비자발적 이유로 묶었을 때, 대체로 여성(32.25%)보다는 남성(38.59%)이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았다. 예외가 있다면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남성(42.52%)보다 여성(48.16%)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비중이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표 5-14〉 비취업자 이전 직장 종사상지위(2018)

(단위: 천 명, %)

	그만 둔 지 1년 이상 이거나 일 없었음	그만 둔 지 1년 이내						합계
		임금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상용근로	임시근로	일용근로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남자	5,263	426	445	441	30	113	11	6,729
	78.22	6.34	6.61	6.56	0.45	1.68	0.16	100
여자	10,390	514	788	369	21	132	87	12,300
	84.46	4.18	6.41	3.00	0.17	1.07	0.71	100
합계	15,650	941	1,233	810	51	245	98	19,030
	82.25	4.94	6.48	4.26	0.27	1.29	0.52	1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의 비중이 39.15%였고, 고용주는 44.00%, 무급가족종사자는 48.16%였다. 남성과 여성 비임금 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비중은 남성이 더 높았고, 무급가족종사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비중은 여성이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 일용 근로를 제외하면 대체로 임금근로자보다도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의 비중은 더 높았다. 일용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정성과 유사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구체적 사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자발적 사유 가운데는 임금 근로자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로 이전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비임금 근로자는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경영 악화’라고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 근로자나 비임금 근로자나 근로자 개인 상황이나 근로조건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임시성과 사업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성이 직장을 그만 둔 원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표 5-15〉 이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2018)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 근로	임시 근로	일용 근로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합계
남 성	자발적	74.99	69.75	43.11	38.57	53.89	57.48	61.4
	개인, 가족관련 이유	24.91	41.6	34.33	32.47	40.07	43.69	34.21
	육아	0	0.1	0	0	0	0	0.03
	심신장애	0.43	0.59	0.52	0	3.53	0	0.71
	정년퇴직, 연로	11.67	3.02	2.07	3.47	8.47	13.79	5.71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37.98	24.44	6.19	2.63	1.82	0	20.74
	비자발적	25	30.23	56.89	61.43	46.1	42.52	38.59
	직장의 휴업, 폐업	7.06	3.22	0.21	0	0	20.94	3.23
	명예·조기 퇴직, 정리해고	13.36	4.61	0.18	0	0	0	5.4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2.81	21.21	21.57	0	8.57	0	14.49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0	0	32.84	61.43	37.03	21.58	13.91
	기타()	1.77	1.19	2.09	0	0.5	0	1.5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여 성	자발적	78.68	70.53	51.84	56.00	60.85	51.83	67.75
	개인, 가족관련 이유	37.96	44.84	38.53	27.46	43.16	29.59	40.94
	육아	11.27	4.9	1.66	3.72	5.52	3.83	6.02
	가사	3.63	4.42	4.28	16.97	6.96	16.35	4.86
	심신장애	0.16	0.64	0.16	7.85	0.28	0	0.45
	정년퇴직, 연로	3.18	0.45	1.29	0	1.78	0.6	1.46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22.48	15.28	5.92	0	3.15	1.46	14.02
	비자발적	21.31	29.46	48.16	44	39.15	48.16	32.25
	직장의 휴업, 폐업	7.04	2.78	1.45	0	0	5.4	3.56
	명예·조기 퇴직, 정리	10.53	3.3	1.67	0	0	0	4.61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2.88	21.73	26.57	0	8.42	6.44	15.87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0	0	16.33	39.39	29.39	34.2	6.66
	기타()	0.86	1.65	2.14	4.61	1.34	2.12	1.55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3. 사회적 보호 실태

비임금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실태를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과 수혜 여부를 통해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는 무급가족종사자에게 공적 연금 가입 실태를 질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전체 여성 비임금 근로자 국민연금 미가입/혜택 비중은 35.13%이며 남성 19.84%에 비해 상당히 높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비중이 낮은 것은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수급)권자 비중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인 여성 노인은 국민연금 수급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비중이 남성보다 상당히 낮다.

종사상위별로 살펴보면 여성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40.8%로서 남성 22.97%보다 거의 두 배가량 높다. 남성보다 여성이 사업 규모와 수익성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노후보장에 대비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여성의 경우 남성 연금권자의 배우자로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표 5-16〉 성별 자영업자 국민연금가입/수혜여부(2018)

		남성			여성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합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합계
전 체	사업장(직장)가입자	48.27	8.97	20.83	40.43	8.92	17.21
	지역가입자	30.56	46.14	41.44	35.59	38.8	37.96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수급)권자	8.58	21.92	17.89	4.75	11.47	9.70
	가입되지 않았음	12.59	22.97	19.84	19.22	40.8	35.13
비 농 가	사업장(직장)가입자	49.57	11.13	24.60	40.54	10.01	18.81
	지역가입자	30.46	52.46	44.75	35.55	42.86	40.75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수급)권자	7.87	14.24	12.00	4.61	7.50	6.67
	가입되지 않았음	12.1	22.18	18.65	19.3	39.63	33.7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학적 특성과 일자리 특성을 통제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 결정 요인을 프로빗 모형 추정을 통해 분석했다(표 5-17 참조). 가구주와의 관계, 학력, 연령, 산업, 종사자 규모, 사업체의 조직형태, 창업자금규모, 비농가 여부, 종사 기간을 통제하고도 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6.9% 낮았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일수록, 배우자와 미혼자녀의 경우일수록 국민연금 가입 확률이 낮았다. 초졸 이하보다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 확률이 높아졌고, 종사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았다. 사업장 규모가 1~4인 종사자는 5~9인 규모 사업장 종사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 확률이 낮았고, 사업장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체에 종사할수록 국민연금 가입 확률이 낮았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동일한 변인이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고용주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일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그 가입 확률은 더 낮게 나타났다. 남성이 고용주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률이 3.5% 낮아진다면 여성은 7.1% 낮아진다. 배우자 지위가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데, 남성의 경우는 가구주 대비 배우자일 때 국민연금 가입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은 7.6% 감소한다.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이나 혜택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은 상태를 알 수 있다. 학력의 영향은 남성에게서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은 고졸을 제외하고는 초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동일 학력 수준의 남성보다 국민연금 가입 확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령도 남성과는 달리 여성 40-50대가 30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국민연금 가입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청장년층 여성은 동일 특성을 가진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종사 사업장의 영세성이 여성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에 더욱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은 더욱 감소한다. 남성은 5-9인 사업장에 비해 5.1%만 감소했다면 여성은 11.0%로 거의 두 배가량 확률이 감소하고 있다. 사업장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체 종사 여부가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도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큰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다.

〈표 5-17〉 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 결정 요인, 프로빗 모형 추정 한계 효과(2018)

		전체	남성	여성
성별	여자	-0.069*** (0.015)		
종사상지위 (기준=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043*** (0.014)	-0.035** (0.016)	-0.071*** (0.027)
가구주와의 관계 (기준=가구주)	배우자	-0.071*** (0.019)	-0.058 (0.079)	-0.076*** (0.022)
	미혼 자녀	-0.149*** (0.035)	-0.170*** (0.043)	-0.100* (0.059)
	기혼 자녀	-0.117 (0.072)	-0.242*** (0.093)	0.089 (0.091)
	부모(장인, 장모)	-0.009 (0.051)	0.012 (0.082)	0.007 (0.065)
	미혼 형제자매	-0.047 (0.083)	-0.115 (0.133)	0.008 (0.109)
	기타	-0.052 (0.113)	-0.193 (0.170)	0.133 (0.113)
교육정도(기준 =초졸 이하)	중졸	0.054*** (0.021)	0.033 (0.024)	0.065 (0.041)
	고졸	0.082*** (0.021)	0.073*** (0.024)	0.047 (0.042)
	초대졸	0.142*** (0.027)	0.099*** (0.031)	0.196*** (0.054)
	대졸	0.160*** (0.023)	0.129*** (0.026)	0.197*** (0.048)
	대학원졸	0.138*** (0.038)	0.105** (0.045)	0.182*** (0.069)
연령 (기준=30대)	10대	0.125 (0.103)	0.121 (0.081)	
	20대	-0.072* (0.041)	-0.163*** (0.055)	0.040 (0.067)
	40대	0.028 (0.019)	-0.009 (0.021)	0.116*** (0.038)

〈표 5-17〉의 계속

		전체	남성	여성
	50대	0.046**	0.012	0.118***
		(0.020)	(0.022)	(0.040)
	60-64세	-0.001	-0.008	-0.008
		(0.023)	(0.024)	(0.050)
	65세 이상	-0.057**	-0.074**	-0.018
		(0.027)	(0.029)	(0.058)
종사자 규모 (기준=5-9명)	1-4명	-0.067***	-0.051**	-0.110*
		(0.024)	(0.025)	(0.062)
	10-29명	0.022	0.025	0.185***
		(0.047)	(0.046)	(0.066)
	30-99명	-0.039	-0.043	
		(0.126)	(0.115)	
	100-299명	-0.538**	-0.528*	
		(0.257)	(0.273)	
사업체 조직형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사업체	-0.216***	-0.172***	-0.288***
		(0.018)	(0.023)	(0.031)
창업자금규모 = 0, 2년 이전 사업 시작		0.069	0.034	0.113
		(0.055)	(0.067)	(0.084)
창업자금규모 (기준=5백만 원~2천만 원)	5백만 원 미만	-0.101	-0.156*	-0.061
		(0.070)	(0.091)	(0.102)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0.002	-0.055	0.119
		(0.070)	(0.087)	(0.110)
	5천만 원~1억 원 미만	0.035	0.007	0.100
		(0.075)	(0.089)	(0.126)
	1억 원~3억 원 미만	0.103	0.109	-0.070
		(0.074)	(0.079)	(0.154)
	3억 원 이상	-0.470***	-0.062	-0.543***
		(0.159)	(0.183)	(0.084)
가구구분(농가 /비농가)	비농가	-0.069***	-0.054**	-0.068**
		(0.020)	(0.025)	(0.034)
종사기간	종사기간(년)	0.002***	0.001**	0.002**
		(0.000)	(0.001)	(0.001)
표본 수		8,553	5,996	2,552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산업 더미 포함 *** p<0.01, ** p<0.05, * p<0.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제5절 소 결

본 연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비임금근로자 규모와 특성을 밝히고, 노동과 사회적 보호 실태를 남성 비임금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제시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남성 자영업자 수가 급감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수도 그 이전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했다. 남성 자영업자 수와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수의 동반 하락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도 나타나, 가족형 자영업이 경제 위기에 타격을 입을 때 가족 전체가 빈곤과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남성과 다른 인적 특성과 일자리 특징을 가진다.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배우자 비중이 93.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남성 무급가족종사자는 미혼 자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독립적인 경제활동의 필요성과 의지가 강한 고학력 청장년층 여성의 자영업 진출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다.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남성보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 비중이 더 높았다.

셋째, 비임금 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로 남녀 근로시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가 자영업주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가구주일 때에 비해 배우자일 때 남녀 모두 근로시간이 감소하지만, 감소 정도는 남성 배우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넷째, 여성 비임금 근로자는 남성보다 현재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다른 임금 근로에 대한 대안이 없거나, 무급가족종사 일이 가족을 돕는 사람이 아닌 전업자로서 지위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자리를 그만 두는 이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남성보다 여성은 사업의 부진함이 더 부각되고 있어 대내외 경제 상황과 경기

변화에 따라 일자리 상실과 빈곤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1년 이내 직장을 그만 둔 사람 가운데서도 남성보다 여성 비임금 근로자는 규모 대비 이탈자 수가 많아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남성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용 근로를 제외하면, 대체로 임금근로자보다도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의 비중은 더 높았다. 근로계약 관계에 종속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근로자보다도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 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음을 드러낸다.

다섯째, 여성 비임금 근로자는 남성 비임금 근로자에 비해 공적 연금과 같은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다. 여성 비임금 근로자 국민연금 미가입/혜택 비중은 35.13%이며 남성 19.84%에 비해 상당히 높다. 다른 변인을 통제하고도 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6.9% 낮았다. 고용주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일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그 가입 확률은 더 낮게 나타났다. 종사 사업장의 영세성이 여성 자영업자의 공적 연금 가입에 더욱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영업주, 특히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이 파산·도산하거나 실직하여 빈곤상태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지원 대상이 되기 쉽다. 이병희 외(2016)에 따르면 서구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있는 국가는 사민주의 복지유형의 일부와 조합주의 복지유형 국가의 일부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설계할 때 자영업자가 각출 및 급여 수준을 선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낮은 급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임의가입 형태의 자영업자 실업보험은 가입률이 낮아서 보호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 자영업자는 남성보다 근로시간이 결코 짧지 않지만 일자리의 불안정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일자리 상실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실업과 빈곤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나 자영업은 사업 위험이 크고 경기 등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득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지니며, 이들에게 실업보험 등을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쉽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자영업 종사자가 실업급여를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자영업 종사자와 임금근로자의 형평성 측면,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주의 경우 위험도가 크고, 소득 변동 폭이 큰 상황에서 실업급여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동기가 낮을 수 있다. 특히 자영업주가 적자를 보고 있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 이러한 성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자영업자 측면에서도 사회보험 가입을 하면 소득이 노출되므로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이병희 외(2016:150)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95.8%에 달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는 91.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6.3%, 무급가족종사자는 97.3%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 있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배우자 여성이었다. 남성의 경우 미혼 자녀로서 무급가족 일을 하고 있지만 부모의 가족 사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무급가족종사자 보호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거의 같은 수준의 시간과 기간을 무급가족종사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같은 수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지위 보장과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자영업자를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과 체계 속에서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가족 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로 인한 제반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근로 이력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기반 여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배제된다. 사회보험제도와 그를 기반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 수혜자의 범주를 넓히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지만, 일을 했는데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없어 대출이나 신용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그 한 예일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여성 취업자의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선택과 소득 결정 요인, 노동 이동과 사회적 보호 실태를 한국노동패널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취업자가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거주 지역이었다. 산업 및 직업 등 일자리 관련 특성은 연령과 거주지역의 통계적 유의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의 여성 취업자가 임금 근로가 아닌 비임금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다. 여성 취업자가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를 선택하는 것에는 연령과 거주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무급가족종사자를 선택하는 데는 혼인상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와 배우자 월소득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선택에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월평균 생활비는 자영업자의 선택확률을 높이고 무급가족종사자의 선택 확률을 낮췄고, 배우자의 월소득은 자영업자의 선택확률을 낮추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선택

확률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임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근로형태별로 지원수단 및 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무조건분위회귀 분석을 통해 임금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의 차이를 밝힌 결과,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격차가 저소득층에서는 음(-)의 수준이고, 고소득층에서는 양(+)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기여분은 가구 내 다른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때, 남성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수준은 남성 자신의 노동 시간 이상으로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여성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개인의 비임금근로 유형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존재하는 가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족력과 직업력이 여성의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진입 및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했다. 선행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결혼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자영업으로의 이행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무급가족종사로 진입하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혼 여성에게 자영업 부문은 여성이 임금근로 대신 선택하는 경제 활동임을 의미한다. 또한 출산 시기나 미성년 자녀의 존재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임금 근로자로서의 경력은 여성이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닌 자영업자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이전부터 축적한 상용직 경력은 자영업을 그만 둔 여성이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최근의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와 특성 변화와 근로실태는 여성 비임금 근로자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배우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족형 자영업이 경제 위기에 타격을 입을 경우 가족 전체가 빈곤에 빠질 위험이 크다. 반면 여성 자영업자는 최근 고학력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약진하고 있다. 배우자로서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

업주보다 더 오래 일을 하고 있어 단순히 가족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 이상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여성 비임금 근로자는 남성보다 현재 일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사업의 부진함을 이유로 현재 일자리를 그만 두고 싶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지난 1년 이내 이직자 가운데서도 남성보다 여성 비임금 근로자는 규모 대비 이탈자 수가 많아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남성보다 더 컸다. 일용 근로를 제외하면 대체로 임금근로자보다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사람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 자영업자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남성 자영업자보다 국민연금 가입 비중이 훨씬 낮았다. 임의 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에서 여성 자영업자가 남성에 비해 가입 확률이 낮다는 것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임의 가입일 경우 상당수 여성은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배우자 여성이다. 남성의 경우 미혼 자녀로서 무급가족일을 하고 있지만 부모의 가족 사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무급가족종사자 보호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거의 같은 수준의 시간과 기간을 무급가족종사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같은 수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지위 보장과 보호 필요성은 존재한다. 자영업자를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과 체계 속에서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지 않지만 가족 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적 검토 사항

여성 자영업 노동시장에 대한 보호는 ‘자영업’과 ‘여성노동’이라고 하는 취약한 두 개 범주의 교집합임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정책적 대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성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정책 핵심은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인데, 여성 취업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무급가족종사자나 자영업자로 구분되는 특수고용형태 여성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여성관련 법제 규율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대부분 여성의 노동이 공식적인 노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적 영역 또는 법 적용이 원칙 배제되는 영세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 매우 차별적이며, 불평등한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여성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검토를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사 과정에서의 비임금근로의 결정유형, 가구 구성 및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분포 등이 보다 면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이러한 전반적인 여성 노동시장 정책과 별도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무급가족종사자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 이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계약을 통하지 않고도 무급가족종사자가 공식적으로 경제 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무급가족종사자가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의미에서 공식적 고용 관계에 놓인 지위를 획득하고 그에 기반한 사회보험 가입이나 혜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 이력과 취업 활동에 기반하여 잠재적 생산 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에 기반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거나 임금의 손실을 평가하는 경제 및 복지 제도에서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육 정책은 맞벌이에게 가점을 부여해 보육 시설 입소에서 우선 순위를 배정받을 수 있지만, 무급가족종사자 여성은 취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증

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재해나 사망 시 각종 민간보험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생명 손실의 가치를 산정하고 보상하고 있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업 주부에 대해서는 일용 노동자의 일당을 기준으로 손실의 화폐 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인 취업 지위가 없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재해나 사망 시 발생하는 손실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무급가족종사자 등록 시스템은 필요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무급가족종사자를 비공식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금 근로로 유도하여 임금 근로자가 갖는 사회적 보호 혜택을 누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무급가족종사자를 임금 근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보험 가입 비용을 초래하지만 사회보험 가입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던 가족 구성원을 임금 근로자로 고용 형태를 변경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예외 적용 사항이 많아 사업주에게 노무관리 비용을 크게 유발하지 않지만, 실업급여나 모성보호 제도 혜택 등 실직과 출산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졌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임금 근로 전환을 촉진하여 가족형 자영업의 경영 악화와 빈곤 발생 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급가족종사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무급가족종사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임금 근로의 제한성과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8시간 미만 무급종사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하고 실제 일한 시간을 조사하지 않는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18시간 미만 기준없이 1시간만 일해도 근로자로 정의하는 것을 고려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일은 통계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대표적인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무급가족종사자 규모와 사회적 보호 실태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민정·김은지·박수범·권소영·윤자영·김근주(2018),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 일자리 정책 실행방안연구: 모성보호제도」,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강희우(2019), 「여성기업 지원 정책 개선방향」, 『조세재정 브리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경아(2016),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 및 재취업 방안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
- 김두진(20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평가 - 경쟁법적 관점으로부터 -」, 『법학논총』, 제31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선우(2016), 「여성 창업을 위한 정책 제언」, 『Entrepreneurship Korea』,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용탁·정혜영·최은희·함창모(2018), 『지역장애인 고용정책 및 노동시장 분석 - 충청북도의 지역 자원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보고서.
- 김우영(2013), 「근로자의 이질성과 자영업 선택에 관한 실증분석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의 진입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6(2), 한국노동경제학회.
- 김유경(2013), 「생애단계별 여성의 취업행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진(2016),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노동 및 건강 실태와 국내외 법제도 검토 및 정책제언」,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토론회』,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
- 김주영(2010),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 『월간 노동리뷰』, 8

- 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남기정(2019), 「여성창업기업과 남성창업기업의 생존특성 비교연구」, 『여성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혜명(2018), 「청년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집』,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류정희·강희정·이소영·이주연(2018),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류재우·최호영(2000), 「자영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노동경제논집』, 23(1), 한국노동경제학회.
- 문유경·전기택·배호중·김근태(2017),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민경원(2014), 「여성기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제16권 제1호, 경기연구원.
- 박희석(2011), 「서울시 자영업 특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 『정책리포트』, 서울연구원.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2017), 『201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제언집』,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성지미(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1), 한국노동경제학회.
- 성지미·안주엽(2004), 「자영업과 가교일자리」, 『노동경제논집』, 27(2), 한국노동경제학회.
- 신동주·최배근(2018),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 증가의 원인 - 탈공업화와 영세자영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5호, 한국산업경제학회.
- 안중순(2016), 「Self-Employed Women's Social Risks and Difference in Risk Responses by Labor Market Status」, 『여성경제연구』, 제13집 제2호, 한국여성경제학회.
- 안주엽(2000),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특별호 23, 한국노동경제학회.
- 오종은(201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 - 무급가족

- 종사자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오종은·양재성(2009), 『무급가족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연구』,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 위평량(2019),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 - 개혁은 집권 1년 내 완수해야 vs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다」,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연구소.
- 유경아·김영란·박창수·이태용(2018), 「고용상태 변화와 고용지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한국복지패널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호, 한국산학기술학회.
- 유재홍·유호석·이종주(2019),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 인력의 근로 실태연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이민정(2017), 「충남 소상공인 생존을 향상을 위한 연구」,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충남연구원.
- 이병희(2018), 「근로빈곤 특성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향」,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2018),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월간노동리뷰』, 2018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장시복(2019),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권 제1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 장지연·김근주·권혁·오은진·성상현(2017),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발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성미(2018), 「2018년 여성 노동시장 평가와 특징」,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성·장지연(2001),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특성과 생애경력」, 『성곡논총』, 32(3), 성곡학술문화재단.
- 조홍주(2018), 「보조금이 저신용 자영업자 사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115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진미정(2015), 「기혼 취업여성의 종사장지위에 따른 일 가족 전이 -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가정관리학회.

최은영(2016), 「여성의 연령별 취업형태, 직업 및 소득 수준」, 『아시아여성연구』, 55(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최청락·강희영·이정수(2014), 『부산지역 여성창업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Retrieved May 27, 2019

한국정부학회 편집부(2014), 「지역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Bonneuil, Noël and Younga Kim(2017), “Precarious employment among South Korean women: Is inequality changing with tim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28(1):20-40. (doi: 10.1177/1035304617690482)

◆ 執筆陣

-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고영우(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영아(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여성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정책적 개선 방안

- | | |
|-----------|---|
| ▪ 발행연월일 | 2019년 12월 26일 인쇄
2019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배 규 식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 · 인쇄 | 미래기획 (044) 866-6331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19 정가 7,000원

ISBN 979-11-260-0390-7